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정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 | 박희진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연구책임자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희진(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지원

강영은(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KINU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KINU 연구총서 23-18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정은미, 박희진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9-11-6589-153-4 93340
가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	9
----	---

Chapter I

서론 정은미	19
1. 연구 목적	21
2. 연구 방법	26

Chapter II

북한의 시대별 농업정책 비교 정은미	31
1. 주체농법과 이후 농업정책의 변용	33
2.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비교	38

Chapter III

김정은 집권 10년 농업정책의 전개 정은미	53
1. 2012년~2020년: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증대	55
2. 2021년~2023년: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 발전의 연계	60

Chapter IV

김정은 정권의 농장 운영과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 | 정은미 – 73

1. 농장 운영의 개혁과 후퇴 ————— 75
2. 농업 생산구조의 전환 ————— 107
3. 농업생산의 대중동원 방식의 변화 ————— 122

Chapter V

농촌발전의 본보기 정책 | 박희진 ————— 135

1. 농촌 본보기의 형성과 구분 ————— 140
2. 김일성 정권의 주체농법과 청산(리) ————— 145
3. 김정일 정권의 식량난과 대흥단(군) ————— 156
4. 김정은 정권의 농촌 진흥과 삼지연(시) ————— 168

Chapter VI

결 론 | 정은미 ————— 203

1. 요약 ————— 205
2. 정책적 함의 ————— 210

참고문헌 ————— 21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21

〈표 I -1〉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현황	29
〈표 II -1〉 시대별 농업정책의 비교	36
〈표 II -2〉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시대적 배경 비교	39
〈표 II -3〉 농촌테제의 기본 원칙과 새 농촌강령의 목표	42
〈표 II -4〉 농촌테제의 기본 과업과 농촌혁명강령의 중점 과업	44
〈표 II -5〉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특혜조치	46
〈표 III -1〉 2012년~2020년 시기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	57
〈표 III -2〉 2021년~2023년 시기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내용	61
〈표 III -3〉 협동농장의 알곡 구성	64
〈표 III -4〉 북한 식량생산량 중 수확 후 손실분 추정	69
〈표 IV -1〉 협동농장의 수입항목종합표	82
〈표 IV -2〉 포전별 알곡생산 및 수매계획 양식	92
〈표 IV -3〉 사례1(양강도 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세대)의 연소득	100
〈표 IV -4〉 사례2(황해북도 협동농장 배급세대)의 농가 연소득	102
〈표 IV -5〉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성분량) 비교	111
〈표 IV -6〉 시기별 농촌 새살림집 공급 현황	127
〈표 V -1〉 정권별 본보기의 구분	144
〈표 V -2〉 김일성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전개과정	148
〈표 V -3〉 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전개과정	160

〈그림 Ⅲ-1〉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59
〈그림 Ⅳ-1〉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곡물 수입 추이	110
〈그림 Ⅳ-2〉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비료 수입 추이	112
〈그림 Ⅳ-3〉 중평남새온실농장의 준공 전후 비교	117
〈그림 Ⅳ-4〉 연포온실농장 준공 전후의 전경	119
〈그림 Ⅳ-5〉 강동온실농장 착공 전 부지 사진과 조감도	120
〈그림 Ⅳ-6〉 지역별 농촌 새살림집 공급 규모 비교	127
〈그림 Ⅴ-1〉 청산리 본보기의 위치와 규모	150
〈그림 Ⅴ-2〉 청산리 본보기의 상징인 명석	150
〈그림 Ⅴ-3〉 청산리 본보기의 성과와 결산분배	151
〈그림 Ⅴ-4〉 청산리 본보기의 이미지 연출	153
〈그림 Ⅴ-5〉 범안리·미곡리·동봉리 농촌 본보기	160
〈그림 Ⅴ-6〉 대흥단군 본보기의 위치	162
〈그림 Ⅴ-7〉 대흥단군 본보기의 감자음식 품평회	166
〈그림 Ⅴ-8〉 전국의 감자요리 경연대회	167
〈그림 Ⅴ-9〉 대흥단군 본보기의 기술혁신 메커니즘	167
〈그림 Ⅴ-10〉 은파군(상), 금천군(하) 수해복구 전후	170
〈그림 Ⅴ-11〉 삼지연시 본보기의 도시건설총계획	179
〈그림 Ⅴ-12〉 농촌진흥의 표준, 중흥마을 본보기	183
〈그림 Ⅴ-13〉 농촌진흥의 표준, 포태마을 본보기	184
〈그림 Ⅴ-14〉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본보기	191
〈그림 Ⅴ-15〉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과 본보기 형성단위	192
〈그림 Ⅴ-16〉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 변화	195
〈그림 Ⅴ-17〉 자재와 노동력 절약형 방식상학	199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과 같은 해 12월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농촌혁명 강령’은 김정은 정권의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완전히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은 김일성 시대에 창안된 주체농법을 계승, 심화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체농법에 기대고 있다.

김일성처럼 김정은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안정성 획득은 물론 식량 자급자족을 성공한 지도자라는 신화의 서사를 구축하고자 식량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농업정책들의 뿌리는 언제나 김일성 시대의 정책들과 연결된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 담당책임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2014년은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 5대 요소’(농업발전 5대 요소: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의 발표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인 2019년에 발표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적 결정이라고 자평하는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역시 구조적으로 1964년 농촌테제과 대동소이하다. 최근 2년 동안 양적으로 눈에 띄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도 1964년 농촌테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중에서 선대와 차별되는 것은 주식 작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밀·보리 재배면적으로 확대하는 알곡생산정책의 전환이다.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옥수수만큼 밀, 보리는 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다수확 알곡 작물로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옥수수에 비해 비료의 소요량이 적어 비료 생산역량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지구 온난화의 진행으로 북한 전역에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넷째,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농업 및 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은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첫째는 핵무력 고도화라는 국방 정책의 실행에 따른 대외적 압박과 제재에 맞서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권의 안정과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성공의 서사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수령의 신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선대 정권과 차별되는 점은 법제화이다. 농업 및 농촌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당 차원에서 결정되면, 곧이어 당의 결정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속히 입법 또는 법률 개정을 거침으로써 법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하면서도 정상국가의 보편적 통치 행위의 형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보기 사업은 당과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 관철·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 활용하는 통치 방법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정권

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다수확 생산실적을 거둔 협동농장이 대표적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면,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사회주의강행군 정신에 따라 자립적 생산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과학기술적 개진 현대화와 특색 있는 농촌공간의 조성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협동농장은 북한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가급 본보기이다. 김정일 정권은 감자를 주식화하여 부족한 식량의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며, 농촌 본보기로 양강도 대흥단군이 떠올랐다. 그 밖에도 김정일 정권에서 농촌 본보기 사업은 본보기 단위가 기존의 생산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대되었으며, 살림집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까지 포함한 농촌 본보기 조성을 시도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처음으로 미곡협동농장을 통해 사회주의 선경의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농촌마을 단위의 본보기 조성을 시도했다. 김정일 정권에서 시도됐던 마을 단위의 본보기 사업은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삼지연시 본보기와 유사하다.

농촌마을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면시켜야 한다’라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총 목표는 김일성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정권이 지향했던 과학기술적 혁신을 김정은 정권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김일성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 방침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농사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결합되어 농촌 본보기의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가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발전전략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자립형 본보기로는 전변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농업생산계획 달성의 압박에 시달리는 간부들이 다수화단위에 역량을 집중하는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농촌지도의 편파성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실태는 농촌 본보기 사업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를 지방 단위들이 따라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크다. 더욱이 김일성 시대의 소규모 본보기와 달리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급 대규모이고 막대한 재원과 인력,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북한 당국은 올해 이례적으로 농사 작황이 좋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9월에 개최된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풍작을 이룬 농업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에 비해 밀, 보리농사가 잘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와 비료 수입 등 외생적 요인들이 지난해보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의 농업 성과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는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2023년 경제분야 12개의 중점 목표 중 첫 번째 순위에 알곡생산이 결정되고, 북한 당국 스스로 말한 것처럼 농촌에 전례 없는 엄청난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노동력 지원만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밥 먹는” 모든 인민대중의 책임에 돌려졌다.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이후 농사와 농촌건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노동력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대중운동과 애국운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자원 동원으로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식량을 도시가 징발해가는 내핍의 순환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과 부유하고 발전한 농촌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제어: 식량, 농업정책, 농촌테제, 발전전략, 북한



Kim Jong-un Regime's Rural Development Strategy

Jeong, Eun Mee & Park, Hee Jin

The socialist comprehensive development policy adopted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and the 'Socialist Rural Revolution Platform' announced at the 4th Party Plenary Meeting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aim to solve the agricultural and rural problems of the Kim Jong-un regime. I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 The Kim Jong-un regime's rural development strategy cannot be said to be completely new or original. Like the Kim Jong-il regime, the Kim Jong-un regime's agricultural policy emphasizes that it is a successor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Juche farming method created during the Kim Il-sung era, thereby relying not only on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but also responsibility for the policy results on the Juche farming method.

Like Kim Il-sung, Kim Jong-un is making efforts to increase food production in order to build a mythical narrative that he is a leader who has succeeded in achieving food self-sufficiency as well as achieving stability in the regime by demonstrating the ability

to solve food problems on his own. However, the roots of various agricultural policies attempted by Kim Jong-un's regime are always connected to the policies of the Kim Il-sung era.

2014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nnouncement of the rural thesis when the farm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paddy field responsibility system, which can be considered agricultural reform measures of the Kim Jong-un regime, were introduced at the national level. In addition, Kim Jong-un's agricultural policy, '5 Elemen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ed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Finding New Land, Increased Production in Low-Yield Areas, and Strengthening Party Leadership) was announced on the 55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Rural Thesis. It was announced in 2019. The 'New Era Rural Revolutionary Platform' adopted at the 4th Party Plenary Meeting at the end of December 2021, which is considered a groundbreaking and speculative decision for rural development, is also structurally similar to the 1964 Rural Thesis. The rural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been quantitatively noticeable over the past two years, was also one of the important projects included in the 1964 rural thesis.

Among the agricultural policies pursued by the Kim Jong-un regime, what is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is the shift in grain production policy, which reduces the cultivation area of corn and expands the cultivation area of wheat and barley. The background to changing the grain production structure is that, firstly, wheat and barley can contribute to increased food production as high-yield grain crops that can be grown in the field as well as corn, and secondly, the

weakness of fertilizer production capacity is reduced as less fertilizer is required than corn. Thirdly, with the progress of global warming, cultivation has become possible throughout North Korea, and fourthly, above all, wheat consumption is increasing in the diet of North Korean residents.

The Kim Jong-un regime's sharp turn to prioritize agricultural and rural issues starting from its 10th year in power was to first demonstrate the health of the system by resolving the food problem, in the face of external pressure and sanction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upgrading nuclear forces. Secondly, it aims to secur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high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irdly, the purpose is to ultimately build the myth of the leader based on the narrative of success of food self-sufficiency.

What differentiates the Kim Jong-un regime's rural development strategy from previous regimes is its legalization. When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issues are decided at the party level, the party's decisions tend to strengthen legal governance by quickly enacting legislation or revising laws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is suggests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differentiating itself from previous regimes while pursuing the formality of the universal governance of a normal country.

The overall goal of the Kim Jong-un regime's rural development strategy is the same as that of the Kim Il-sung regime, which is to 'transform rural villages into wealthy and cultural socialist rural villages with modern technology.' In the rural model project, we

are also trying to differentiate ourselves by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regimes. The Kim Jong-un regime is also emphasizing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ursued by the Kim Jong-il regime, and the rural construction policy pursued by the Kim Il-sung regime is being promoted in an almost similar manner by the Kim Jong-un regime. In addition, by combining scientific farming and the people-first principle, the enlargement, base, and practicalization of rural models are being pursued.

North Korea's example of rural areas is linked to the legitimacy of agricultural policy. The state provides a lot of funds, technology, and labor to make rural models successful. Rural models created through various support policies are bound to be highly dependent on the state. Therefore,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transforming it into a self-reliant example capable of s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ursued by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The party leadership is criticizing the fact that executives under pressure to achiev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lan are concentrating their capabilities on high-yield units as biased in rural guidance, but such a situation is fundamentally related to the harmful effects of the rural model project. There are clearly significant limitations in local units following the rural model created with activ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Moreover, unlike the small-scale model of the Kim Il-sung era, the rural model of the Kim Jong-un regime is large-scale at the national level and has a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results without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and high-leve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upport.

Grain production was selected as the first priority among 12 economic goals for 2023, and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mselves put it, “an unprecedented amount of support” was provided to rural areas this year. Not only the support of labor, but also the support of all materials needed for farming was entirely the responsibility of all the “eating” masses of the people. After the 7th Party Plenary Meeting, farming and rural construc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mass and patriotic movements that mobilized all labor and materials from top to bottom. However, this method cannot be said to be the essence of the Kim Jong-un regime’s rural development strategy, which pursues sustainable and st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Keywords: Food, Agricultural Policy, Rural Thesis, Development Strategy, North Korea

I. 서론

정은미(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목적

지금 북한은 농업에 총력전을 펼치며 사회의 모든 역량을 농사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에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이 채택된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 농촌문제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당 전원회의(제8기 제6차 &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농업과 농촌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졌다.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2023년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농업부문이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 연속 세 차례의 당 전원회의 결과는 김정은 정권에서 농업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023년 경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12개의 지표들(‘12개 중요고지’^{1/}) 가운데 알곡이 첫 번째 지표로 제시되었다.^{2/} 2023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국가예산보고에서 고정범 재정상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채택 이후 2022년 농업부문에

1/ 경제발전 12개 핵심지표(12개의 중요고지)는 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색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이다.

2/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로동신문』, 2023.1.11.

지출된 예산 규모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의 1.6%를 차지하였고, 2023년에는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 현대화 예산을 전년 대비 114.7%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 구조만 놓고 보아도 현재 김정은 정권이 식량문제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농사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수단을 넘어 국가존립, 국력강화, 체제보위의 문제로 격상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선전기관은 주민들에게 “쌀이 국력”이고 “쌀만 많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꺾이지 않으며”, “농업전선이 혁명보위의 최전방”이라는 인식을 고조시키고 있다.^{3/}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하 ‘농촌혁명강령’^{4/})은 1964년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에 버금가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으로 견주되고 있다. 농촌혁명강령 채택 이후 강령의 실행력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가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더불어 법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2년(2022년~2023년) 동안 「시, 군 건설세멘트보장법」, 「허풍방지법」,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관개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고, 「농업법」과 「농장법」이 개정되었다.

3/ “자신감과 용기를 안고 백배로 분투하자,” 『로동신문』, 2023.5.2.

4/ 제8기 제4차 당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1년 후에 개최된 제8기 제6차 당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4년에 김일성이 발표한 ‘농촌테제’가 당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으로 불렸던 점을 고려했을 때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와 차별을 두기 위해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농업일군협의회(1973년 1월) 연설에서 “농촌테제는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고 채택된 우리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성,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월 17일, 22~24일),”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17.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중복을 피하고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강령을 ‘농촌혁명강령’으로 표기함.

흥미로운 것은 농촌혁명강령을 채택한 김정은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이 1964년 김일성이 농촌테제를 발표할 때 당시 북한이 처했던 대내외적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록 김정일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석 범위가 불가피하게 김일성 시대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농업부문의 주요한 정책들을 다룰 때 북한 문헌은 일관되게 그 정책들이 선대 정권의 정책들을 “계승 또는 심화발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의 5대 요소’는 김일성 시대의 주체농법과 김정일 시대의 농업혁명방침을 계승, 심화발전한 것이고, 김정은 정권이 새로 채택한 농촌혁명강령은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를 “심화발전”한 것이라는 식의 논리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농업 및 농촌 발전정책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된 이후 농업부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식량 자급의 상징 작물이었던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대신 2022년부터는 주식 작물로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급진적인 농업정책이 실행되었다. 또 2022년 8월 이후 노동신문에서 협동농장의 용어가 사라지고 ‘농장’ 용어만이 단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배경과 의도는 불분명하고 논쟁적이다. 그 밖에도 법제와 현재의 정책 실행 사이에 일종의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 경제관리방법을 규정한 조문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가 삭제되고 사회주의기업책임제로 변경되었는데,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농업지도체제’가 채택되었다. 또 그동안 알곡 증대 효

과가 있다고 선전되던 포전담당책임제의 용어가 2023년 2월 이후 더 이상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논쟁적인 이슈들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정보의 부족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2021년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은 급격하게 경로가 변경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발전전략의 변침(變針)의 이유와 맥락을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한 매체를 보면 밀, 보리농사와 농촌살림집 건설이 농업부문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처럼 이슈의 비중이 크다. 농촌혁명강령은 기존의 쌀과 옥수수 위주의 알곡생산구조를 쌀과 밀, 보리 위주로 전환하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밀, 보리농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해 체제의 건재를 보여주려는 정권의 의지 때문에 올해 농업부문에 유례없는 수준의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5/} “밥먹는 사람은 누구나” 농사를 돕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농촌혁명강령의 목표들 중 하나인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은 농촌살림집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 농촌살림집은 다수확 경쟁운동의 충성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면서 본래 목적과 멀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농촌혁명강령이 본질적으로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인지 아니면 식량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과제이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수많은 본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농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기를 통해 자신

5/ 제8기 제8차 당 전원회의는 상반기년 사업 총화보고에서 올해 농업부문에서 “영농물자 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6.19.

이 지향하는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간부와 대중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식의 ‘본보기’ 정치는 김정은 통치술의 한 부분이다. 흥미롭게도 김정은은 자기 시대의 본보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선대의 본보기를 종종 부정한다. 예를 들어, 삼지연시의 농촌마을과 중평온실농장을 농촌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해 선대 시대의 본보기였던 미곡협동농장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와 이전 정권의 농촌 본보기를 비교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농촌발전전략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설명하려는 이 연구의 중심 부분이 될 것이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와 동년 12월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에 전개된 정책들은 매우 상반된 궤적을 나타낸다. 이러한 급변침의 맥락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농촌발전전략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 사상의식이 높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농민, 문명화되고 현대적인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전개된 정책들과 변화들은 이 목표를 향해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를 평가,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가 도달하려고 하는 종착점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

이 연구에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자료가 분석에 주로 활용되었다. 정기간행물로는 《로동신문》, 《근로자》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농업부문과 관련된 단행본들을 참고하였다. 《로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개최된 당의 중요 회의들(당대회, 당전원회의 등)과 신년사를 통해 농업부문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였다. 《근로자》는 동 시기에 농업부문의 당 간부들이 기고한 글들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정책이 어떻게 수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밖에 농업부문과 관련한 김일성의 “노작”, 연설, 담화 등을 발췌하여 묶어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단행본들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1994)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4: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1999)이 해당된다. 이 단행본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전개된 농업정책 및 2021년 12월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비교, 분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제5장 농촌발전의 본보기 연구에 『조선중앙년감』(1956~2012년)을 참조하여 김일성·김정일 시기 농업정책, 농업분야에서의 성과, 모범단위 및 다수확 협동농장, 축산, 가금, 남새, 과수협동농장의 본보기 단위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다. 김일성의 “노작” 원문은 해당 시기의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것들을 참고하였다. 김정은 시기의 자료는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의 온라인 기사 및 화보 자료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활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농업부문과 관련한 법제 변화를 중요하게 다룬다. 법제 변화를 추적, 분석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북한법령집』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발간된 『북한법령집』은 김정은 집권 후 2012년~2022년 기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농업 관련 법률들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2009년에 제정된 「농장법」은 총 9차례 개정되었는데, 9차례 모두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이 얼마나 조정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조문들을 비교함으로써 변화한 정책의 의도와 방향성, 정책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이 연구는 사진과 이미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다수의 본보기 농촌이 조성되고, 기존의 비행장들이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변경되는 등 주목할 만한 공간적 변화들이 있었다. 위성사진의 활용은 북한의 주요 농촌지역의 공간 구성 및 배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2021년 말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채택 이후 주요 성과로 선전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 및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변화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 자료를 분석할 때 북한 문헌의 행간에서는 읽을 수 없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북한의 매체나 문헌을 통해서 선전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성과들이 대체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요한 공식 회의체에서 결정되어 채택된 주요 정책들이 얼마 후에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과정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 현지에서 농업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며,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 또는 대응하고 있는가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된 농업정책, 특히 농장 운영 실태와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행, 농장원 및 농가 세대의 소득 구조, 본보기 농촌 조성 실태, 농촌 주민의 생활상과 농민의 인식 등을 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의 농촌 본보기 연구를 위해서 본보기 농장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3명을 인터뷰했다. 사례4는 김일성 시기에 청산리 협동농장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사례3은 김정일 시기에 자강도 대흥단군 농장원 출신이며, 사례1은 김정은 시기 양강도 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장원 출신이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는 통일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해 승인받았으며(승인번호 KINU IRB-2023-01-01-HR-02),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총 4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북한의 농장 또는 농촌에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간략한 현황은 <표 I-1>과 같다.

표 1-1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연구참여자 현황

사례	성	연령	거주지	직업	탈북연도	면접일
1	여	50대	양강도 해산시	농장원	2019	2023-04-05 2023-04-12
2	여	60대	황해북도 봉천군	인민반장	2019	2023-04-07
3	여	40대	양강도 대흥단군	농장원	2003	2023-05-19
4	남	50대	남포시	외화벌이 직원	2013	2023-05-31

II. 북한의 시대별 농업정책 비교

정은미(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북한의 시대별 농업정책 비교

1. 주체농법과 이후 농업정책의 변용

김정은 정권에서 농업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언제나 선대의 주체농법과 농업혁명방침을 계승, 심화 발전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한편으로는 당대 정책의 정당성을 선대 정권의 정통성에 기댈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당대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선대 정권과 분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에서 실행한 농업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농업발전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시대의 업적으로 주체농법의 창조를, 김정일 시대의 업적으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 제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6/} 그리고 2019년 12월 선대 정권들의 농업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이 ‘농업발전 5대 요소’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2019년 12월 말 노동신문은 이를 연속 ‘농업발전 5대 요소’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다.^{7/}

6/ 박영호,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치신 현명한 령도,” 『근로자』, 제6호 (2014), p. 20.

7/ 하나는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9.12.29.)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당의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19.12.30.)로 두 기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2019년은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1964년) 55주년인 동시에 김정은의 “노작”(「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4) 발표 5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에서 2019년에는 농사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작황이었다고 북한 스스로 밝힌 것처럼,^{8/}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기사(2019년 12월 29일자)는 당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5대 요소를 제시하였다고 하며, 그것은 바로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이다. 이것은 ... 가까운 앞날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근본지침이다.”라고 설명하였다.^{9/} 두 번째 기사(2019년 12월 30일자)는 농업발전 5대 요소의 상세내용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의 기사는 ‘농업발전 5대 요소’가 갖는 사상적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첫 번째 정당성은 김일성의 주체농법과 김정일의 농업혁명방침을 계승, 심화발전시킨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선대의 두 정책은 알곡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한다는 뜻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이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과학농법, 집약농법”이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농업혁명방침은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토지정리와 두벌농사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제 당은 두

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p. 15.

9/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9.12.29.

수령들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물려준 “주체농법과 농업혁명방침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였다”라고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시대의 농업혁명방침의 구성 요소가 정권 초기와 달라진 점이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 시대의 농업혁명방침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종자혁명방침, 농업과학기술혁명방침 등”이라고 설명했다.^{10/} 하지만 2019년에는 김정일 시대의 농업혁명방침이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토지정리와 두벌농사방침”으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알곡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체농법의 제1원칙인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 하에서의 작물과 품종 배치”라는 방침을 김정은 시대에 계승하여 실현하는 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2019년 당의 ‘농업발전 5대 요소’를 발표할 때 선대 정권의 농업혁명방침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석지 개간, 토지정리 등을 통해 농업 경지의 면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땅찾기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얻기 위해 선대 정권의 농업혁명방침에 토지정리를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10/ 박영호,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치신 현명한 령도,” p. 20.

표 II-1 시대별 농업정책의 비교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주체농법	농업혁명방침		농업발전 5대 요소
• 과학농법 (적지적작·적기적작, 종자혁명, 과학적 시비) • 집약농법 (토지개량, 지력 제고, 포기농사)	• 적지적작, 적기적작 • 감자농사혁명 • 두벌농사 • 종자혁명 • 농업과학기술 혁명	• 종자혁명 • 감자농사혁명 • 두벌농사 • 토지정리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새땅찾기 • 저수확지 증산 • 당적지지의 강화

출처: 김일성,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27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박영호,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신 현명한 령도,” 『근로자』, 제6호 (2014);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9.12.29.

농업발전 5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종자혁명은 “수확고가 높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며 생육기일이 짧고 각종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 품종들을 많이 육종하는 것”이 핵심이다.^{11/} 전력 부족으로 비료 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료의 소비량이 적은 종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인 과학농사는 “농사의 과학화, 수자화, 기계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품종배치, 비배관리, 토지이용률과 농사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현대과학기술성과를 적극 응용하여 종자, 물, 에너지, 자재, 노동력을 적게 쓰면서 수확고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능이 높은 여러 가지 비료와 농약과 같은 영농제품들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연구,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을 실속있게 하고, 능률적이고 다용도화 된 노력절약형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2/}

11/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당의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19.12.30.

12/ 위의 기사.

세 번째 요소인 새땅찾기는 알곡생산면적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논벼재배면적과 강냉이 재배면적을 무조건 확보하는 방향에서 새땅을 우선적으로 찾고, 짧은 기간에 1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10만 정보의 새땅찾기 그리고 유실된 농경지의 원상복구, 토지정리를 통해 모든 지방들의 패기논밭 정리, 비경지에 농장원 1인당 1,000포기 이상의 알곡작물을 더 심기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13/}

네 번째 요소는 저수확지(비탈밭, 모래, 자갈, 석비레밭 등)에서 알곡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다섯 번째 요소인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는 알곡을 정보당 10톤 이상 내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다수확단위와 농장원대열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14/15/}

노동신문은 당의 ‘농업발전의 5대요소’가 “최단기간 내에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힌” 것이라며,^{16/}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2019년 12월 말에 갑자기 등장한 ‘농업발전의 5대 요소’는 이후로 더 이상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당의 주요 회의들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된 「시, 군발전법」 제32조에 명문화됨으로써 ‘농업발전의 5대 요소’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7/}

13/ 위의 기사.

14/ 위의 기사.

15/ 이 다수확운동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된 「시, 군발전법」 제35조 (다수확운동)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알곡을 정보당 10t 이상 내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단위와 농장원대열을 늘여나가야 한다.”로 명문화되었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 132.

16/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9.12.29.

17/ 「시, 군발전법」 제32조 (농업발전의 5대요소와 식량문제해결)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 해당 기관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맞게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농업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늘리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p. 131.

2.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비교

가. 시대적 배경

제8기 제4차 당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심화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8/} 따라서 농촌혁명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되는 농촌테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이 채택되게 된 시대적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 <표 II-2>에 정리했듯, 대외환경, 안보환경, 경제환경, 경제발전계획, 결정기구 등에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농촌테제가 채택되기 전인 1960년대 초는 중소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주체노선을 택함으로써 자력갱생의 길을 가야하던 시기였다. 남한에서는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안보 차원에서도 불안한 시기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앞 시기에 실시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1957~1961년)의 기본방향이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균형발전을 초래했고 특히,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크게 뒤떨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에 제4차 당대회가 개최되었고, 경제발전 7개년계획(1961~1967년)이 채택되었다. 불안한 대외관계와 남북관계 속에서 7개년 계획의 목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었다. 또한 1958년 농업협동화 완성 이후 증대되던 농업생산력은 1960년대 들어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1964년 농촌테제가 발표되었다.

농촌혁명강령이 채택되기까지의 시대적 상황은 농촌테제의 시대적 상황과 상당히 닮은 꼴이다. 우선 대외적 환경을 보면 미중 대립

^{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2017년 말 핵보유국 선언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대외적 봉쇄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에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적극 나섰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노선으로 선회하였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보건위기를 맞아 북한은 국경봉쇄를 전격 단행하였다. 무역중단 및 비상방역체제의 장기화로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고 식량생산도 위기에 처했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5개년계획(2021~2025년)을 채택하였다.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낙후한 농촌과 지방의 발전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2021년 6월에 개최된 제8기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라며 식량부족을 인정했다.¹⁹⁾ 그리고 전 당적, 전 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12월 말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농촌혁명강령이 채택되었다.

표 II-2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시대적 배경 비교

구분	농촌테제(1964년)	농촌혁명강령(2021년)
대외환경	중소 대립, 주체노선	미중 대립, 대북 제재
안보환경	4대 군사노선	핵무력 보유
경제환경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자력갱생·자급자족
결정기구	제4기 제8차 당 전원회의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
경제발전계획	7개년계획(1961~1967년)	5개년계획(2021~2025년)

출처: 저자 작성.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1.6.16.

나. 목표와 실천 방법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농촌사업의 세 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도시의 농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칙은 농촌정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적 방법으로 접근시키고,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여 점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는 것이다.^{20/} 이 세 개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농촌테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포괄하는 패키지 개혁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김정은 시대의 농촌혁명강령은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 중심의 농업정책을 탈피하여 농민, 농업, 농촌문제를 동시에 개혁하려 한다는 점에서 농촌테제와 같은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영훈 외(2023)는 북한이 기존에는 식량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는데, 농촌혁명강령은 일차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정비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정책으로 확대하였다고 평가했다.^{21/} 서정배(2023)는 농촌혁명강령이 근본적인 농촌발전을 위한 전환적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북한 경제의 3가지 악재(제재, 재해, 코로나19) 속에서 농업생산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부문의 잉여 징발(수매량 증대)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진정

20/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50.

21/ 이영훈 외,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 18.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농촌발전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22/} 송현진(2022)은 농촌혁명강령을 전체 지역의 균등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으로 해석하였다.^{23/}

그런데 농촌혁명강령은 왜 정책이 아닌 ‘전략’일까? 북한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농촌문제는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기 때문에 새로운 농촌건설은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24/} 전략은 조직이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계획 또는 접근방식이고, 정책은 조직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정 규칙 또는 지침이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략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전략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 계획이나 방법이고, 정책은 목표 실현에 필요한 수단(과제나 과업)이다^{25/}. 이상에서 설명한 전략과 정책의 차이를 고려하면, 농촌혁명강령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 하에서 “모든 농촌들을 주체사상화하고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농촌발전전략으로 규정한 것은 합당한 측면이 있다.^{26/}

농촌혁명강령은 농촌발전의 3대 목표로 첫째,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제고시키고, 둘째,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셋째,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변을 제시하였다.^{27/} 세부 내

22/ 서정배, “과거 북한 식량지원 및 농업협력 사업 경험의 교훈과 새로운 모색,”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10.24.).

23/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2호 (2022), p. 154.

2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25/ 김진향, “전략과 정책의 관계,” 『국방과 기술』, 제5권 231호 (1998), p. 23.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27/ 위의 기사.

용을 살펴보면, 농촌혁명강령의 3대 목표는 농촌테제의 첫 번째 기본원칙인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각각 지향하는 목표와 거의 일치한다.

표 II-3 농촌테제의 기본 원칙과 새 농촌강령의 목표

농촌테제의 3대 기본 원칙	농촌혁명강령의 3대 목표
•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와 관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	•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 제고 •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

출처: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을 토대로 저자 표 작성.

목표에 대한 실천방법의 경우 농촌테제는 기본과업을, 농촌혁명강령은 중점 과업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둘은 공통적으로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의 중요성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3대혁명 중에서 사상혁명의 선행 원칙을 내세운 점도 공통점이다.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지식과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보급 학습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을 더 많이 농촌에 파견하는 조치들 역시 추진 방향 측면에서 같다. 다만, 농촌테제에서는 농민의 노동계급화가 목표였다면, 농촌혁명강령에서는 지식형근로자화와 같이 시대적 상황과 요구의 차이로 약간의 변형들이 나타난다.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공업과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투자를 증대하는 동시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기업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의 관여와 통제를 강화하는 농업지도체계(‘새로운 농업지도체계’ & ‘우리식 농업지도체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은 본질적으로 같다.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은 모두 농업생산을 알곡 위주로 하여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지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느냐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농촌테제에서는 알곡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쌀과 옥수수 위주의 알곡생산을 추구했다면, 농촌혁명강령에서는 쌀과 밀·보리 위주의 알곡생산구조의 전환이 중요한 변화로 제시되었다. 알곡작물배치의 전환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영농방법과 영농일정, 그리고 농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그밖에 농촌혁명강령이 농촌테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식량문제’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식량 문제가 알곡 생산과 직결된 것이라면, 먹는 문제는 부식물 생산과 관련이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정책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부식물 생산의 규모화이다. 군 단위급의 축산전문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농촌 리 수준의 대규모 온실농장들을 도처에 건설하며, 현대화된 시설에서 대규모로 버섯을 생산하는 버섯공장을 전국에 설치하는 조치들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전국에 고기, 남새(채소), 버섯의 생산기지 확충 및 생산증대에 집중되어 추진되었다.

표 II-4 농촌테제의 기본 과업과 농촌혁명강령의 중점 과업

농촌테제의 기본 과업	농촌혁명강령의 중점 과업
•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	•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업근로자를 혁명화, 주체사상화 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
• 농촌기술혁명: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집약농법	•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 근로자로 개조,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보급사업, 농촌에 대학생들 배치 • 농업생산 발전 방침: 과학농사제일주의, 벼와 밀 위주의 알곡생산구조 전환, 콩농사와 감자농사열풍, 저수확지 개량, 정보당수확고 제고, 축산군으로 전환, 대규모 남새온실농장 전국적 건설, 버섯생산기지 활성화
• 농촌문화혁명: 농민의 기술교육 강화, 문화생활환경(교육, 보건, 주택, 문화후생시설) 개선	• 농촌에서의 문화혁명: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 활성화, 교육과 의료봉사 수준 제고, 수도의 문화·노동계급의 문화·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전파, 확대
• 농촌에 대한 지원: 국가투자 증대, 공업부문이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화학비료, 건설재료 등 공급 확대, 기술자·전문가 파견, 청장년 노동력 보충, 사회적 노동력 지원	•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
•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농장에 대한 균형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 지도와 관리 방법 개선: 농업생산에 대한 통일적, 계획적, 과학기술적 지도 강화, 균형동농장경영위원회 위주의 우리식 농업지도체계 우월성 발양, 농업부문에서의 허풍 근절

출처: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pp. 1~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을 토대로 저자 표 작성.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은 공통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과업들 외에도 농장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몇 가지 비슷한 특별조치들을 진행하였다. 우선 김일성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3년에 걸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196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3,700여 개의 협동농장들 가운데 현물세를 완전면제받은 협동농장의 수는 1,331개였으며, 나머지 농장들은 여전히 8.7%의 농업현물세를 납부하고 있었다.^{28/} 원래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7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현물세를 전반적으로 없앨 것을 결정하였는데, 1964년에야 그 결정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김정은 역시 김일성의 농업현물세 폐지라는 파격 결정에 상응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협동농장의 재정실태를 분석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농장의 경제적 토대를 보강하기 위해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특혜조치”를 선포했다.^{29/}

그 밖에도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 모두 국가부담으로 농촌건설을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테제에서는 지금까지 협동농장들이 자체 자금으로 실시해오던 농촌기본건설(중소 관개공사, 하천 정리, 양수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발전소, 전기가설 등)을 이제 국가자금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촌테제는 이제 농촌의 문화주택들도 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지어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은 “농민들에게도 노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국가가 주택을 보장하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30/}

농촌혁명강령도 농촌테제가 담고 있는 특혜조치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우선 공급하는 조치, 주요 건설자재와 마감재를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 그리고 농촌살림집

28/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pp. 45~46.

2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30/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p. 48.

을 선차적으로 건설하는 조치 등이 해당된다. 농촌테제의 특혜조치 수준과 비교해 농촌혁명강령의 특혜조치 수준이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비해 농촌건설에서 국가 보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결정인 것은 맞지만, 김일성 시대에 비해 국가부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분명하다.

표 II-5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특혜조치

농촌테제	농촌혁명강령
• 농업현물세 폐지 • 국가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기본건설 실시 • 국가부담에 의한 농촌문화주택 건설	• 협동농장의 국가대부 미상환금 면제 • 농촌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우선 공급 • 농촌살림집 선차적 건설 • 농촌건설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마감건재 국가 보장

출처: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pp. 1~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은 전체 구성과 세부 실천방법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촌테제에는 없는 농촌혁명강령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항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표본 또는 본보기의 제시이다.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라고 하며 삼지연시 농촌마을을 농촌건설의 목표 기준이자 본보기로 제시하였다.^{31/}

김정은 정권은 각 분야와 영역에서 ‘본보기’라는 구체적인 발전상(發展相)을 제시함으로써 간부들과 대중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의

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정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본보기’ 발전 방식은 농업과 농촌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의 주장에 따르면, 권위주의체제의 “하이 모더니즘” 추종자들은 합리적 질서를 매우 시각적이고 미학적 견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즉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도시나 촌락 혹은 농장을 병영처럼 질서정연하게 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32/} 따라서 스콧은 하이 모더니즘 추종자들은 “시범도시, 시범마을 그리고 시범농장을 통해 좀 더 쉽게 통제되는 미시적 질서를 창조하려 한다.”라고 설명하였다.^{33/}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채택 이후 북한 전역에 본보기 군, 본보기 농장, 본보기 작업반, 본보기 분조 등을 만들고있는 추세를 보면, 스콧이 제시한 하이 모더니즘 추종자들의 통치 경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삼지연시가 농촌발전의 본보기로 공식화된 것은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지만, 이미 앞서 2019년 7월 삼지연시 중흥농장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김정은은 삼지연시의 중흥농장을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라고 하며 앞으로 15년 사이에 전국의 200여 개의 시, 군의 모든 리(里)들을 삼지연시의 농촌리들의 수준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농촌건설의 목표라고 하였다.^{34/}

그렇다면 삼지연시의 농촌마을의 수준은 어떤 모습인가? 농촌주민들도 수도와 지방도시의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살림집에서 살면

32/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예코리브르, 2010), p. 25.

33/ 위의 책, p. 25.

34/ “시, 군당위원회들은 모든 리들을 삼지연시의 농촌리수준으로 전변시키는데 힘을 넣자,” 『로동신문』, 2021.5.6. 이 기사에서 김정은은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 속에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10여년, 지어 20여년전에 건설한 농촌살림집들을 본보기처럼 내세우면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일군들이 있는가 하면”이라고 비판하며 선대 정권에서 진행된 농촌건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본보기’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된 문화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농촌마을들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촌살림집 건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림집 형태도 1동 2세대 살림집, 다락방이 있는 단층 살림집, 소층 살림집 등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교양거점들과 학교, 편의봉사시설, 진료소, 약국 등을 잘 건설하고 주변환경 또한 잘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농촌학교건설에 각별히 힘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제시한 농촌살림집 형태와 배치는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후 전국에 새로 건설되어 공급된 농촌살림집의 형태와 배치의 기준이 되었다.

다. 법제화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당론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곧이어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8차 당대회 결론에서 농촌 및 시, 군 주민들의 낙후한 생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향후 지방경제발전 및 지방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당적 과제로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개최된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 군발전법」이 채택됨으로써 당대회의 결정이 법제로 구체화 되었다. 농촌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시, 군발전법」 제2절(제30조~제44조)로 독립 구성되어 있다. 이어 2021년 12월 말에 제1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혁명강령이 채택된 이후 이듬해 9월에 개최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독립된 부문법으로 「농촌발전법」이 채택됨으로써 정책적 지위와 강제력이 격상되었다.

농촌혁명강령이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와 다른 점은 후속 조치로서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1.28.), 「허풍방지법」(2022.5.31.),

「농촌발전법」(2022.9.7.) 등 입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촌혁명강령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농촌혁명강령의 법제화를 추진한 데는 과거 김일성 시대에 농촌테제가 거쳤던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들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73년 1월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은 주체농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연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최근 몇 년 동안 농사가 잘되지 않은 원인이 국가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여 주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농촌테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다.

농촌테제는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고 채택된 우리 당과 국가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입니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지도일군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국가기관 지도일군들은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일군들은 테제를 하나의 학설로만 여기고 그것을 당과 국가의 투쟁강령으로 접수하지 않았으며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부터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테제에는 농촌기술혁명을 위하여 농촌에 트랙토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를 넉넉히 보내줄데 대한 과업들이 지적되어있으나 그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원만히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35/}(밑줄 강조-저자)

35/ 김일성,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월 17일, 22~24일),”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pp. 317~318.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현장에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과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농촌혁명강령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농촌건설에서 기본 물자인 시멘트 보장을 법규화한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이 2022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5호로 채택되었다. 동법 제2조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원칙)에 “시, 군에 세멘트를 보장해주어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이며 중요정책이다. 국가는 시, 군에 대한 세멘트보장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2022년에 5,000t씩, 2023년부터 해마다 1만t씩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36/} 특히, 제21조 시멘트 공급 원칙과 관련하여 “농촌문화수준이 한심하고 제일 뛰떨어진 국경연선을 비롯한 시, 군부터 먼저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눈에 띈다.^{37/} 또한 제25조 시멘트 배정 원칙과 관련하여 “시, 군에서는 농촌문화수준이 락후한 농장가운데서 알곡생산계획수행률이 높은 농장부터 먼저 세멘트를 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38/}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지역별, 단위별 새 농촌살림집 공급 현황을 보면 위의 시멘트 공급과 배정 원칙이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다수확단위’ 위주로 변형 집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농촌혁명강령에 포함된 중점 과업들 중 농업부문에서의 허풍 근절(<표 II-4> 참조)은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36/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p. 121.

37/ 위의 책, p. 124.

38/ 위의 책, p. 124.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채택된 「허풍방지법」으로 법제화되었다. 동법 제3장에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조 (농업생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제13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의 허풍방지), 제14조 (영농준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제15조 (영농작업수행에서의 허풍방지), 제16조 (농작물예상수확고판정에서의 허풍방지), 제17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서의 허풍방지), 제18조 (농업생산물수매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제19조 (농업토지리용에서의 허풍방지), 제20조 (농업부문에서 허풍방지를 위한 과학기술도입)을 통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39/}

2022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는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을 채택하였다. 노동신문은 두 법률이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적으로 담보하게 됐다”라고 전했다.^{40/} 대체로 학계에서는 「농촌발전법」이 농촌혁명강령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41/} 노동신문(2022.10.29.)에서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관철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채택된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2/}

아직 농촌발전법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조문들은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농촌발전법이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과 규범들을 규

39/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p. 1242~1244.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 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9.8.

41/ 농촌발전법을 농촌혁명강령의 법제화로 보는 연구들로는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2호 (2022); 이영훈 외,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등이 있음.

42/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자,” 『로동신문』, 2022.10.29.

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농촌발전법」 제3조에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하고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우며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한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43/} 동법 제6조는 농촌마을을 “농촌마을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건설하도록 한다.”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44/}

이상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농촌혁명강령이 법제화를 통해 강령의 목표와 실천과제들이 어떻게 법적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당의 결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입법화함으로써 법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하면서도 정상국가의 보편적 통치 행위의 형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3/ 위의 기사.

44/ 위의 기사.

Ⅲ. 김정은 집권 10년 농업정책의 전개

정은미(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정은 집권 10년 농업정책의 전개

1. 2012년~2020년: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증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농촌문제가 다뤄졌던 것은 아니며 대체로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 증산을 위한 농업정책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정권 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된 것도 아니었다. 초기에는 김정일 정권의 농업 정책인 ‘농업혁명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로 영농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을 증대하려는 접근방식의 농업정책이 전개되었다.

2012년~2019년 기간에는 신년사를 통해 농업정책이 주로 발표되어왔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농업정책은 알곡과 부식물(축산물, 남새, 과일, 버섯 등)의 생산증대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점차 시간이 경과할수록 축산부문에 대한 방침이 점차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4대 원칙(‘4대 고리’), 즉 좋은 집짐승 종자 확보,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 사양관리, 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이 제시되었다.^{45/} 또한 농장의 공동축산뿐만 아니라 개인 부업 형태의 축산을 장려하

45/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 『우리민족끼리』, 2019.1.8.

는 것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축산부문의 증산을 꾀고자 한 정책으로 북한에서 가축이 가구(household)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의 축산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다.

2014년에는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맞아 농촌테제에서 공식화된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강조되었다. 2014년의 경우 신년사보다는 2014년 2월 6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이 훨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46/} 후술하겠지만 이 서한은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문헌으로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적 농촌발전전략에 대한 기본 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서한에 담긴 구상이 강령 형태로 채택되기까지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만 2021년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에서는 알곡생산구조를 쌀과 밀 위주로 전환하여 밀재배 면적을 늘리는 방침이라면, 2014년 2월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농업생산구조를 알곡 위주로 개선하되 쌀과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이는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농촌기계화 관련 내용은 2016년 신년사에 처음 언급된 후 2017년 신년사에서 기계공업 부문에서 농기계 생산라인을 완비하라는 것으로 방침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농촌기계화 방침은 더이상 언급되지 않다가 2020년에 다시 등장하였다.

2019년 신년사에서 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집행하라는 방침이 언급된 것은 이전 시기의 신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이라 함은 평균주의적 분배가

46/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4.2.7.

아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5·30 방침’에 따라 협동농장에서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고 2019년에는 이미 상당히 농촌에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영농방법 측면이 주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2019년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생산 증대를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주체인 농장원의 권한과 분배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원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에서 2019년에 곡물을 665만 톤 생산하여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한 점이다.^{47/}

표 III-1 2012년~2020년 시기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12년 ^{48/}	•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 •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 • 알곡 정보당수확고 제고 • 농산과 축산을 결합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유기농법 적극 도입 • 영농물자와 설비 제때 보장 • 현대적 축산기지, 가금기지, 대규모 과수농장, 양어기지 최대 생산
2013년	• 농사에 국가적 힘을 집중 •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 제고 • 축산, 수산, 과수 부문의 증산

4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p. 15.

48/ 2012년에는 김정일 정권의 신년사 격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의 형태로 발표됨.

연도	주요 내용
2014년	•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의 해 •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추진 • 과학적 영농방법 적극 도입 • 축산, 온실남새, 버섯재배 증산
2015년	•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먹는 문제 해결, 식생활 수준 제고 • 물질악형농법 등 과학농법 적극 도입 • 축산기지, 양어기지, 온실, 버섯생산기지의 생산 정상화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속도 증대
2016년	• 농산, 축산, 수산 부문의 혁신으로 인민생활 개선에서 전환 • 우량품종과 과학농법 적극 도입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추진 • 축산, 수산 부문 조속히 증산 • 양어장,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에서 성과 도출
2017년	• 기계공장들에서 새형의 트랙터, 윤전기, 다용도 농기계의 계열생산공정 완비 • 농업에서 과학농사열풍으로 다수확운동 적극 전개 • 우량종자와 과학적 영농방법 적극 도입 • 두벌농사 면적 증대 •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 • 과일, 버섯, 남새 생산 증대
2018년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의 적극 도입 • 과학농사 • 축산물, 과일, 온실남새, 버섯 생산 증대
2019년	•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 적극 전개 • 영농공정별 과학기술적 지도체계 마련, 영농물자 원만히 보장 •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 존중,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 정확히 구현 •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 준수, 닭공장 등 축산기지의 현대화와 활성화,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 축산 장려
2020년	•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 • 과학농법 준수, 다수확 열풍 고취 •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역량과 농업과학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 사업 강화 • 농촌경리의 수리화 완성 •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증대 • 농업토지의 통일적 관리 • 축산업과 과수업에서의 새로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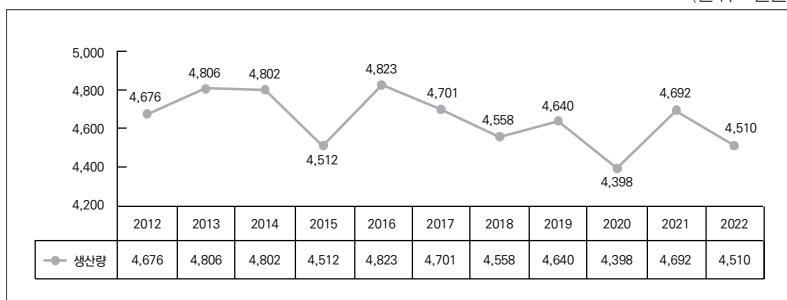
출처: 『로동신문』 해당연도 1월 1일자 신년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9년까지 신년사를 통해 당해 년의 농업정책을 발표했던 관행은 2020년부터 당 전원회의라는 회의체 형식을 통해 농업정책이 결정되어 발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20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농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영농방법의 개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2012년~2020년 시기에 제기되었던 농업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된 「시, 군발전법」 제2절 농촌경리의 발전 제30조~제44조에 반영되어 법규로 명문화되었다.

그런데 <그림 III-1>에 나타나듯 2020년에 세계적 보건위기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약 440만 톤으로 추락하였다. 대북제재, 전염병,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 3중고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제보위의 토대라고 여기는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실행해 온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뤄졌으며, 그 출발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이다.

그림 III-1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식량작물 생산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55&conn_path=12> (검색일: 2023.9.5.).

2. 2021년~2023년: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 발전의 연계

가. 제8차 당대회와 농촌문제의 부상

2020년 8월 당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 발표한 대로 2021년에는 1월 5일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가 “거의 모든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5개년 전략목표 달성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49/} 그리고 제7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성과와 결함의 두 측면에서 엄정히 총화”하며,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주객관적요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50/}

제8차 당대회에서 의제의 범위가 농업 문제를 넘어 농촌문제로 확장된 것은 제7차 당대회와 비교해 분명히 진일보한 결과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과학농사, 유기농법,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종합적 기계화, 공동축산과 개인축산 발전,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수의방역, 과수원예업의 집약화, 과학화 및 생산 정상화 등 영농기술적 개선을 통한 농업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제8차 당대회에서는 한편으로는 낙후한 농촌의 현실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지방의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5개년계획기간 식량문제 해결과 2~3년 내 국가의무수매계획을 점진적으로 높여 식량공급을 정상화한다는 조치가 결정되었다.^{51/} 기존의 정책이 영농방법적 측면에서 개선을 통

49/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로동신문』, 2021.1.6.

50/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1.6.

51/ 임수호는 북한 당국이 양곡의 시장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양곡을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조치(2021년 3월 양정법 개정)를 취했는데 양곡판매소를 정상 운영되려면 물량 확보를 위해 농장에서 수매 비중을 높일 수

한 생산증대에 집중했다면, 제8차 당대회에서는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발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정책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표 III-2 2021년~2023년 시기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21년	•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향상 •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식량문제 기본적으로 해결 • 국가적 투자 증대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 향후 2~3년 내 해마다 국가의무수매계획 2019년 수준으로 달성, 수매량 늘려 식량공급 정상화 • 농촌 및 시, 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경제 발전, 해마다 모든 시, 군에 시멘트 1만 톤씩 보장
2022년	•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채택 • 농촌건설목표는 온나라의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 개변이 농촌발전의 목표 •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 제시 – 첫째,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적 농업근로자로 개조(농민의 사상개조 및 정치의식 수준 제고) – 둘째, 나라의 식량문제 완전 해결(향후 10년 동안 알곡,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잡업의 단계적 생산목표 달성) – 셋째,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획기적 개변 – 실현 방법: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추진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당면 과제 – 과학농사제일주의(중자혁명,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업체제와 방법 확립,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 과학성, 정확성 보장) –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밀농사 중심으로 변경 –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 열풍 고조 – 저수확지 개량, 정보당 수확고 증대 – 축산, 과수, 남새, 공예작물 생산 증대(축산군 전환, 남새발관수체제 환원복구, 대규모 남새온실농장 건설, 버섯생산기지 활성화 등) –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 강화(농업과학연구기관과 농업 대학 역할 강화, 기계화 실현, 농업과학기술연구기지 첨단화, 농업기술인재 양성, 선진 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 보급)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수호,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슈브리프』, 제434호 (2023.5.19.), p. 5.

연도	주요 내용
	- 지도와 관리체계 개선(통일적·계획적·과학적 지도 강화,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주의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역할 강화, 농업지도일꾼과 농촌조급일꾼의 수준과 능력 제고, 허풍 근절) •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증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방침과 대책 - 농업부문의 투자액 점진적 증액, 설비, 자재, 자금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 - 농촌의 수리화(관개체계 전반적 정비보강), 화학화(비료와 농약 충분히 공급), 전기화(현대적 전력설비와 전기기계 공급 증대), 기계화(금성뜨락또르공장을 트랙터 및 농기계 생산의 종합 공장으로 발전, 농기계공장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 집중) -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으로 부침땅 면적 계속 확대 - 황해남도 농사에 당과 국가의 역량 집중 • 특별 조치: 협동농장의 국가 대부금 면제 • 전국의 농촌마을을 삼지연시의 농촌 수준으로 개편 - 모든 시, 군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우선 공급, 설계 및 건설 역량 강화, 농촌살림집 건설 선차적 추진, 농촌건설 자재와 건재 국가적 보장, 지방 건재생산기지 조성 • 당적 지도 강화 - 리당조직 역량 강화, 리당비서의 수준과 역할 제고
2023년	•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략적 문제로 중시 • 가까운 장래에 선진기술과 현대문명을 갖춘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을 목표로하는 농촌혁명강령의 의의와 중요성 재확인 • 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인 알곡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들 - 올해 계획된 관개공사 추진 및 5개년계획기간 전국의 관계체계 완비 - 새형의 능률 높은 농기계 생산 증대, 농기계부문의 혁신적 개건 -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증대 - 농업위원회,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 역할 제고, 과학연구단위들의 첨단기지화 - 농사 지도에서 편파성 극복,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이 농업생산지도의 원칙 • 도, 시, 군의 지도기관들과 모든 농장들의 역할 제고, 농촌살림집 건설 확대 •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농촌 당사업 개선

출처: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0.1.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2021.1.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2022.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2023.3.2.).

하지만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위의 조치들은 내부적 모순을 갖고 있다. 농장의 생산물에 대한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높일수록 농장원의 분배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농촌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방침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높이는 것은 2013년 7월부터 실시된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라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 III-3>에서 보이듯 협동농장의 알곡 구성은 1순위가 국가의무수매몫이며, 2순위는 자체조성곡이고, 3순위가 농장원식량분배몫으로 되어 있어서, 1순위인 국가의무수매몫이 높아지면 당연히 2순위와 3순위인 농장자체 조성곡과 농장원의 식량분배몫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8차 당대회의 조치는 농장원의 분배몫을 늘려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농업 생산력을 높인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보건위기 속 국경이 봉쇄되고 물적, 인적 이동이 엄격하게 제약받는 상황에서 국가의무수매계획의 상향 조정은 농민 잉여에 대한 거의 징발(徵發)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시기의 농업 집단화에 대해 “집단농장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곡물 징발을 증대하고 시장에 대한 농민의 곡물 출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피츠패트릭(Fitzpatrick)의 결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북한의 농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52/}

52/ Sheila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4, 재인용: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p. 320.

표 Ⅲ-3 협동농장의 알곡 구성

구분	세부 내역
1순위	국가의무수매물
2순위	자체조성곡(종자, 가축사료, 공업원료)
3순위	농장원식량분배물
4순위	확대재생산용알곡(저축)
합계	총 알곡생산량

출처: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2016), p. 67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 농촌혁명강령 채택과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부활

제8차 당대회의 정책 기조는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 이어졌으며,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의 채택으로 생산 의욕 고취의 대상은 개별 농장원에서 농장, 작업반, 분조 등 집단으로 옮겨졌다.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주도의 ‘우리식 농업지도체계’가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53/}, 이 결정은 2019년 4월에 개정된 헌법 제33조와는 배치된다.^{54/} 개정 헌법 제33조의 내

53/ 196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채택되었는데,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핵심은 전문적인 국가의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창설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에 있는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수리소, 관개관리소, 수의방역소, 종자관리소, 토지건설사업소, 종축장 등 모든 농업부문 기관들과 기업소들을 묶어 농촌정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설한 것으로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국가가 통일적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게 한 지도체계의 대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p. 73~75. 따라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결정은 김일성 시대에 창안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부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4/ 임수호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국가가 농업 생산 계획권, 인력조절권, 식량 유통권을 독점함으로써 농민을 사실상 배급제 노동자로 전락시켰다며,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 농촌건설강령의 채택으로 부활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가 농장에 대한 기업책임관리제의 사실상 후퇴와 농촌의 잉여에 대한 국가의 약탈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임수호,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체제의 부활,” 『이슈브리프』, 제382호(2022.8.29.), pp. 3~5.

용 중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가 삭제되고,^{55/}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의 내용으로 대체되었다.^{56/} 그런데 불과 2년 6개월 후에 농장 관리방법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였다.

‘우리식 농업지도체제’의 부활과 함께 후속 조치로 2022년 1월 21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기존의 농업성이 농업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정령에서는 “나라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맞게”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바꾼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57/} 이러한 조직 개편은 내각에서 농업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농업위원회-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농장의 ‘우리식 농업지도체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정령에서 밝히고 있는 “농업생산의 통일적 지도”를 목적으로 한 농업지도체제의 개편은 그동안 협동농장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장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 했던 기존의 정책과는 배치된다.

‘우리식 농업지도체제’의 기원인 김일성 시대에 창설된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는 “국가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조직, 기술발전, 자재보장, 로력배치와 조직, 재정활동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58/}

55/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북한 헌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23.9.5.).

56/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서울: 국가정보원, 2022), p. 37.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위원회로 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1.26.

반면에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은 협동농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농장의 계획권, 생산조직권, 로력조절권, 인재관리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판매권 등을 “생산자들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59/} 따라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2014년 5·30방침으로 도입된 협동농장에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와 배치된다.

다. 변침점: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밀, 보리 농사 확대

2022년 6월 8일~6월 10일에 개최된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관리방법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그 결정은 농업부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다뤄진 농업부문의 과제들은 첫째,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농사 결속을 잘해 새로운 농업혁명방침의 성과를 내는 문제,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문제, 셋째,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문제, 넷째,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문제, 다섯째, 과학적인 농사 지도와 국가적 지원의 강화 등이다.^{60/} 이것들은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방침들의 연장선에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현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김정은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하여야

58/ 박성철, “주체의 농업지도체계는 농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우월한 체계,” 『근로자』 1호 (2012), p. 58.

59/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양: 농업출판사, 2016), p. 7.

6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6.11.

할 긴요성”을 설명했다는 하는 부분이다.^{61/} 관련 보도에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제5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되던 시기의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은 북한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최대비상방역조치로 인해 물적, 인적 이동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모내기를 끝내고 제4차 당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밀, 보리농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첫해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였다. 또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첫해인 2022년에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농업근로자들이 실물로 체감하게 할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었다.^{62/}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협동농장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던 기존의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의 정책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제5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된 이후 8월부터 노동신문에서 협동농장 용어가 사라지고 농장 용어로 단일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또한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거론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63/} 최대비상방역체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협동농장의 생산수단, 노동력, 영농물자 등을 전적으로 국가 부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간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

61/ 위의 기사.

62/ 위의 기사.

63/ 노동신문에서 협동농장 용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2022년 7월 30일자 “자기 고장에 깃든 수령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안자” 기사이고, 8월부터는 노동신문에 과거의 사건을 다루면서 불가피하게 협동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협동농장(당시)”라고 표기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통일적으로 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농장의 단일 용어가 처음 등장한 기사는 “분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틀어쥔 고리,” 『로동신문』 (2022.8.1.)이다. 이 기사는 염주군 내중농장의 사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전에 이 농장의 이름은 내중협동농장이었다. 2022년 6월 30일자 노동신문의 기사 “농민영웅들의 대오가 늘어난다”에서 내중협동농장으로 호명되었다.

농장의 용어가 사라지고 농장 용어로 단일화된 데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했다기보다는 「농장법」 제1조에서 농장을 “사회주의농업기업체”^{64/}라고 정의한 것에 기반하여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부활 조치에 따른 농장 호칭의 단일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2023년 2월에 개최된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는 ‘농촌혁명강령’의 실행 첫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내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중 첫 번째 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면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첫 번째 과제로 관개체계 완비가 제기된 것은 알곡생산 구조가 벼와 밀, 보리농사 중심으로 전환된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전년도에 가뭄으로 밀, 보리농사의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가뭄 현상이 기상사실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개공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두 번째 시급 과제로는 농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부문의 “혁신적 개건”이 제시되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22년을 “새 시대 농촌기계화의 개시 원년”으로 규정하였다.^{65/} 이것은 2022년 가을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군수공업 부문에서 생산된 5,500대의 농기계가 황해남도에도 공급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농기계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급상승한 이유는 밀, 보리 재배면적 및 이모작 범위의 확대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대규모 살림집 및 온실농장 건설사업에도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 지원노동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 밖에도 농기계화 수준이 높아지면 수확 후 손실분 감소로 식량증산 효

64/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 1077.

65/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기상을 과시하는 변혁적실체,” 『로동신문』, 2022.12.13.

과를 얻을 수 있다. 농업생산물의 손실은 수확, 운반, 탈곡, 가공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수확 후 손실량이 <표 III-4>에서 보이듯 상당하다. FAO(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 농업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에서 수확 후 손실량은 2020/21년 기준 약 100만 톤으로 총생산량의 20% 수준이다. 따라서 추수 과정에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면 수확 후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

표 III-4 북한 식량생산량 중 수확 후 손실분 추정

(단위: 천톤)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수확 후 손실분	754	799	737	871	947	1,023
총생산량	4,801	5,150	4,722	4,170	4,529	4,889

출처: FAO, 각 년도, 재인용: 김일한,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이영훈 외,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 78.

2023년에는 알곡 생산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강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농사 결속 단계에서 농업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모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남알허실을 철저히 막는 것이다. (중략) 아무리 농사가 잘되었다고 하여도 남알허실을 막지 못하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수 없다. (중략) 남알허실을 막지 못한다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없다. (중략) 남알허실로 인한 수확고감소현상이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가를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6/} 그리고 수확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수확기와 탈곡기 등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66/ “땀흘려 가꾼 곡식을 알뜰히, 말끔히 거두어들이자.” 『로동신문』, 2023.10.18.

제7차 당 전원회의 이후 농기계의 생산과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군수공업, 기계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파종기 등 1만여 대의 농기계가 농촌에 집중 공급되었다.^{67/} 농기계 생산에 금성트랙토르공장,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공장,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대동강전기공장, 해주농기계공장, 안주트랙토르부속품공장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농기계 제작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등이 참여함으로써 산학협력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농촌기계화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가 불가피하며 개별 농장에서 자율 경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알곡 증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관개공사나 농기계 생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22년 6월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은 농업생산에서 개별 농장의 자율성 축소 대신 국가의 권한 확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행되는 변화된 정책들이 법제 정비로 이어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시행되어 왔던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실시가 2021년에야 개정된 「농장법」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농장경영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2021년~2022년에 나타난 농업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들은 2023년 8월에야 개정된 「농업법」에 반영되었다. 개정된 「농업법」에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 작성과 생산조직, 지력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

67/ “1만여대의 농기계 생산, 농장들에 집중수송,” 『로동신문』, 2023.9.24.

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었다.^{68/} 또한 「로동법」(제44조)과 「농업법」(제72조)에는 농장에서의 작업반우대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장법」의 경우 작업반우대제 조항이 2015년 개정(제5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021년 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들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농업부문에서는 종종 나타난다.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3.8.4.

IV. 김정은 정권의 농장 운영과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

정은미(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정은 정권의 농장 운영과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

1. 농장 운영의 개혁과 후퇴

가. 농장책임관리제

(1)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도입

김정은 정권의 집권 초기부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모색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2012년 6월에 협동농장들에서는 분배방법을 이전의 현금분배방법에서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고치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제와 포전담당제, 유상유벌제 등이 실시되었다. 2013년 7월에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책임관리제가 실시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현물분배제, 포전담당책임제, 농장책임관리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2014년 5·30방침으로 알려진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에 맞춰 기업소법은 2014년 11월에 개정되어 기업소의 경영원칙에 사회주의기업책임제의 실시가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농장법은 2015년 개

정을 통해 농장의 경영활동원칙으로 농장책임관리제가 명문화되었고, 다시 2021년에 제5조에 농장의 경영활동원칙으로 농장책임관리제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헌법에 기존의 경제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가 삭제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반영된 것은 2019년에야 이르러서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공식화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제가 기업소뿐만 아니라 농장에도 적용되었다. 북한 문헌은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을 “생산자들에게 실제적인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한다.^{69/} 또한 같은 문헌은 “경제제재, 봉쇄 속에서 농업부문 영농물자보장이 그전처럼 잘되지 못하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협동농장들 자체로 자립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는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70/}

협동농장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면서 생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권(계획권, 생산조직권, 노동력조절권, 인재관리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판매권 등)을 행사하는데 농장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2021년에 개정된 「농장법」 제22조는 “농장은 경영활동에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로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리용권 같은 경영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1/}

먼저, 계획권 측면에서 농장은 국가경제계획 외에도 농장 자체의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농장은 다른 기관들이나 기업소들과 주문계약을 맺고 생산한 생산물을 주문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 농장의 여유 노동력과 여유 생산

69/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p. 7.

70/ 위의 책, p. 9.

71/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 1080.

수단을 가지고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 축산물, 부업생산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자체계획지표(이하 농장지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사례로 재령군 부덕협동농장에서는 산림토지에 참외, 수박, 토마토와 같은 수익성 작물을 생산하여 임농지 정보당 몇십만 원의 화폐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장연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관리 일꾼들과 작업반 초급일꾼들이 공공건물들과 울타리 주변에 조롱박, 수세미오이를 심고 빈 땅에 마당빚자루용 땀싸리를 심어 수입을 늘렸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는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부대노동력과 부양가족들로 부업반을 조직하고 향장미원료채집, 향장미화장품제작, 비누생산과제를 주어 1인당 화폐수입을 생산부문 농장원들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다고 한다.^{72/}

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사례2는 농장에서 비농장원출신으로 인민반장을 하였다. 그는 연로보장에 들어갔을 때 작업반장에게 비경지를 얻어 밭벼를 심어 알곡을 생산하거나 집에서 가축을 길러 작업반장에게 넘기고 현금수입을 얻으며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다.

구술자: 나는 이밥만 먹었어요.

연구자: 어떻게 이밥만 먹을 수가 있으셨어요?

구술자: 그러니까 난 우리 작업반장한테 가서 나 비경지 땅 좀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밭벼로 700킬로를 했던 말이에요.

(중략)

연구자: 그전에는 입쌀밥을 어떤 식으로 해서 드셨어요?

^{72/} 농장 사례들은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에 실시와 실현방도』, pp. 28~29 참조.

구술자: 돼지 두 마리씩 키우면 그 여기 작업반장한테도 주고 저기 작업반장한테 줘가지고 값을 받아 가지고, 버는 항상 쌓아 놓고 있었으니까 집에. (북한이탈주민 사례2)

생산조직권이 협동농장에 부여되면서 생산조직 형태와 운영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협동농장에서 생산조직의 기본형태는 분조 관리제였으나 이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주로 작업반과 분조 대상으로 하던 생산기술지도가 이제 포전을 담당하는 작업조 또는 개별 농장원을 대상으로까지 이뤄져야 했다. 포전별 영농공정을 제때에 수행하기 위해서 생산지령체계가 매일, 5일, 10일 단위로 작업총화를 해야 했다. 분조에서는 포전별 작업실적을 매일, 5일, 10일 단위로 총화하고, 작업반에서는 10일 단위로 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총화를 하게 되었다.

또한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면서 한 가지 생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화분조’를 장려한다던가, 알곡생산 외에도 남새, 공예작물, 축산, 과수, 보조생산, 편의봉사부문을 결합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다각화, 생산의 다각화가 추구되었다.

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장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사례1은 온실 남새농사와 포전 알곡농사를 병행하였다. 알곡으로는 옥수수, 콩, 감자를 심었다.

구술자: 남새 전문이지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연구자: 그렇죠.

구술자: 그러니까 알곡,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콩하고.

연구자: 농장의 한 일부분을 알곡. 그니까 농장원들 먹기 위한 알곡 생산용으로 따로 떼어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옥수수나 콩을 주로 심는다?

구술자: 그다음에 감자하고, 세 가지를 반마다 떼가지고, 그리고 밭을 그럴 때는 공동으로 심지 않고 뭐 이렇게 스스로 맞춰가고 내 오전이 심었다면 내가 오전에 심고, 다음번엔 오후에 심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내 집 밭에는 분조서 갈아주는데 일단, 퇴비하고 그 다음에 심고 하는 거는 내가 심어야 돼요. 그 밭을.

연구자: 아. 이 알곡을 심는 그 포전을 나눠주는 거군요? 집마다.

구술자: 예예 맞아요.

연구자: 그러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땅 분배를. 포전을?

구술자: 분배를 다 감자밭, 콩밭, 옥수수밭 해서 8~900평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사례1)

다음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제의 실시로 협동농장이 노동력조절권과 인재관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농장은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장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장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에서 서비스부문의 인력은 가급적 줄이고, 최대한 알곡부문에 인력을 강화하고 청장년들은 알곡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동력조절권을 행사하도록 장려되었다. 그리고 농촌의 유희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노동력과 부양가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장려되었다. 좋은 사례로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에서는 부대노동력, 부양가족들 중에서 전문기술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업반으로 조직하고, 육체적 노동능력이 있고 농사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몇 명씩 작업조를 조직하여 농경지를 주어 겸재배방법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재배하도록 하였다.^{73/}

73/ 평원군 원암협동농장의 사례 소개는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p. 51.

북한이탈주민 사례2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농촌에서는 모내기나 가을걷이 때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을 동원하며, 농장에 급한 일이 생길 때도 부양가족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한다. 보상으로 농경지 일부를 떼주기도 하고 위에서 소개한 원암협동농장의 사례처럼 겹재배방법으로 농작물을 키우게 하기도 하였다.

구술자: 그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모내기 때 가을걷이 때 그때만 동원되는 거고. 기본은 이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배급제 부양들. 부양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 어쨌든 할머니들이잖아요. 다 보장 그런 연로보장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젊은이들도 있단 말이야 왜. 남편은 배급제고 아내는 집에서 놓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도 있고 한 걸 다 데리고서 같이 농장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일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있고.

연구자: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줘요?

구술자: 그러니까 밥 뭐야 쌀로 줘서 밥 해 먹는다는거. 그다음에 명절 때도 농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할머니들도 같이 거기에 속해가지고서 쌀을 주든 옥수수를 주든 해가지고 같이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민반장 역할에 많이 관계 된단 말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일만 시켜 먹지 말고 땅도 조금 달라고 그러면 뭐 콩밭도 주고.

(중략)

구술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농장일을 많이 도와주잖아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씨받이 할 때 뭐 김 밷 때. 가을 할 때. 그때 도와주고 하니까 아이고 나 뭐 땅도 좀 줘야지 하면 내 땅은 따로 그저 조금. 많이도 안 주죠. 그렇게 주면 늘 항의가 대단해서. 두 고랑은 강냉이, 한 고랑은 콩. 그러니까 어쨌

든 농장원들도 된장, 간장은 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줄에 콩줄 하나. 그렇게 될 때는 우리 할머니들도 너희들도 힘들었으니까 이거 콩자루 하나씩 이렇게 넣어놔 준단 말이에요. 그건 다 비법이지만 원래는 근데 자기네가 일 시켜 먹으니까 안 주면 누가 일을 해주나 안 해주지. (북한이탈주민 사례2)

북한 문헌에서 재정관리권은 “협동농장이 자체로 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할수 있는 실제적인 경영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74/} 협동농장은 경영자금을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재정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농장 스스로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특히, 농장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도록 화폐 수입을 늘여야 하는데, 협동농장의 수입원은 <표 IV-1>에서 보이듯 농업생산물 판매수입, 보조생산 및 편의봉사부문 수입, 부업생산수입, 농장자체수입, 농부산물 수입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1차적으로 농장의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곡 및 농산물 판매수입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농장이 화폐수입을 늘이는 방법으로서 가급적 두벌농사 면적을 늘려 알곡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농장지표에 따라 생산한 생산물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생산물에 대해서는 협동농장이 자체로 가격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협동농장이 자체로 제정한 가격은 “농장가격”이라고 부른다. 농장지표로 생산되는 생산물에는 메밀, 녹두, 팥 등과 같은 농토산물과 채소류 그리고 들깨, 땅콩, 참깨 등의 공예작물, 농토산물, 산열매, 산나물들과 그 가공품, 그밖에 부업생산물로 생산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74/} 위의 책, p. 55.

속한다. 비록 협동농장이 자체로 농장가격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소비자와 합의가격으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제정하도록 당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그밖에 협동농장은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농장은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들을 기관, 기업소, 개별적주민들과 지역시장에 판매할 권한”^{75/}을 갖는다. 북한 당국은 가급적 판매 장소로 농장주변이나 지역시장에 직매점을 설치하여 농장의 생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것을 권하고 있다.

표 IV-1 협동농장의 수입항목종합표

수입항목	세부 지표
농업생산물판매수입	농산물(알곡, 채소, 공예작물), 축산물(정미소와 탈곡장에서 생산한 계란 포함), 과일 등 판매수입
보조생산, 편의봉사 부문 수입	수리분조, 기계화작업반, 보수분조, 기와분조, 위생분조, 수리편의조, 가공편의조 등 수입
부업생산수입	녹두, 메밀, 팥, 고구마 등의 식량작물과 고급채소, 수익성이 높은 축산물, 산열매, 산나물, 그밖의 농부산물, 산과 들, 강에서 나는 원료들로 만든 생활용품 생산 판매 수입
농장자체건설수입	과수원건설, 양묘관리, 탈곡장과 축사 건설, 토지정리 등에 지출된 노동비용과 자재비
농부산물수입	벼짚, 강냉이짚, 가축사료용 채소부산물, 영농자재와 땔나무로 이용할 수 있는 나뭇가지 등

출처: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와 실현방도』, pp. 56~65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북한이탈주민 사례1이 소속되어 있던 남새전문협동농장은 농장의 온실에서 재배하는 채소들이나 모종을 팔아 부수입을 형성하여 농장의 경영자금을 사용했다. 농장이 주변 도시와 도보로 약 20분

^{75/} 위의 책, p. 59.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 주민들이 농장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나 모종을 사기 위해 직접 온다. 채소를 판매하여 획득한 현금 수입은 각종 지원물자와 연구실 꾸리기 등에 쓰였다.

구술자: 그러니까 2월 해서 3월, 2월 말에 3월 한 3일, 4일 그때는 그 안에다가 배추 씨를 심어요. 그렇게 하고 온실을 하나는, 그다음에 온실을 두 개씩 하우스를 하는데, 그다음에 온실 하나는 여름에 한 7월에 이렇게 밭을 내어놔서 거기 다 파를 심어요. 씨를 뿌려서 그러고서 9월 10월 때는 그 파를 뽑아서 이거 하우스 하나 통째로 파모로 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 다 끝이 난 다음에, 2월 16일에 같이 그것도 씨 우면은 거기 그 안에 파모가 자라서 4월 말일인가 그때 그 안에 파도 같이 팔지.

(중략)

구술자: 다 밭에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무슨 현금을. 돈 내라는 게 많아요. 무슨 어디 지원물자, 연구실 꾸리기 그러면. 그런데 농장은 돈이 없으니까.

연구자: 어떤 게 제일 값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지원금 내기 위해서.

구술자: 모들이죠. 모들이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배추도 팔고 그 다음에 파이도 팔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바치고.

연구자: 그러면 제일 많이 대량으로 심는 거는요?

구술자: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 그다음에 양배추, 호박, 제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로 해갖고 거기 5월 21일 때는 밭에 나가요 그 모들이. 그리고 밭에 심고 나머지는 팔기도 하고.

연구자: 모 자체를 판다는 얘기죠?

구술자: 네네. 대당 얼마씩 이렇게 팔아요.

연구자: 판다는 거는 어디다 판다는 거야?

구술자: 개인들이.

연구자: 개인들한테.. 농장이 개인들한테 그냥 파는 거예요?

구술자: 아니 농장은 말고 거기도 배급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팔죠. 그거 현금 받길래. 그러니까 우리는 농장원이고, 개인이라는 거는 농장에서 일하지 않는 직장다니는 사람들.
(북한이탈주민 사례1)

(2) ‘우리 식 농업지도체계’ 도입 후 변화

앞에서 협동농장에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제재와 봉쇄로 인해 영농물자 보장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장 책임관리제 하에서 농장이 자립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한 농업정책은 2021년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경로 변경을 하였다. 이번에는 ‘농업생산의 통일적 지도’를 명분으로 농업위원회-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농장의 우리식 농업지도체계가 다시 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농장 운영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도입은 「농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시 주의원칙”(제5조)^{76/}에서 “국가가 부여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77/}해나가는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동법의 다른 조항들에 농장의 실제적 경영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장법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에서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해야 하며,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 정보당수확고계획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23조).^{78/} 또 제72조 행정

76/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 1077.

77/ 위의 책, p. 1080.

적 책임을 규제한 19개의 위법 행위들 중 일부는 사실상 농장의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78/} 따라서 2021년 11월에 개정된 「농장법」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요소들과 우리식 농업지도체계 요소들이 공존하는 양자 간의 타협의 산물과 같다.

집권 10년 사이에 농업부문의 관리방법에 대한 급격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으로 농장 경영권의 자율성 확대가 〈그림 III-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대만큼 식량 증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식량자급 계획을 달성하는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장들 간의 생산력 격차가 오히려 커지면서 농촌 지역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이 채택된 것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다수화 농장과 저수화 농장 간의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어 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농업부문에서도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이 이행될수록 안보 위기가 상승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제보위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농장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한 개입과 통제가 식량 증산에 더 기여한다는 정책적 판단은 농장 운영의 방식을 과거로 회귀시켰다.

78/ 위의 책, p. 1080.

79/ 위의 책, p. 1087.

2023년에는 식량 증산이 국정 목표 제1순위로 지정되면서 이례적으로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가 개최된 지 두 달여 만에 제7차 당 전원회의가 소집되어 농업부문의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때 결정된 주요 실천과제들은 관개공사, 새형의 농기계 생산 증대, 간석지 개간, 농업위원회·농업연구원·기상수문국 역할 제고, 과학 연구단위들의 첨단기지화, 도, 시, 군의 지도기관들의 역할 제고, 농촌살림집 건설 확대,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및 농촌당사업 개선 등이다.^{80/} 이 과제들은 개별 농장 단위들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농업 및 농촌 발전의 추진 동력이 농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으며, 농장은 “국가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농장법』 제3조)하는 농업기업체로서 국가에 대한 종속성이 한층 높아졌다.^{81/}

결과적으로 농장의 경영 자율성의 축소와 국가 통제의 강화는 국가와 농장 간의 그리고 국가와 농장원 간의 분배몫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8차 당대회의 결론에서 채택된 향후 2~3년 내 해마다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높이고 수매량을 늘려 식량공급을 정상화하는 방침은 농장과 농장원이 자체로 처분할 수 있는 분배몫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나타난 농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 전환은 도시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촌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농촌, 농민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한계가 드러난다.

더욱이 2021년 9월 제1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옥수수 재배면적의 축소와 밀, 보리 재배면적 확대라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3.2.

81/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 1077.

은 결코 농장과 농장원에게 유리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새로운 영농 기술에 대한 습득 노력뿐만 아니라 이모작에 필요한 더 많은 거름과 종자 및 영농물자의 확보, 길어진 영농활동 등은 농장과 농장원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농업생산 구조의 전환이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농촌혁명강령’에 농촌살림집 건설이나 협동농장의 부채 탕감과 같은 특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농민 달래기’를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국가적 지원으로 건설되는 새 농촌살림집 마저도 결과적으로는 다수확 경쟁에 농민 대중을 동참하게 하여 식량 증산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을 기점으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혁 조치의 일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농장에도 도입되어 농장책임관리제가 실시됨으로써 농장의 자립성, 창발성, 실리주의와 같은 원칙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2021년 8차 당대회를 전환점으로 ‘우리식 농업지도체계’가 부활하고 농장의 창발성보다는 농업 생산의 ‘통일적 지도’가 더 중시되었다. 이로써 농장 경영활동원칙에서 농장책임관리제와 함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또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나. 포전담당책임제

(1) 도입 과정과 운영 실태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2월 6일에 처음으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이 대회에 「사회

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통해 포전담당책임제 용어가 노동신문에 처음 등장하였다. 서한에서 “최근에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하여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은이 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82/}

엄밀하게 말하면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장원 담당책임제의 한 형태이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이나 분조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집집승무리별 담당책임제, 보조생산 및 편의봉사부문 업종별 또는 농장원별 담당책임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83/}

북한 문헌의 설명에 따르면,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에서 한 명 또는 2~3세대, 3~4명이 일 년 동안 포전을 고정으로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포전의 생산 및 수매계획 수행결과와 포전담당자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분배몹을 계산해줌으로써 집단주의적 성격도 유지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우리식 경영관리방법’이다.^{84/}

북한 문헌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2013년 7월부터 협동농장에 도입되어 실시되었다고 하지만,^{85/} 이때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장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사례1은 2012년부터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었다고 했다.

82/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4.2.7.

83/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와 실현방도』, p. 74.

84/ 리재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신 5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제5호 (2015), p. 36.

85/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p. 6.

반면에 사례2는 황해북도 ○○군 안의 농장에서 살았는데, 그가 소속된 농장에서는 2017년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1의 구술에 따르면, 소속 농장원의 수에 비해 농장의 경지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1인당 감당해야 할 포전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기 어렵고, 오히려 경지면적에 비해 농장원의 수가 많은 농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이 헐하기 때문에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 혹시 포전담당제 같은 거나 농장책임관리제 같은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술자: 우리 하는 게 그게 포전담당제죠.

연구자: 포전담당제라는게 이런 식으로 하는게 언제부터 실시된 걸로 기억하세요?

구술자: 한 12년도 그때부터.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일할 때는 포전담당제가 다 실시됐더라고 그런 데는.

연구자: 다시 들어간 때가 언제죠?

구술자: 14년도.

연구자: 14년도에 그때는 이미 이제 다 대부분 농장들이 다 하고 있었다?

구술자: 아니요. 우리 남새농장에는 인원수보다 밭 면적이 작으니까 밭을 다루기 험한데 일반 농촌에는 인원수보다 밭 면적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막 두 정보, 두 정보면 6천평이잖아요. 그럼 나 혼자 밭을 다 다루지 못하지. 그래 갖고 거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면적이 많으니까. (북한이탈주민 사례1)

사례2가 소속된 농장은 목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2015년부터 농장에서 농장원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자 가구 인원수에 맞춰 농장의 땅을 개별 가구들에 나눠줬다고 한다.

하지만 정식으로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것은 2017년 이라고 하였다. 사례2는 이 시기에 종자와 비료가 부족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농장 자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개별 가구에 경지를 나누어주면 개인들이 알아서 투자해 그나마 식량 소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했다고 한다.

구술자: 목화 짓는 데는 목화만 생산하고. 근데 어쨌든 농장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기가 안 나니까 이 물을 대지 못해서 논도 다 밭으로 변했던 말이에요. 어쨌든 농장원들이 식량을 못 주니까. 땅으로. 너희 식구 다섯이다 하면 밭으로 이만큼 논으로 이만큼. 너희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땅을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세대는 비료도 좀 치고 종자도 좀 더 확보해서 하고 하면 한 해 먹을 걸 생산하는데 그나마도 생활이 곤란한 집들은 뭐 그것도 못해가지고 밭을 묵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연구자: 그럼 그런 걸 언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가구 수에 맞춰서 땅을 이렇게 먹고 살 땅을 준 적이?

구술자: 한 2015년도?

연구자: 혹시 그게 포전담당제 같은 건가요?

구술자: 포전담당제인데. 포전담당제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고.

연구자: 이미 한 2~3년 전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했었군요. 주목적이 그 농장원들이 먹고 사는 그 알곡 문제를 스스로 각자 해결하라고 해서 떼주는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예요?

구술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야 군량미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농장에서 나오는 종자 비료가 지고는 농장 땅도 제대로 운영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나눠주면 개인들이 자기 걸 투자해서라도 어쨌든 자기네 식량이니깐 좀 소출이 좀 높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사례2)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의 토지를 개별적 농장원 또는 작업조에 분담해주고 경작하게 하는 것으로 포전별 생산계획과 구매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포전담당자들의 분배몫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생산의욕을 높일 수도 있다. 포전별 알곡생산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토지등급과 정보당 소출량의 기준이다. 분조의 포전별 토지는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일 어떤 농장에서 논 정보당 소출계획을 7톤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면, 분조의 평균 토지등급은 3등급의 정보당 소출기준은 7톤, 1등급과 2등급은 그보다 높게, 4등급과 5등급의 정보당 소출기준은 그보다 낮게 정한다.^{86/}

그리고 포전별 국가의무구매계획이 농장원의 현물 분배몫의 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의무구매계획은 토지사용료, 비료공급량, 영농자재공급량, 지원노력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의 가격 산정 권한이 모두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농장원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각 요소의 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정보를 농장원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농장들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편향(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토지등급 산정과 생산계획, 그리고 국가의무구매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항목들이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포전담당 농장원의 분배몫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룡강군 포성협동농장은 최근년 간에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잘 실시하여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뒀는데, 주요 성공 요인이 포전등급을 여러 가지 농사조건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의(異義)가 없도록 규정하여 농장원들에게 포전을 분담시키고, 포전등급 규정

86/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와 실현방도』, p. 79.

에 맞게 알곡생산계획을 공정하게 주고 노력일 평가를 정확히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있었다. 특히, 포전등급을 정할 때 지력 상태, 물 보장, 기계화 조건, 포전까지의 거리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하였다.^{87/} 반면에 판룩협동농장에서는 일부 농장원들이 지력이 낮은 토지를 일부러 맡으려는 현상이 있었는데, 토지등급이 낮으면 생산계획이 낮아 조금만 노력해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이득을 보게 되는 편향이 있었다.^{88/}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알곡생산 및 국가의무수매계획을 작성하여 분조원모임, 농장원총회 또는 대표자회에서 토의하여 비준한 다음 해당 통계양식에 기입하여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양식은 <표 IV-2>와 같다. 양식에는 담당 포전명과 면적, 포전담당 농장원들의 이름, 토지등급과 정보당 생산기준, 포전의 생산계획과 국가의무수매계획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IV-2 포전별 알곡생산 및 수매계획 양식

연번	구분	숫값
1	담당한 포전명, 면적	배나무를 포전번호 345, 1.5정보
2	포전담당농장원	○○○, ○○○, ○○○
3	토지등급과 정보당 생산기준	2등급, 7.2t/정보
4	포전의 생산계획	10.8(7.2t/정보 × 1.5정보)
5	국가알곡수매계획	3.9t

출처: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와 실현방도』, p. 80.

위의 <표 IV-2> 양식을 보면 국가와 농장원이 생산물 분배비율이 3:7 정도인 것으로 보이나, 농장원이 가져갈 포전별 현물 분배몫은 농장공동조성몫을 다시 차감한 후의 몫이기 때문에 실제 농장원의 분배몫은 생산물의 70%보다 훨씬 적다.

87/ “포전담당책임제는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로동신문』, 2019.11.23.

88/ “포전담당책임제시행을 위한 당적지도를 이들처럼 짜고들자,” 『로동신문』, 2020.4.19.

노동신문에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소개되는 사례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농사를 잘한 농장들은 농장일꾼들이 농장원 대중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잘 실시한 공통점을 지닌다. 2014년에 농사를 잘 지은 연탄군 수봉, 평원군 석교, 영광군 관수, 화대군 읍협동농장들은 공통적으로 “일꾼들이 사색을 깊이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한 농장들이다”라고 평가하였다.^{89/} 함흥시 흥덕구역 룡신헌동농장 역시 포전담당책임제를 옹계 실시하여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수확을 올렸는데, 잘한 일은 “회의를 열고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포전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자 “농장원들의 반향도 매우 좋았고 대중의 생산의욕도 더한층 높아지게 되었다”며,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서도 자기단위, 자기농장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옹계 방법론과 묘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90/}

이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사례1과 사례2는 농장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포전담당책임제의 운영방법은 북한 문헌이나 매체에서 설명한 운영방법이나 사례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양강도 지역의 남새전문협동농장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 사례1과 황해북도 지역의 농장에 살았던 사례2 간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1의 경우 농장에서 농장원 1인당 800~900평 정도의 포전을 분배받았다. 이 분배받는 포전의 크기는 농장원과 부양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부양자 중 학생의 경우는 200평, 연로자의 경우는 150평을 분배받는다. 분배받은 포전에는 주로 옥수수,

89/ 위의 기사.

90/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기까지,” 『로동신문』, 2017.3.2.

감자, 콩과 같이 알곡 작물을 심는데, 각 작물을 얼마나 많이 심을 것인가는 분조 안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자: 아. 이 알곡을 심는 그 포전을 나눠주는 거군요? 집마다.

구술자: 예에 맞아요.

연구자: 그러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포전을?

구술자: 감자밭, 콩밭, 옥수수밭 해서 8~900평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연구자: 이 기준은 뭐예요. 사람 수? 집에 사람 수?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구술자: 두 명 있는 집은 1,600 아니면 1,700.

연구자: 아, 한 명당?

구술자: 한 명당. 그 다음에 가족 있는 거는 또 가족 수로.

연구자: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농장원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부양자가 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술자: 그러니까 우리 집이 세대주도 같이 일하면 그 두 배. 1,600 평에다가 가족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있는 집은 한 200평인가 1인당.

연구자: 노인 같은 경우는?

구술자: 노인은 학생보다는 적게 받지요. 한 150평 정도.

연구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농장원이 두 명 있고 학생이 한 명 있고 노부모님이 한 명 있으면 한 거의 2천 평 정도를 받는 거네요?

구술자: 예.

(중략)

구술자: 해마다 이제 9월이면 이게 우리 분조에 인원수에 가족 수에 그람수의 통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자: 통계를 집계하는군요.

구술자: 집계해서 내년 봄에 한 1월 그럴 때면 직속 5조는 몇 정보인데, 계획이 양배추 몇 평 배추 몇 평 무 몇 평 알곡밭에

몇 평,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해갖고 누구는 몇 평이다. 해놓죠.

연구자: 그러면 이렇게 포전에 옥수수, 콩, 감자를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는 계획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구술자: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식구 옥수수밭, 감자밭, 콩밭 이게 분조 당 몇 평수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합계가 1,950평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 사례1)

사례2의 농장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포전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분조포전, 개인 담당포전, 그리고 식량땅. 분조포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분조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모두 수매된다. 분조포전 중 일부 포전은 개별 농장원이나 개별 세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짓도록 분배된다. 이 포전은 개인 포전 또는 개인 담당포전이라고 부른다. 원칙대로라면 개인 담당포전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일정 수매계획을 채우면 나머지는 개별 생산자의 몫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담당포전의 생산물도 대부분 수매된다. 마지막으로 식량땅인데 1인당 30평씩 계산하여 가구 구성원의 수에 해당하는 크기의 경지를 개별 가구에 분배한다. 사례2의 농장에서는 경지의 조건이 다른 데에서 오는 불만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분조포전의 농사에는 관심 없고 개별 담당포전 농사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속 분조원들의 전체 식량땅을 특정 포전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가구별로 나눠 농사짓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사례2의 농장에서는 포전의 유형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포전에 알곡을 재배하였다.

연구자: 근데 농장원들은 자기 포전에서만 일하는 거야 아니면 또 공동으로 어디 가서 항상 정해진 노동 공수만큼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 논 같은 경우는 자기네 분배 몫으로 조금 막 내놓고는 공동으로 다뤄야지 개인이 못 다룬단 말이야.

연구자: 그러면은 이 공동 포전의 일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나가서 여기서 일을 하고 내 거는 틈틈이 하는 거예요?

구술자: 그러니까 네 포전 다 다루라 하고 전부 거기에만 붙어있질 않고 어쨌든 공동으로 달아서 국가에다 내놔야 될 식량도 있으니까 균양미도 빨아내고 뭐 뿔도 빨아내고.

연구자: 이걸 분조에서 한다는 거죠?

구술자: 그렇죠. 분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연구자: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매일.

연구자: 그러면 내 포전에 옥수수나 벼 이런 거는 언제 심는 거예요?

구술자: 그럴 때는 오늘은 개들 저거 심는다 이거 심어라 하면.

연구자: 아 시기가 정해져 있구나.

구술자: 시기가 정해져서 뭐 째째 부지런한 사람은 그저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 와서 자기 포전 다 매고 가고, 껌껌하더라도 매고 가고, 솔직히 아무리 잘 심어놓고 비료 많이 줘도 김이 많으면 수확을 못하거든요.

연구자: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짓는 이 포전, 이걸 뭐라고 부르죠?

구술자: 분조 포전이지요 뭐.

연구자: 저기는 여기서 짓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수매를 하는 건가요?

구술자: 예.

(중략)

구술자: 개인이 농사짓는 것도 개인 포전 있고, 식량땅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분조 포전에서 너희 분조원에 한해서 식량 땅 이만큼씩 나눠줘라. 기술지도원이 따라다니면서 분조 장하고 같이 이거는 김갑돌이네 식량땅. 이거는 뭐 윤플플이네 식량땅 하고 나눠주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다룬단 말

이에요. 개인 포전에다가 식량땅을 같이 주면 솔직히 자기 땅만 다루지 이거를 제대로 다.

연구자: 개별 담당포전은 여기는 또 지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수매예요?

구술자: 그렇죠 다.

연구자: 그러면 개별 담당포전과 이 식량땅.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구술자: 식구별로 다르죠. 한 사람 앞에 30평.

연구자: 1인 30평?

구술자: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우리 세대는 식구가 많은 식구가 그저 다섯이지 지금 다.

연구자: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4인 가족 120평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0평이 개별 담당포전인가요?

구술자: 120평은 식량땅이고.

연구자: 아 이게 식량땅.

구술자: 이게 식량땅이고. 그 다음에 개별 포전은 국가가 솔직히 너희 농사 잘 지어서 계획만큼 하면 나머지는 너희 먹으라. 요구가 그거거든요.

연구자: 분조 포전에는 주로 뭘 심고 이 개별 포전이랑 식량땅에는 각각 뭘 심는지 다 다른 건가요?

구술자: 아니죠. 다 강냉이 심죠.

(중략)

연구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땅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 있고 토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소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받을 수도 있고 개별 포전이나 이 식량땅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척박한 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요?

구술자: 식량땅 주는 건 1000평 되는 정도에서 다 몰아주기 때문에 땅은 다 비슷해요. (북한이탈주민 사례2)

(2) 포전담당책임제의 효과: 선전 사례와 경험 사례의 비교

북한 문헌과 매체는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소출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농장원의 분배몫이 크게 늘어났다고 선전한다. 예를 들어, 연탄군 수봉협동농장 제4작업반 분조들에서는 포전을 담당한 작업조들에서 앞그루로 양파를 심어 화폐수입을 늘리고 그 돈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여 이용한 결과 2013년에 알곡생산계획을 117%,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102%로 초과수행하고 농장원 한 사람당 평균 850kg의 알곡 현물분배를 받았다고 소개하였다.^{91/} 용천군 양서협동농장에서도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2014년에는 전년보다 알곡을 정보당 평균 1톤 이상 더 생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92/} 이 농장에서는 모든 분조들에서 한 조의 규모를 평균 4~5명으로 조직하고 각 조에 농장일꾼들과 작업반 초급일꾼들을 소속시킨 것이 성과가 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농가에는 과연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을까? 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장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사례1과 농촌에서 배급세대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 사례2를 심층면접하여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소득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농장원세대인 북한이탈주민 사례1의 경우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전에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결산분배 받는 것이 전부였다. 분배받은 식량은 쌀이나 옥수수가 아닌 감자였으며, 결산분배량은 많았을 때에는 1톤, 적었을 때에는 500~600kg 정도였다. 대부분의 농장원 가구들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체 소토지 농사를 지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1도 개별 소토지에 감자, 밀, 보리, 귀리 등 잡곡을 심었다.

91/ 위의 책, p. 75.

92/ “은을 낸 포전담당책임제,” 『로동신문』, 2015.2.6.

연구자: 식량포전 안 나눠 준 시기에는 어떻게 사셨나요?

구술자: 그 전에는 분조별로 농사를 지어서 나간 노력일을 기준으로 노력일 당 몇 kg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연구자: 그럼 그때 얼마씩 받으신 거예요?

구술자: 포전담당제 하기 전에는 그냥 감자로 탔어요. ○○리에 있을 때에는 1톤씩 넘게 탔는데, ○○리에 와서는 5~600백씩 탔는가.

연구자: 감자 외에는 탄 게 없으세요?

구술자: 나머지는 자체로 밭을 일궈가지고 모자라는 식량 보충하고.

연구자: 개인 소토지에 옥수수 같은 거 심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해결하셨어요?

구술자: 예. 옥수수는 아니고 감자, 밀, 보리, 귀리 그런걸 심었죠.

연구자: 아.. 잡곡류를 심었군요. (북한이탈주민 사례1)

하지만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에 사례1은 결산분배에서 현금으로 평균 10만 원 ~ 2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식량포전을 1인당 800평을 받았는데 여기서 옥수수 1톤을 생산하여 500kg는 국가 수매몫으로 내고 500kg는 자기분배몫으로 챙겼다. 식량포전에서 옥수수 외에도 감자 700kg과 콩 20kg을 수확했다. 식량 곡물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전보다는 이후에 개인이 획득한 식량 곡물량은 더 많아졌다. 일단 사례1이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로 획득한 식량의 규모는 “농장원식량은 인구 한사람당 260kg으로 계산한 농민필수식량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양으로 분배하여야 한다.”^{93/}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사례1은 집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일 년에 50kg 1마리를 팔아 현금수입을 얻었다. 이상의 소득활동을 당해연

93/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와 실현방도』, p. 67.

도 시장가격 및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사례1의 총 연소득은 북한 원화로 2,025,480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247.9달러 수준이다.

표 IV-3 사례1(양강도 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세대)의 연소득

내역	수량		산출
결산분배(현금분배)	10만 원~20만 원		평균 150,000원
식량포전 (800평)	옥수수	500kg	500kg×1,200원=600,000원
	감자	700kg	700kg×650원=455,000원
	콩	20kg	24kg×5,020원=120,480원
돼지	50kg		50kg×14,000원=700,000원
합계			2,025,480원(약 247.9달러)

- 주: a) 옥수수는 분배포전에서 1톤을 생산하여 500kg은 국가 수매료, 500kg만 농장원 몫
 b) 산출 방식은 사례A가 2019년 탈북하였고 해산 출신이기 때문에 2019년 해산시 시장가격 (11월1일 기준 쌀 kg 5,020원 옥수수 kg당 1,200원 감자 kg당 650원 돼지고기 14,000원 환율 1달러 8,170원)을 기준으로 함. 해산시의 시장가격은 『데일리NK』의 자료를 활용함. “북한시장동향(쌀가격),” 『데일리NK』 <<https://www.dailynk.com/%eb%bb%81%ed%95%9c%ec%8b%9c%ec%9e%a5-%eb%8f%99%ed%96%a5-%ec%8c%80%ea%b0%80%ea%b2%a9/>> (검색일: 2023.9.5).
 c) 콩의 곡물환산율은 120% 적용하여 쌀 24kg으로 계산함.
 d) 농장원 규모 100명 정도, 남새(채소)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장
 f) 알곡용 분배포전(4인 가구): 농장원 1인당 800평*2명=1,600평, 학생 1인당 200평, 연로자(부양) 1인당 150평

배우자가 군 관개관리소에 근무한 협동농장 내의 배급세대였던 북한이탈주민 사례2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기 이전 5~6년 정도 배급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한다. 농장원들은 적은 양의 식량이라도 지급되었으나 농장 내 배급세대에는 배급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에 있는 부대기 땅을 개별적으로 일궈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다. 부대기 땅에서는 옥수수 1톤, 콩 400kg 정도를 수확했다. 그런데 포전담당제 실시 이후 국가가 개인 부대기 땅을 몰수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사례2의 식량 획득량은 개별 부대기 농사를 지을 때보다는 오히려 줄었다.

연구자: 포전담당제 실시하기 전에는 어떻게 배급을 받으셨어요?

구술자: 5~6년 동안은 배급이 없었어요. 농장원들은 그런대로 조금씩 주고 그랬거든요.

연구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구술자: 뭐 수단껏.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다 부대기 일구고, 산파서 심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대로 먹고 살았던 말이에요. 근데 포전담당제가 나오면서 국가에서 개인 부대기 산을 몽땅 빼내 나무를 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부대기 부쳐먹는 것보다 더 생활수준이 못해졌지요. 뭐..포전담당제라는게 담당포전에 있는 거는 다 실어내가고 식량땅이라느걸 쪼금 받아가지고 거기엔 먹을게 별로 없거든요. 6월 중순경에 올감자 나와가지고 한 열흘가지고 먹을까...그리고 햇강냉이 나오기 전에 보리, 밀보리 나온단 말이에요. 논에도 보리, 밀 심어가지고 다시 모내기를 내오니깐 이모작하는 데 그 보리까지 먹고나면 햇강냉이 나오기까지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보릿고개예요.

연구자: 그럼 포전담당제 때 때준 식량땅 보다는 부대기 농사지어서 먹는 게 더 나았겠네요.

구술자: 나았죠. 우리집부터 배급세대라 배급은 배급대로 타면서 콩 400kg, 강냉이 1톤 나와가지고 그것도 못 다 먹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사례2)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북한이탈주민 사례2의 연소득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본인 몫으로 식량포전 60평(1인당 30평)을 분배받았는데 여기서 옥수수 200kg를 수확했다. 그리고 인민반장이었던 사례2는 농장이 바쁜 시기에 연로자나 부양가족을 노동력으로 동원해준 대가로 작업반장으로부터 비경지를 받아 밭벼 700kg(정미 기준으로 490kg)을 수확했다. 그밖에 사례2는 집에서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80kg 돼지 1마리, 토끼 30마리, 염소 3마리(두당 25kg), 그

리고 닭 20마리를 키웠다. 이상의 소득활동을 화폐수입으로 산출해보니 사례2의 연소득은 북한 원화로 3,265,000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약 408.1달러 수준이다.

표 IV-4 사례2(황해북도 협동농장 배급세대)의 농가 연소득

내역	수량	산출
식량포전 (60평)	옥수수 200kg	$1,200 \times 200\text{kg} = 240,000\text{원}$
비경지	밭벼 700kg(정미=490kg)	$5,000\text{원} \times 490\text{kg} = 2,450,000\text{원}$
가축	돼지 1마리(80kg)	500,000원
	토끼 30마리	$20,000\text{원} \times 30\text{마리} = 600,000\text{원}$
	염소 3마리(마리당 25kg)	$80,000\text{원} \times 3\text{마리} = 240,000\text{원}$
	닭 20마리(계란 10개=1꾸러미)	$8\text{천원} \times 15\text{일} \times 12\text{개월} = 1,440,000\text{원}$
합계		3,265,000원(약 408.1달러)

- 주: a) 식량포전은 1인당 30평임
 b) 산출 방식은 곡물은 수량에 당시 시장가격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고, 가축은 사례2가 당시 직접 판매가격을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함.
 c) 닭은 직접 팔지 않고 계란 판매용으로 길렀으며, 1개 꾸러미의 가격이 8천 원임.
 d) 원화는 북한 원화이며, 달러는 환율 1달러=8,000원(북한)을 적용하여 산출함.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되는 농장들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사례1과 사례2의 연소득을 비교했을 때, 농장원이었던 사례1은 획득한 곡물량은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로 인해 더 늘어났지만, 농장 내 배급 세대였던 사례2는 획득한 곡물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식량 곡물 외의 기타 소득 자원을 합하여 비교했을 때에는 비농장원인 배급세대인 사례2의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이 사례2보다 소득이 더 적었던 이유는 가축의 수 때문이다. 농장원이 아니었던 사례2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상당 규모의 가축들을 기를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알곡보다 가축의 수익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가축을 얼마나 많이 기르느냐에 따라 소득의 규모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북한 당국의 선전사례처럼 실제 경험사례에서도 포전담당책임제 실시로 농장원이 분배받는 알곡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알곡 외에 기타 소득자원을 합한 종합소득에서는 농장원보다는 농장 내 비농장원 세대가 더 높기 때문에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에 농장원의 경제적 지위가 더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농촌 내 농장원과 비농장원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득 차이의 주요 원인은 개인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이다. 농촌에서 농장원은 비농장원에 비해 훨씬 더 강한 노동통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3) 변곡점: 밀·보리농사 확대와 포전담당책임제의 위축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 노동신문이 다루는 포전담당책임제의 보도 방향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나타나는 성과들보다는 편향들이 왜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 2021년 9월 16일자 노동신문은 포전등급을 농사조건과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규정하는 문제, 경지면적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키는 문제,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없애는 문제 등 포전담당책임제의 시행세칙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잘 세울 것이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내는데 관건적이라고 하였다.^{94/}

일각에서는 2023년부터 포전담당책임제가 폐지되고 다시 집단영농방식으로 회귀했다는 견해가 제기하고 있다.^{95/} 실제로 노동신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 용어가 2023년 2월 19일자 보도를 마지막으

94/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이 나게,” 『노동신문』, 2021.9.16.

95/ “북, ‘자율 농경’ 포전담당제 폐지,” 『자유아시아방송』, 2023.3.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03032023115424.html> (검색일: 2023.6.8.).

로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전과 비교해 포전담당책임제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2023년 1월 27일자 노동신문의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밀농사 재배면적을 늘리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농장과 농장원의 영농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책임제 운영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숙천군 약전농장의 사례를 들어 밀농사 재배 확대를 둘러싸고 기존에 실시하던 포전담당책임제 운영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사 내용 중 “포전담당책임제가 보다 치밀해짐에 따라 일부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담당포전의 농사는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종자소비량을 늘이는 등의 편향들이 국부적으로 나타났다. 얼핏보면 높은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 같으나 파헤쳐보면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싹틀 수 있는 온상이었다.”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6/} 이 기사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생산 증대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던 기존의 보도 방향과 정반대이다. 오히려 포전담당책임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나타나는 ‘편향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하여 농장 운영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농촌 관련 기사들에서 “포전담당자”와 같은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7/} 특히, 밀·보리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술전습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참가대상에

96/ “밀농사의 과학화에서도 사상론이 기본이다—숙천군 약전농장의 2022년 밀농사 경험,” 『로동신문』, 2023.1.27.

97/ 포전담당제 용어가 노동신문에 등장하지 않는 2월 이후에도 노동신문에서는 종종 포전담당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검색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장성을 과학기술로 안받침해간다,” 『로동신문』, 2023.4.7.;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모내기기술전습회 진행,” 『로동신문』, 2023.5.7.; “왕성한 일욕심을 안고,” 『로동신문』, 2023.5.25.; “감매기를 힘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2023.6.8.; “다음해 밀, 보리농사를 위한 전국적인 기술전습회 진행,” 『로동신문』, 2023.9.17.

포전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 2023년도 농업증산에서 큰 성과를 낸 남포시 온천군 증악농장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증산의 비결 중 하나로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방법론있게 실시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98/}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을 뿐이지 농장 현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농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생계윤리

동남아시아 농민사회를 연구한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이 제안한 생계윤리의 개념과 작동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북한의 농촌사회를 설명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콧은 “농민생활에서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강력한 모티브라고 한다면, 농민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화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99/} 생계윤리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즉 일상적 행위를 구조화하는 사회적 통제와 호혜성의 패턴으로 마을 내에서 발견되는데,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생계윤리의 사회적 힘은 “마을 내 빈민을 위해 제공되는 보호력”이 된다.^{100/}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통제하여 좀 더 잘 사는 마을주민들(지주, 엘리트 등)에게 일정한 요구를 함으로써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파멸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장치를 만들어낸다고 스콧은 설명하였다. 스콧은 이러한 생계윤리가 전통적인 마을 형태가 잘 발달되고 식민지 지배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98/ “간석지벌에 넘치는 풍년의 기쁨,” 『로동신문』, 2023.10.16.

99/ 제임스 스콧 저,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서울: 아카넷, 2004), p. 64.

100/ 위의 책, p. 64.

스콧은 동남아시아의 정상적인 시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의 지원이나 묵인 아래서 ‘가장 약한 자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마을 내 상호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도덕적 요구가 작동하였다며, 하나의 마을이 마을로서 어떤 도덕적 결속을 가지느냐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실제 능력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 집단농업체제를 운영하는 북한 농촌에서도 스콧이 제시한 생계윤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전이나 이후에나 북한의 농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식량을 분배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조달하지 못해 생계위기에 몰린 빈민이 존재하고 농장의 작업반장이나 분조장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단위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에서는 식량조달이 어려운 세대를 ‘절량세대(絶糧世帶)’라고 부른다.

구술자: 식량 떨어진 세대. 그 절량세대는 강냉이 1kg 주면 뭐든 한꺼번에 다 먹고 또 없다고 죽어가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작업반에서 매일 한 킬로씩 그것도 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농산기 때는 어쨌든 나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농산기 때만 그래도 한킬로씩 두킬로씩 나눠주지.

연구자: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구술자: 그건 작업반에서 나눠주지. 반장이 절량세대들 한 킬로.

연구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농장 차원에서 작업반 차원에서 이런 세대들 구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예비로 갖고 있나요?

구술자: 그런건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급자 집에 한 톤 있다 하면 가서 강냉이로 받는 경우에는 2대 1로. 벼로 받는 경우에는 1대 1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꺾은단 말이에요. 꺾다가는 이거 절량세대들 먹이고 가을에 가서는 절량세대 거는 절량세대에서 제끼죠.

연구자: 공짜로 주는 게 아니군요.

구술자: 지금 식량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 이만큼 먹었으니까 가을에 가서 이만큼 제껴야 된다 하고 제끼고 주고 하니깐 점점 못 사는 세대는 계속 못살고, 지금 계속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좀 부지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땅을 줘도 그렇게 어떤 농가 세대는 내가 땅을 받았죠? 그러면 이 땅 줄게 나 지금 먹을 거 실제 달라. 결국은 땅을 파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거둬가고 그렇게 그러는 세대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사례2)

위의 구술 인용문에 나타나듯 절량세대에 대한 구호 식량이 공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절량세대의 경우 긴급구호용으로 지급한 식량의 양만큼을 가을 분배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대체로 절량세대의 경우 농사를 잘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포전을 나눠주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세대는 일정한 양의 곡물을 받고 자기 포전을 다른 세대에 넘기기도 한다. 결국 절량세대는 계속 식량이 부족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농업 생산구조의 전환

가. 밀, 보리 농사의 확대

2021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쌀과 밀·보리 중심으로 농작물배치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였다. 2014년 2월 6일 전국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식량생산을 최대도로 늘일수 있게 농업생산구조

를 알곡위주의 생산구조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식량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앞에 가장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될수록 비알곡작물재배면적을 줄이고 벼와 강냉이재배면적을 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101/} 불과 7년 만에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강냉이에서 쌀과 밀·보리로 전환하려는 중대 조치가 발표된 것이다. 후속 조치로 2021년 11월에 농장법 제5조(농장의 경영활동원칙)에 “농작물 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102/}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알곡생산구조를 벼와 밀, 보리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 차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은 주식작물로서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쌀과 밀가루의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식생활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밀가루가 식품가공적인 측면에서 활용성이 더 좋은 점도 옥수수를 대체하는 주식 곡물로 밀을 선택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에 처음으로 ‘밀가루음식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식생활에서 주식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50여 종에 15,000여 점의 밀가루 음식과 가공품들, 그리고 요리와 음료들이 전시되었다.^{103/} 눈길을 끈 것은 전시회 관련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인터뷰를 한 여성이 “우리 가정에서는 하루에 한끼쯤은 밥보다도 밀가루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었다.^{104/} 이 기사는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고 대신 값싼 밀가루의 소비를 높임으로써 식량자급 수준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01/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로동신문』, 2014.2.7.

102/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pp. 1077~1078.

103/ “보다 문명하고 풍성해질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선도해간다,” 『로동신문』, 2022.12.15.

104/ 위의 기사.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농업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밀, 보리를 이용한 음식들을 개발하여 대중화하기 위해 ‘밀, 보리음식품평회’를 개최하고, 밀, 보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을 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105/} 그 밖에도 기초식료품인 간장, 된장을 담글 때 밀을 이용하도록 기술보급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과 해주기초식품공장이 중심이 되어 맛있고 질 높은 밀된장을 생산하는 방법의 기술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받아 지방공업성이 밀간장과 밀된장 생산의 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모든 시, 군에 시달하였다.^{106/}

북한 주민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농업정책의 전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위주로 바꾸는 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고”,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설파했다.^{107/}

〈그림 IV-1〉에 보이는 김정은 집권 후 대중국 곡물 수입량의 변화는 밀, 보리농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바꾸게 된 배경을 뒷받침한다. 10년 동안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옥수수의 수입량은 계속 줄어들어 쌀과 밀가루에 비해 수입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2년간(2020~2021년)은 모든 종류의 곡물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가 2022년에는 쌀과 밀가루의 수입은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옥수수의 수입량은 오히려 더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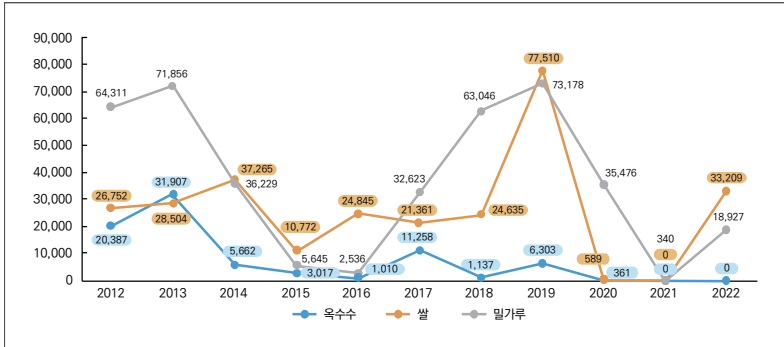
105/ “밀, 보리 음식품평회가 준 여운,” 『로동신문』, 2023.8.12.

106/ “밀을 리용한 장생산방법과 기술보급을 위한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로동신문』, 2023.6.18.

10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그림 IV-1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곡물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https://stat.kita.net/stat/istat/kpts/Kp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3.9.5.).

두 번째 배경으로는 비료 생산역량에 한계가 있고 외화부족으로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비료의 투하량이 많은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밀, 보리재배 면적을 늘림으로써 비료 공급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V-5>를 보면, 성장에 영향을 주어 시비량이 가장 많은 질소비료의 경우 옥수수는 제곱평방미터 당 15.8g이 사용되지만, 밀과 보리는 8.8g이 사용된다.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면 산술적으로 질소비료의 사용량을 44.3%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성숙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칼리비료의 경우도 옥수수는 단위면적 당 6.3g이 사용되는 반면 밀, 보리는 각각 3.7g, 3.6g만 사용되어 칼리비료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밀, 보리는 인비료의 사용량이 옥수수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약점이 있다. 2020년 5월에 순천린비료공장이 준공되었는데, 김정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할 만큼 공을 들인 중요 국가건설사업이었다.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계획이 수립될 당시 이후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정책 전환의 계획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만 순천린비료공장은 준공 후에 바로 비료생산을 하지 못해 실효성이 의심되었다. 그런데 2023년 5월 7일자 노동신문에서 순천린비료공장이 “지금 맡겨진 린비료 생산계획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됨으로써 생산가동 여부가 확인되었다.^{108/} 2022년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밀, 보리 농사에 인비료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순천린비료공장도 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표 IV-5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성분량) 비교

(단위: g/m²)

작물	질소	인	칼리
벼	9.0	4.5	5.7
보리	8.8	7.2	3.6
밀	8.8	8.0	3.7
옥수수	15.8	3.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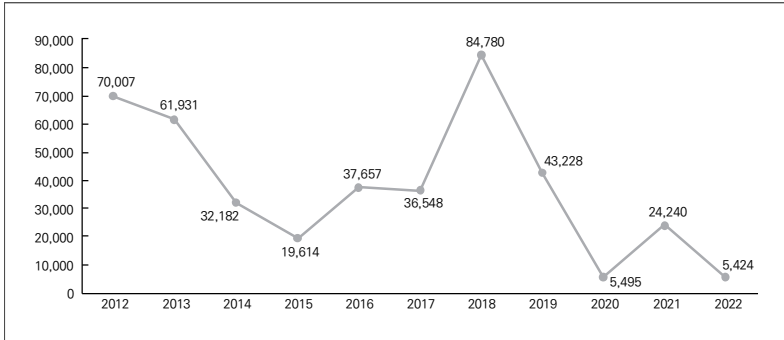
출처: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올바른 비료사용법』 (전주: 농업진흥청 기술보급과, 2022), pp. 149~150.

〈그림 IV-2〉에서 보이듯 북한의 비료 수입은 2018년에 최고 수준을 나타낸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3년에 다시 비료 수입량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8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질소비료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과 인비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순천린비료공장의 생산가동으로 자체 비료 생산 역량이 제고되어 수입비료의 의존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8/} “당대회결정을 받들어 주체적인 화학공업창설에 계속 큰 힘을 넣자,” 『노동신문』, 2023.5.7.

그림 IV-2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 비료 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북한무역,” <<https://stat.kita.net/stat/istat/kpts/KptsWholeList.screen>> (검색일: 2023.9.5.).

세 번째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식량작물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팀이 2021년 저널 『Nature Food』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하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로 빠르면 2030년에 옥수수 수확량은 24% 감소하고 반면, 밀은 잠재적으로 약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109/} 구체적으로, 연구팀의 최첨단 글로벌 작물 모델에 따르면 북미 및 중앙아메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브라질 및 중국의 곡창지대는 전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향후 옥수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온대 기후에서 가장 잘 자라는 밀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북부와 캐나다, 중국 북부 평원, 중앙아시아, 호주 남부 및 동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시 말해서,

^{109/} Ellen Gray, “Global Climate Change Impact on Crops Expected Within 10 Years, NASA Study Finds,” (NASA, November 2, 2021) <<https://www.nasa.gov/feature/esnt/2021/global-climate-change-impact-on-crops-expected-within-10-years-nasa-study-finds>> (검색일: 2023.9.23.).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현재 옥수수 곡창지대에서는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고, 밀의 재배지역은 추운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상과 같이 NASA의 예측 모델이 맞다면, 북한 지역에서 밀농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전국 범위에 적용되는 정책을 전환하는 경우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전환의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 실행에 옮긴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기존의 주식 작물인 옥수수 재배를 줄이고 대체 주식작물로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을 때는 이미 수년 전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검증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9년 당 기관지인 『근로자』에 실린 기고글에 의하면, 삼덕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는 앞그루로 밀을 정보당 최고 10톤 이상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10/} 숙천군 약전농장에서도 2022년에 앞그루밀농사로 밀재배면적을 늘여 정보당수확고 계획을 137% 초과 달성하였다.^{111/}

하지만 종자 확보, 이모작 농사로 수요가 늘어난 영농물자, 노동력 지원규모 증대, 밀농사 경험의 부족, 밀가공 시설의 부족 등과 같이 밀농사의 성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더욱이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성 재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생육이 기후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밀 농사의 속성상 단기간에 밀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는 농정의 변화가 오히려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동시에 존재한다.

110/ 최명수, “다수확운동에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 『근로자』, 제6호 (2019), p. 57.

111/ “밀농사의 과학화에서도 사상론이 기본이다-숙천군 약전농장의 2022년 밀농사경험,” 『로동신문』, 2023.1.27.

나. 대규모 온실농장의 건설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나 중요한 당 회의체의 결정에서 일관되게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수사가 등장한다. 북한에서 알곡 생산이 “식량 문제”라면, 부식물 생산은 “먹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대체로 협동농장 내에 남새(채소), 과수, 축산 등을 담당하는 작업반이나 그것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장들이 부식물의 공급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2018년경부터 김정은 정권은 또 단위별로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여 선진적인 시설에서 남새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온실농장을 도시와 같이 문명화된 농촌의 본모습을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군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장들을 온실농장으로 개조하고 군인을 동원하여 건설하게 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와는 차별화된 김정은 정권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 평양에 물질적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방에서부터 온실농장을 건설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은 2018년 중평온실농장(함경북도 경성군)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연포온실농장(함경남도 함주군)이 완공되었고, 2023년에 세 번째로 강동온실농장(평양시 강동군)이 건설 중에 있다. 중평온실농장을 건설하던 2019년 10월에 김정은은 현지 지도에서 중평온실농장과 같은 온실농장을 앞으로 모든 도에 하나씩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112/} 이러한 계획은 2021년 12월 말에

11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10.18.

개최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의 결정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확실히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협동농장이 담당하던 부식물 문제를 왜 대규모 온실농장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배경은 북한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가 주식 중심에서 부식물의 소비 증가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부식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식물의 생산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전환 배경은 신선한 채소를 사시사철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생산시설을 갖춘 농장이 새로 건설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알곡의 경우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한철에 대량 생산하여 길게 보관할 수 있는 반면에, 채소와 과일은 저장기간이 짧아 빠르게 유통시켜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낙후한 교통수송의 인프라 문제로 채소와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보관하거나 신속한 유통이 어렵다. 또한 현재 협동농장의 생산기반으로는 신선 채소를 사시사철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019년 10월 중평남새온실농장 건설의 김정은 현지도 관련 보도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전한 데서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의 의도가 드러난다.^{113/}

세 번째 배경은 주식 작물인 알곡뿐만 아니라 부식물의 생산과 분배까지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농업부문의 관리운영 방법의 변화이다. 대체로 협동농장은 알곡농사가 위주이기 때문에 남새농사의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협동농장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계획과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113/} 위의 기사.

소련의 콜호스 집단농장체계는 주요 곡물 생산의 경작에 집중한 나머지 과일, 채소, 축산, 낙농품 등의 생산에는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식물이 대체로 콜호스 소속 농민들이 경작하는 작은 개인 농지들에서 주로 생산되어 공급되었다.^{114/} 이와 같은 소련의 집단농장체계의 문제점은 북한 농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곡물과 마찬가지로 부식물의 생산에 대해서도 중앙의 계획과 지도 통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서 대규모 온실농장 모델이 채택된 것이다. 이제 알곡에 이어 부식물 생산에 대한 규모화와 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온실농장 형태의 부식물 생산방식이 추구하게 된 배경은 김정은이 선호하는 ‘본보기’ 통치방식 때문이다. 2019년 10월 중평온실농장 건설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은 “10년전에 건설한 미곡협동농장마을이 지금에 와서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가 될수 없다고, 농촌마을을 미곡협동농장처럼 꾸리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고,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남새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115/}

2019년 12월 4일 김정은이 참석한 중평남새온실농장 조업식에서 연설을 한 박봉주는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대해 “우리식 남새온실농장의 표준과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116/} 보도에 따르면, 중평남새온실농장에는 남새 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수경온실과 토양온실, 그리고 여러 생산

114/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p. 335.

115/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10.18

116/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의 조업사,” 『로동신문』, 2019.12.4.

건물과 관리건물들뿐만 아니라 살림집,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병원, 그리고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국가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과학교육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참여하여 수많은 첨단기술들을 개발하고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국산화 비중을 높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및 연관단위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필요한 기자재들을 책임지고 생산 보장하였으며, 군인가족들과 도 안의 수많은 인민들이 군인건설자들을 원호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림 IV-3 중평남새온실농장의 준공 전후 비교



출처: (상) 구글어스(촬영: 2018.8.4.), (중) 구글어스(촬영: 2020.9.17.), (하) 『로동신문/뉴스1』, 2019.12.4.,

함경북도 경성군에 중평남새온실농장이 건설된 이후 2년이 지나 두 번째로 함경남도에 연포온실농장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22년 2월 18일 연포온실농장 착공식과 2022년 10월 10일 준공식 모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였다. 착공식에서 직접 연설을 한 김정은은 연포온실농장 건설이 2022년에 가장 중요한 건설대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포온실농장은 2년 전 건설된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2배에 달하고, 천 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 공공건물들을 농장지구에 함께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건설 대상이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연포온실농장을 “수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 남새생산기지이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밝혔다.^{117/} 그리고 준공 목표일을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로 제시하였다. 이 준공일은 착공식으로부터 불과 230일이 지난 시기이다. 이러한 무리한 건설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10일 당창건일에 연포온실농장은 준공식을 하였다. 건설부지는 280정보에 달하고 생산면적은 100정보이며, 850여 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과 1,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118/}

준공사를 맡은 조용원 비서는 연포온실농장이 “우리나라 온실농장의 새로운 표준이며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119/}

117/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연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연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제111 (2022)년 2월 18일,” 『로동신문』, 2022.2.19

118/ 위의 기사.

그림 IV-4 연포온실농장 준공 전후의 전경



출처: (상) 구글어스(촬영: 2019.3.26.), (하) 『로동신문/뉴스1』, 2022.10.11.

2023년 2월 15일에 세 번째 대규모 온실농장인 강동온실농장의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강동온실농장은 평양시에 있는 강동비행장을 부지에 건설되는 것으로 완공된 이후에는 평양시민들에게 생산한 채소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포온실농장 건설이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다면, 강동온실농장 건설은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건설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착공식에도

119/ “련포온실농장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10.11.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였다. 연포온실농장 준공사에 이어 강동온실농장의 착공사를 맡은 조용원 비서는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총비서 동지께서 완공된 런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런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수준이 더 높은,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을 전하며, 강동온실농장이 당의 농촌혁명구상과 현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로운 “농장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120/}

그림 IV-5 강동온실농장 착공 전 부지 사진과 조감도



출처: (상) 구글어스(촬영: 2020.10.11.), (하) 『로동신문/뉴스1』, 2023.2.16.

^{120/}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어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로동신문』, 2023.2.16.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개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통해 몇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온실농장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리 단위 수준의 마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수백 동의 온실뿐만 아니라 농장의 근로자들이 살 살림집,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다닐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그리고 병원 및 각종 편의봉사 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이 함께 건설됨으로써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형태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온실농장이 공장이나 기업소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온실농장은 지능화, 집약화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장비들이 갖춰졌다. 또한 온실농장의 근로자들은 농민이 아닌 노동자계급이다. 따라서 농장의 경영과 관리도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온실농장의 지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 준공된 중평남새온실농장은 “우리식 남새온실농장의 표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라고 하였다. 2022년 10월에 준공된 연포온실농장은 “우리나라 온실농장의 새로운 표준”,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지위를 규정하였다. 2023년 2월 착공된 강동온실농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로운 농장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김정은 정권에서 건설된 온실농장들의 지위는 표준→본보기→거점→새형의 농장도시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3. 농업생산의 대중동원 방식의 변화

가. 농촌살림집 건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목표 중 하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이다.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종대과업으로 제시”하며,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라고 보고했다.^{121/} 하지만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진료소, 탁아소, 편의시설 등 농촌의 공공서비스 시설의 개선보다는 농촌살림집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더욱이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이 농업 생산의 다수확단위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문명화된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보다는 다수확 경쟁에 농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유인 수단으로서 농촌살림집이 활용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이후 국가의무수매계획이 상향되고,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부활로 농장의 경영권 행사가 축소되었으며, 포전담당책임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는 식량 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안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이 대두되었다.

농촌살림집 건설이 국가 중점 사업으로 채택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얼마 후 2022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5호로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12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이 법의 제25조 (시, 군건설세멘트배정) “시, 군에서는 농촌문화수준이 락후한 농장가운데서 알곡생산계획수행률이 높은 농장부터 먼저 세멘트를 배정해주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밑줄 강조-필자)는 규정을 통해 농촌살림집 건설이 다수화 경쟁에 농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유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2/} 또한 동법 제26조 (시, 군건설세멘트리용)는 “세멘트를 농촌살림집건설에 쓰지 않고 문화회관건설이나 도로포장 같은것을 하는데 먼저 쓰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제한 부분에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정책 목적의 후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123/}

노동신문에서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관련 보도들을 보면, 살림집 입사증을 받은 입사자들은 입사 모임을 조직하고 토론에서 당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새땅찾기운동, 다수화운동 등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알곡과 남새, 축산물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결의”를 하거나^{124/}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결의”를 피력하였다.^{125/}

2023년에는 노동신문에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새집을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걱정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실제 새 농촌살림집에 입주한 농장원들의 실명 기고를 연재함으로써 정책 선전효과를 높이고 있다. 황주군 장천농장 농산 제3작업반 안향순 농장원은 “저는 지난해 당의 은정속에 새집을 받아안고 다수화농장원의 영예까지 지닌 복받은 주인공들중의 한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126/}

122/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p. 124.

123/ 위의 책, p. 124.

124/ “로동당시대 문화농촌들에 차넘치는 인민의 기쁨-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농장마을에서 근로자들 새 살림집 입사,” 『로동신문』, 2023.1.19.

125/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시대에 복받은 인민의 기쁨-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장마을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다,” 『로동신문』, 2023.1.21.

126/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새집을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걱정의 목소리,” 『로동신문』, 2023.7.31.

아래 인용문은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숙천군 약전농장의 제14작업반 윤복순 반장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글의 요지는 올해 작업반의 생산성고가 높아졌는데, 새 농촌살림집을 배정받은 농장원들이 다수확농장원이 되어 당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한 결과에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작업반에는 어느때없이 혁신자들의 대렬이 부쩍 늘어나고있습니다. 올해 올곡식농사만 놓고보아도 거의모든 농장원들이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은 생산성고를 이룩하였습니다. (중략) 지난 1월 우리들은 당의 사랑어린 새 농촌살림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피와 땀을 깡끄리 바쳐서라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고를 이룩하여 당의 은정에 보답할 굳은 결심을 더 해주었습니다. 1분조의 선동원들은 나를 찾아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분조원들모두가 다수확농장원이 되어 당의 은덕에 보답하도록 하는데서 선동원의 본분을 다해갈 결심을 터놓는 것이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농장원들도 저마다 올해에는 꼭 농사를 잘 지어 다수확의 성과로 당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불같은 맹세들을 다지였습니다. (중략) 새집의 주인들모두가 혁신자가되고 다수확농장원이 되자는 것이 나와 우리 작업반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1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혁명강령’의 중점 사업의 하나인 농촌살림집 건설의 1차적 목적이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유인과 보상의 기제로서 살림집을 제공함으로써 다수확운동에 농민대중을 동원하는 데 있다.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를 통해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높여 다수확을 꾀하고자 했던 정책적 시도는 새 농촌살림집을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127/}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새집을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격정의 목소리,” 『로동신문』, 2023.9.5.

그 밖에도 농촌살림집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 농촌 혁명강령의 정당성을 입증할 과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인민대주제일주의의 성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전략이라는 이점을 있다.^{128/} 또한 지방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지방공업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생산연계 효과도 있다. 일례로 단천시의 경우 농촌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수십 종, 수만 점에 이르는 전자재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자체 생산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성과를 보여주었다.^{129/}

〈그림 IV-6〉은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 개최 이후 새로 건설된 농촌살림집의 공급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한 것이다.^{130/} 〈그림 IV-6〉에서 그래프로 표시한 지역별 수치는 노동신문에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관련 보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새 농촌살림집이 가장 많이 공급된 지역은 함경남도(28건)이고,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평안북도(24건)이며, 세 번째 순위는 황해북도(22건)이다. 반면 자강도(14건)와 양강도(12건)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림 IV-6〉과 〈표 IV-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농촌살림집 건설 성과가 지역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관련 보도들에서 양강도 사례는 2023년 6월 최근에서야 등장하여, 공급 규모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 측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멘트 공급 원칙과 정면

128/ 통일연구원 편,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66.

129/ “현장협의회와 문제해결방도,” 『로동신문』, 2023.2.27.

130/ 노동신문에 실린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또는 입주모임 관련 기사를 기준으로 공급 현황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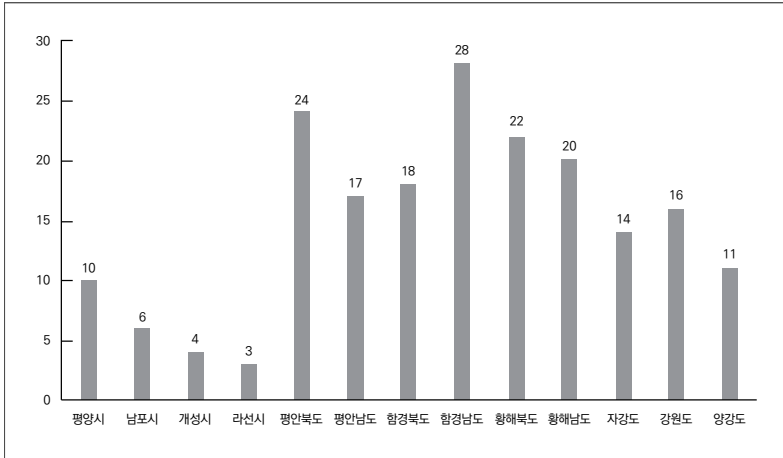
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동법 제21조는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촌문화살림수준이 한심하고 제일 뒤떨어진 국경연선을 비롯한 시, 군부터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계획대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대로라면 농촌문화살림수준이 제일 뒤떨어진 국경연선인 양강도와 강원도에 농촌살림집 건설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IV-6>과 <표 IV-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규정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낙후 지역이 먼저냐 아니면 다수확 지역이 먼저냐’라는 두 가지의 기준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대체로 농업 비중이 높거나 농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 농촌살림집이 다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 농촌살림집 공급이 생산력 증대를 위한 보상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은 노동신문에 실린 농촌살림집 새집들이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023년 1월까지의 새 농촌살림집을 공급받은 대상을 농장의 작업반 또는 분조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아마도 새 농촌살림집을 공급받은 작업반 또는 분조는 해당 농장에서 다수확작업반 또는 다수확분조일 가능성이 높다. 농장, 작업반, 분조의 이름을 세세하게 보도한 것은 더 많은 농장과 농장원들이 ‘다수확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2023년 2월부터는 새 농촌살림집의 공급 단위에 대한 보도의 형식이 리 또는 군 단위 수준으로 넓어지면서 더 이상 공급 단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의 살림집 공급 규모가 1백 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종종 구체적인 수치가 보도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더 이상 공급되는 살림집 세대 수가 보도되지 않았다.

그림 IV-6 지역별 농촌 새살림집 공급 규모 비교

(단위: 건)



출처: 『로동신문』 기사(2022.4.~2023.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6 시기별 농촌 새살림집 공급 현황

연월	공급 현황
2023.10.	(양강도) 김정숙군 송전농장, 김형권군 직설축산농장, 도농촌경리위원회 포성농장, 보천군 가산농장, 운흥군 심포농장, 풍서군 우포축산농장
2023.8.	(평안남도) 증산군 석다농장, 북창군 남상농장, 신양군 인평농장, 양덕군 태흥농장, 녕원군 마근담축산농장 (평안북도) 위원군 읍농장 (자강도) 룡림군 도양농장, 화평군 가림농장, 랑림군 읍농장 (강원도) 철원군 마방농장, 김화군 초서농장, 회양군 강돈농장, 창도군 교주농장 (양강도) 해산시 강구남새농장, 김형직군 대웅농장
2023.7.	(강원도) 천내군 풍전리, 고성군 순학리, 세포군 현리, 평강군 지암리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노동자구 (자강도) 은정남새농장, 동신군읍농장, 전천군 학무남새농장, 성간군 동산농장, 향산군 태평농장, 송원군 읍농장, 고평군 문덕농장, 중강군 중덕농장, 자성군 운봉농장

연월	공급 현황
2023.6.	(평안남도) 덕천시 신성리, 문덕군 립석리, 은산군 송화리, 대동군 마산리, 성천군 온정리 (평안북도) 의주군 서호리, 벽동군 송련리 (황해남도) 벽성군 장해리, 은률군 이도포리, 태탄군 부양리, 송화군 구탄리, 봉천군 석사리, 신원군 월당리, 삼천군 고현리, 신천군 송오리 (자강도) 초산군 양토리, 시종군 약샘리, 자강군 장평리 (강원도) 판교군 지하리, 이천군 지당리, 법동군 룡포리 (양강도) 대흥단군 삼장리, 백암군 만정리, 갑산군 사평리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리
2023.5.	(평안북도) 천마군 신시농장, 녕변군 룡화리, 박천군 기송리, 운전군 삼광리, 구성시 상단동, 선천군 건봉리, 운전군 운하리, 동림군 보성리, 삭주군 청수남새농장 (평안남도) 안주시 송학농장 (황해북도) 신계군 원교리, 연산군 옥덕리, 신평군 선암리, 중화군 월은리, 토산군 양사리 (황해남도) 장연군 석장농장, 배천군 역구도리 (강원도) 안변군 상음농장, 통천군 명고리 (남포시) 룡강군 후산농장
2023.4.	(평안북도) 피현군 송정리, 창성군 회덕리 (평안남도) 회창군 신지동리 (황해북도) 금천군 현내리, 평산군 청학농장, 서흥군 문무리, 연안군 라진포리 (황해남도) 해주시 장방리, 은천군 마무리, 재령군 신환포리, 청단군 신생리, 웅진군 대가리, 은파군 초구리 (강원도) 문천시 관풍동
2023.3.	(황해북도) 상원군, 름산군 (함경남도) 요덕군, 고원군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남포시) 온천군, 항구구역의 농장마을
2023.2.	(평안북도) 철산군 원세평리, 운산군 니답리, 객산군 초장리, 룡천군 동신리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리 (황해북도) 승호군 삼청리, 송림시 청운리, 곡산군 문양리, 수안군 산북리 (자강도) 우시군 대운리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룡암리, 청암구역 부거동, 연산군 삼포리, 화대군 양촌리, 부령군 사하리, 명천군 고참리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리, 덕성군 장흥리, 함흥시 흥남구역 마전리, 회상구역 동흥리, 사포구역 호전동의 농장마을들 (남포시) 대안구역 다미리 120여 세대

연월	공급 현황
2023.1.	(평안북도)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선상농장 소재지 마을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 소재지, 순천시 풍탄농장 소재지, 평원군 운봉농장 농산 제2, 6, 10작업반 (황해북도)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월릉농장 농산 제4작업반과 축산작업반, 은정축산농장 소재지, 황주군 장천농장 농산 제9, 12작업반 (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농장 농산 제4, 5작업반과 독립1분조, (함경북도) 청진시 송성농장 소재지, 경흥군 송향농장 농산 제1, 2, 3작업반, 온성군 왕재산농장 농산 제3작업반, 명간군 신양농장 농산 제2작업반, 김책시 림명농장 남새작업반, 무산군 독소농장 소재지 (함경남도) 함흥시 수도농장 농산제4작업반, 고원군 상산농장 농산 제2, 4작업반, 허천군 금창농장 농산 제1, 2작업반, 부전군 문암농장 농산 제3, 5작업반, 리원군 송정농장 소재지, 락원군 은술농장 농산 제2, 3작업반마을, 함흥시 동흥산구역 부만농장 남새 제1작업반, 흥덕구역 룡산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남새 제3작업반, 신흥군 창서농장 농산 제3작업반 (자강도) 만포시 연포농장 제2작업반과 독립1분조, (남포시) 와우도구역 령남농장 소재지 마을
2022.12.	(평양시)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장수원농장 소재지, 구서농장 제2, 5작업반 수백세대,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소재지, 강남군 장교농장 소재지 수백세대, 대성남새농장 제4, 10작업반,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농장 소재지와 농산제3작업반, 형제산구역 형산남새농장 농산 제3, 5작업반, 락랑구역 남사농장 소재지, 은정구역 배산남새농장 제5작업반, 력포구역 소신남새농장 소재지 135세대 (평안북도) 정주시 신천농장 소재지, 염주군 내중농장 소재지, 구장군 수구공예작물농장 소재지,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태천군 룡흥농장 소재지와 농산 제1작업반마을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 농산 제4작업반과 청년분조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농장 농산 제5, 9작업반 (황해남도) 안악군 굴산농장 농산 제2작업반, 강령군 평무농장 농산 제1, 2, 6작업반 (함경북도) 경원군 사수농장 농산제1작업반, 청진시 어유농장 소재지와 농산 제2작업반, 축산작업반,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길송농장 농산 제3, 7작업반, 경성군 염분농장 소재지 250여 세대, 어랑군 팔경대리 소재지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남새농장 남새 제2작업반, 함주군 련포농장 농산 제4, 5작업반마을, 신포시 보주농장 농산 제1, 3작업반, 정평군 향동농장 농산 제2, 5작업반, 흥원군 호남농장 농산 제4작업반마을, 장진군 백암리 백암농장 농산 제2작업반

연월	공급 현황
	(강원도) 원산시 중용리 소재지 120여 세대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남새농장 남새 제2작업반과 농산 제7작업반, 룡강군 후산농장 소재지 마을, 강서구역 덕흥농장 농산 제1, 2작업반 (라선시) 라진구역 라진상하수도사업소 무창농축산물생산분사업소 소재지와 축산작업반, 선봉구역 선봉어린이식료공장 구룡평축산물생산분사업소마을 250여 세대
2022.11.	(함경남도) 련포온실농장, 금야군 룡원농장 농산 제1, 2작업반, 북청군 문동과수농장 농산 제3작업반 (함경북도) 회령시, 창효리 살림집 120여 세대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백수십세대 (개성시) 덕암농장 수백세대 (남포시) 온천군 금성리 수백세대 (라선시) 라진구역 신태동 120세대
2022.9.	(황해북도) 송림시 광천닭공장, 연산군 수백세대
2022.8.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리 600세대 (함경남도) 청단군 금학지구 200여 세대
2022.4.	(황해남도) 재령군 장국리 수백세대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신흥군

출처: 『로동신문』 기사(2022.4.~2023.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농촌지원 방식의 변화

농촌혁명강령 발표 이후 농업부문의 대중동원 방식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촌핵심역량의 보충을 위해 제대군인과 청년들의 농촌 자원진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는 ‘농촌지원열풍’을 일으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개최 이후 “농업부문에 종사하든 안하든, 농업부문과 련관이 있든 없든 그 어느 단위라 할것없이 물심량면으로 농촌을 돕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농촌지원 참여를 충성심의 기준으로 규정하였다.^{131/}

^{131/} “자기 단위의 잠재력을 초월하여 농촌을 돕는 기풍을 확립하자.” 『로동신문』, 2023.6.5.

우선,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농촌에 파견함으로써 그들이 농촌발전 구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들을 농촌 간부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군인들을 농촌에 많이 파견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김정은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주의농촌을 도시부럽지 않은 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농촌에 적극 탄원할 것”을 주문하였다.^{132/} 농촌에 파견된 제대군인들은 농장과 작업반, 분조를 이끄는 초급간부로서 그리고 농촌의 과학기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133/} 제대군인에 이어 청년들의 농촌 자원 진출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134/}

제대군인과 청년의 농촌 파견만으로는 단기간에 식량 증산의 성과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어렵다.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의 12개 중요고지 중 알곡 생산이 첫 번째로 달성해야 할 고지가 되면서 전당, 전 국가, 전민이 농사에 총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원사업은 거름 지원과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영농작업에 노동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개최 이후 농촌지원 방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우선, 농촌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이 성, 중앙기관, 각 도, 시, 군, 기관, 기업소, 공장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단위특수화를 없애는 원칙에서, 밥먹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135/} 농촌지원사업이 계획, 조직, 집행되었다.

132/ “우리 당이 키운 사회주의농촌의 핵심, 산울림제대군인들,” 『로동신문』, 2021.3.3.

133/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제대군인들의 핵심적역할,” 『로동신문』, 2021.5.11.

134/ “자강도의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자원진출,” 『로동신문』, 2023.7.6.

다음으로, 모든 단위와 성원들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를 책임지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장원의 생활보장 및 농장의 운영을 후원하는 것까지 지원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아래의 인용문은 과거와 달리 농촌지원사업이 단순히 노동력 지원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농촌에 대한 지원은 결코 로력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전선을 함께 지켰다는 자각을 가지고 로력지원과 함께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농촌에 필요하고 부족한 모든것을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것이 바로 농촌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어느한 경공업공장에서는(중략) 농사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들을 통이 크게 보내주고 농장원세대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성의껏 조직하였을뿐 아니라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까지 적극 후원하였다.^{135/}

최근 북한 매체에서 농촌지원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물자지원 방식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단위별 농촌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다. 예를 들어, 함주군당위원회는 농장에 “가루거름과 개바닥흙 등을 가지고 생산한 5천여 톤의 유기질복합비료와 800여 톤의 소식회”를 공급하였다.^{137/} 염주군 여맹위원회에서는 소농기구전시회를 조직하여 출품된 30여 종, 3만 4,000여 점의 소농기구를 20여 개의 농장들에 보내주었다.^{138/} 외무성 간부와 직원들은 모내기 기계와 파종기계, 연유와 트랙터 타이어, 소농기구를, 정보산업성은 트랙터 타이어, 발동발전기, 농약 등을, 국가영화총국은 트랙터 및 농기계부속품과 연유를, 국가해사감독국은 연유와 비닐을 담당농장에 보냈다.^{139/}

135/ “농촌지원방식이 달라졌다-함주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23.6.6.

136/ “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23.7.5.

137/ “농촌지원방식이 달라졌다-함주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23.6.6.

138/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 『로동신문』, 2023.5.10.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당, 국가, 사회의 모든 단위와 구성원들이 담당 농장과 작업반에 필요한 노동력과 영농 물자를 ‘책임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지원 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 스스로 올해 농촌지원을 “전례없는 규모의 지원”^{140/}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올해 농사 작황이 좋았다고 보도했다. 비료, 농기계, 관개시설 등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관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농사 작황 결과에 기여한 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당, 전국, 전민의 전례없는 규모의 농촌지원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농촌발전 전략이 올해에 보여준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과연 궁극적으로 농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39/ “농촌에 대한 로력적, 물질적지원 강화,” 『로동신문』, 2023.5.9.

140/ “자기 단위의 잠재력을 초월하여 농촌을 돕는 기풍을 확립하자,” 『로동신문』, 2023.6.5.

V. 농촌발전의 본보기 정책

박희진(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농촌발전의 본보기 정책

북한은 2021년 12월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촌혁명 과업을 제시하고,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건설”할 것을 최종대 사업으로 제기하였다.^{141/} 김정은은 정치·외교적 중대 결심 시기마다 백두산-삼지연을 찾아 삼지연군이 혁명의 성지로서 “이 세상 그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릴 것”을 강조해왔다.^{142/} 그러나 이전 시기 혁명의 성지로서 삼지연시 개발이 강조된 것과 2021년 이후 새로운 농촌혁명 모델로서 삼지연시가 거론된 것은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없다.^{143/}

1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1.1.

142/ “경애하는 최고령동자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12.9

143/ 기존연구를 보면 삼지연시의 본보기적 특성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박성열·정원희·한지만이 삼지연시를 백두혈통의 세습권력의 상징성으로 해석한 반면, 최대식은 관광도시로서의 삼지연에 주목했고 황진태는 농촌의 도시화 사례로 보았고, 오삼언·박소영은 북한 원립화의 본보기로 강조하였다. 박성열·정원희·한지만,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집 1호 (2022), pp. 31~77; 최대식, 『삼지연군 건설사업 리뷰』, 『북한토지주택리뷰』, 제3집 1호 (2019), pp. 44~53;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체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02, 2022.1.12.), pp. 1~9,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464&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9.5.); 오삼언·박소영, “북한 삼지연시 건설의 특징과 의미,” 『통일인문학』, 제92집 (2022), pp. 7~10.

김정은 정권은 사리원시 미곡리 협동농장을 두고 10년 전 농촌 본보기가 현재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향후 본보기 사업은 계속 창조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144/} 북한이 최근 제정한 ‘시, 군 발전법’만 보아도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 등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발전을 위한 모범의 창조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145/}

북한의 본보기 사업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정책 과업이 제시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삼지연시 모델은 김정은식 농촌 본보기로서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김정은식 농촌 발전 구상을 담지하고 있는 (신)농촌 본보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농촌 본보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촌 본보기는 언제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소멸되는 것인가. 또 북한의 농업발전전략에서 차지하는 농촌 본보기의 위상과 정책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 장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농촌 본보기라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정권별 농촌 본보기를 찾아 그 전개 과정을 검토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과 이전 정권과의 농촌 본보기 형성발생 차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촌발전전략이 지닌 차별성과 특징을 설명한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한계와 지속가능성 및 미래 전망을 농촌 본보기 사업을 통해 재구성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본보기’란 사전적 용어로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의미한다.^{146/} 또 본보기란 전형(典型)을 포함하여 교훈(거울)

144/ “경애하는 최고령동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9.10.18.

145/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시, 군 발전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21> (검색일: 2023.9.5.).

으로 삼을 만한 것, 상징이나 예표로 제시되는 모범의 개념도 포괄한다. 영문 표기로 본보기는 ‘example’ 또는 ‘model’로 표기할 수 있는데, 전자가 본받을 만한 간단한 사례로 모범 혹은 예시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후자는 본을 받을 만한 사례가 전형성 즉, 내용과 형식을 갖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농촌 본보기가 모범, 전형, 본보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model’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보기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국가사업으로서 본보기 사업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식견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근대 국가의 관리들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사회로부터 몇 단계 혹은 적어도 한 단계 정도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전형을 통해 사회의 삶을 평가하고 여러 개별적인 사실들을 큰 패턴으로 정리하기 위한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관리들에게 전형화는 정치적으로 필수적이며, 국가의 단순화는 크고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기법으로 “끝없이 세분화된 집합체를 한 세트의 범주로 줄임으로써 요약된 설명과 비교 그리고 집적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한다.^{147/} 나아가 국가는 단순화를 통해 소형의 유토피아 공간 개념을 투영시킬 수 있게 된다. 소형화된 시범사업은 정치가나 행정가, 전문가에게 불량의 변수와 미지의 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명료하게 정의된 실험 영역을 그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48/} 즉,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본보기 사업은 외부세계의 충격을 극소화하고 내부 통제는 극대

14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3.8.30.).

147/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pp. 130~131.

148/ 위의 책, pp. 388~391.

화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 열망을 완벽하게 상징화하는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당과 수령이 추진하는 모든 국가 사무는 명백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49/} 역대 본보기 사업에서도 본보기의 선정과 추진과정 모두 정치(사상)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제임스 스콧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본보기라는 소형화, 시범화, 상징화 사업을 통해 그들의 유토피아적 열망을 가시적으로 재현하며, 본보기의 형성 파급 과정을 통해 리더십의 구축, 권력 기반의 조성, 통치수단으로의 활용, 대중선동 및 대중의 통제장악 방법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 김정일 정권의 대흥단군,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삼지연시의 세 본보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농촌 본보기의 형성과 구분

가. 본보기의 형성

북한의 농촌 본보기 형성은 사회주의농업발전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노정을 걸으며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기별 정책을 구현할 때마다 여지없이 농촌 본보기가 등장하였으며,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빠른 속도와 계획의 완수, 실적의 높은 달성을 위해 ‘모범’이라는 칭호 부여제도와 ‘따라 배우기’라는 실천 활동을 강조하여 왔다. 즉, 농촌 본보기는 농업정책을 현장에 관철·실현하기 위한 강위력한 지도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149/}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중앙의 지시를 혁명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22.2.24.

북한에서 처음 본보기가 등장한 것은 내각 결정 제86호(1956.9.4.) “모범농업협동조합 창조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데 관하여”와 “모범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150/} 김일성 정권은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농업협동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고, 1954년 1월부터 ‘농업 협동경리 조직 문제에 대하여’라는 지시를 통해 농업 협동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북한의 농업 협동화는 단순히 농산물의 증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북한은 농업 협동화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적 경제 형태를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로 전면 개혁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수월하게 이루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에 따른 식량 수급 문제를 농업 협동화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화에 동참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다수확작물 면적의 확장, 관개수리 및 각종 선진 영농방법을 보급하고, 알곡증산 성과를 통해 농업협동화 정책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모범협동조합 창조운동은 농촌경리의 과반수를 포괄하는 대상들에게 ‘모범’ 칭호를 부여하며 농업협동화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진행되었고, 10만 원에 해당하는 농기구, 문화시설, 기자재 등을 시상하며 모범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151/} 그 결과 1958년 북한에서 최초로 평안남도 개천군이 농업계획의 부문별 초과실행단위로 선정되었고, 문덕군이 다수확 생산단위로, 양덕군이 축산업에서 성과를 보인 모범단위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도 황해남도 봉화군, 안주군 남칠리, 선흥군 서산리 등이 모범협동조합으로 선정되었다.^{152/}

150/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7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p. 35.

151/ 김한주,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생과 발전,”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 개인농 경리로부터 협동 경리로 1』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경협집 편집위원회, 1958), p. 21.

152/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8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121

북한 당국은 농업협동화에 소극적이거나 농업협동화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모범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빠른 농업협동화를 독려하고자 하였으며, 농업협동화의 우수성과 정당성을 다수의 모범협동조합이 형성된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초기 ‘모범’이라는 사회주의적 모델들을 선발 포장하고, 이들에 대한 모방 확산운동을 통해 일군의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당국의 의해 의도된 본보기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나. 본보기의 구분

북한에서 전형성을 뚜렷하게 갖춘 농촌 본보기가 등장한 시점은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료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된 후부터이다. 북한에서 농촌 본보기의 첫 등장은 청산리협동농장이며, 김일성 정권 시기에는 청산리협동농장 이후 주체농법이 정립되고 확산되는 농촌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농촌 본보기가 등장하였다. 김정일·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해당 시기별 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 까지도 새로운 농촌 본보기를 창조되고 있다.

각 정권별로 대표적 농촌 본보기를 추출하고, 이의 전개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간행물인 『조선중앙년감』을 기준으로 1956년부터 2016년까지^{153/} 매년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 각 연도별 농업분야에서의 성과, 모범 단위의 선정, 다수화 협동농장의 출현, 대표적인 축산·가금·남새·과수협동농장의 유형 등을 정렬하고

^{153/} 대북경제제재와 코로나위기를 거치면서 조선중앙년감 자료의 입수는 2017년 이후 제한되었다.

분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별 농촌 본보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징에 따라 정권별 대표적 농촌 본보기를 추출하였다.

먼저,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어떤 협동농장이 본보기로 선정되는가의 문제이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농법이 가장 극명한 기준이 되었다. 영농작물, 영농시기, 영농방법 등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다수확 생산실적을 거둔 협동농장이 대표적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사회주의강행군 정신에 따라 자립적 생산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생산증대보다는 고리형순환생산방식, 양어장 병행, 대체작물로서 감자생산 등 자립적 생존 단위들이 농촌 본보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적 개건현대화와 특색 있는 농촌공간의 조성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획적 배치와 꾸밈이 강조되고, 경관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 있다.

둘째,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형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 형성 방식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에서는 자발적 증산 단위가 발굴되어 농촌 본보기로 제시되는 경우도 다수 실재하였다. 또한 모범을 따라 배우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촌 본보기가 새로운 농촌 본보기로 대체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하였다. 또 경험발표회, 사례보고회 등 경험교류 방식으로 하부 단위에서 전개되는 농촌 본보기의 파급 확산 방식도 존재하였다.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오로지 국가에 의한, 국가가 만든 모범 협동농장만이 농촌 본보기로 지정되었고 따라 배우기로 확산되거나 자발적 모범단위가 생성되는 경우는 전무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국가에 의한 농촌 본보기가 제시되는 한편 다수의 따라 배우기를 진행하고 있어 김정은식 새로운 모범과 본보기가 거듭 창조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사업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종자·비료·물·작황·분배체계의 사업 영역에서 본을 보였다. 또 농촌정리의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를 총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농촌 본보기들이 시행한 논에 물을 대고,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구체 방식을 따라배우기 하도록 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시기에 요청되었던 자립생존의 사상적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감자, 양어, 물고기, 버섯, 염소, 타조 등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시하고 이를 따라배우기 하도록 하였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 비전과 생활에의 이상향을 제시하며 농촌꾸미기에 본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농촌살림집 건설을 추동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에 지방공업 및 교육 문화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농민들의 계급성을 고양시키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정권별 본보기를 <표 V-1>과 같이 구분하고 정권별 대표 농촌 본보기를 추출하여 정권별 본보기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표 V-1 정권별 본보기의 구분

정권별	본보기 대상	본보기 유형	본보기 방식
김일성 시기 농촌 본보기	지배적 이념 투영 주체사상 주체농법 다수확농장 단위	국가적 모범 자발적 모범 모범따라배우기	본보기방식의 파급 확산 사상보급 중심 사회주의농법 지도
김정일 시기 농촌 본보기	지배적 이념 투영 군사우선 식량해결 자력갱생농장 단위	국가적 모범	본보기정신의 파급 확산 고난의 행군/사회주의강행군 자립생존방식 강조
김정은 시기 농촌 본보기	지배적 이념 투영 과학기술 지방발전 특색농장마을 단위	국가적 모범 모범따라배우기	본보기공간의 파급 확산 공간계획, 건설물 배치와 건축 노동의욕고취와 계급성 강화

출처: 저자 작성

2. 김일성 정권의 주체농법과 청산(리)

김일성 정권은 집권 시기가 긴 만큼 다양한 농촌 본보기들이 창조되고 형성, 발전했다. 김일성 정권에서 농촌 본보기는 사회주의 농업정책의 집행 관철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형성한 국가적 농촌 본보기가 다수이며, 모범의 칭호로만 보면 사회주의 모범의 천국을 이룰 정도로 수없이 많은 모범과 본보기가 존재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김일성 시기의 농촌 본보기를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농촌 본보기가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 주체농법과 농촌 본보기

김일성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농업지도체계 본보기, 다수확 본보기, 지방공업 및 원료기지 본보기, 기타 본보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업지도체계 본보기이다. 대표적으로 1960년 청산리 협동농장과 1961년 숙천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그것이다. 북한의 농업사에서 농업협동화 정책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수립을 이룬 역사적 분기점에 위치한다. 북한은 농업협동화 이후 협동경리에 대한 당적 지도체계를 수립한 청산리와 숙천군의 농촌 본보기를 당의 영도방법 및 영도예술로 승화시켰으며,^{154/} 오늘날까지도 북한 농업생산 지도체계가 형성된 최초의 역사적 본보기로 추앙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수확 본보기이다. 북한은 농업지도체계를 수립하고 1964년 농업부문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확정하게 된다.^{155/} 농촌테제는 집약적 영농방법(심경, 밀식, 다량시

^{154/}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예술』 (서울: 지평, 1989), pp. 164~172.

^{155/}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7.

비)을 통해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를 이룰 것을 총적 목표로 제시한 북한의 농업발전전략이다. 김일성 정권은 테제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다수확농장, 수리화농장, 기계화농장 등의 농촌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모범농장원에서부터 모범농산작업반, 모범축산농장, 모범가금농장, 모범과수농장, 모범농촌수리화농장, 모범농촌기계화농장 등등 수많은 모범 단위를 배출해 내었다. 특히 다수확 본보기들은 어렵고도 힘든 곳에서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지어 다수확 생산을 이룬 곳들이 지정되어 북한의 주체농법과 지도자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본보기로 기능하였다.

세 번째는 지방공업, 과수, 축산, 가금부문 본보기이다. 북한은 1961년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의 지방공업, 농촌경리, 상품류통, 교육, 문화, 보건 6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 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1962.8.8.)’를 개최하였다.^{156/} 이 회의는 북한의 지방공업, 지방산업 발전의 원형이 되는 회의로서 당시 창성군은 북한의 오지로 가장 못사는 지역 중 하나였는데, 본보기 사업을 통해 식료공장, 직물공장 등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창성각과 국수집, 은덕원, 소년회관, 유치원 등을 건설 배치하여 지방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낸 곳이다. 이후 북한은 제1회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1970.2.24.)를 개최하고^{157/} 지방원료기지 조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존 농산 농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축산, 과수, 가금 분야 등 각 부문별 농촌 본보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과수, 축산, 가금 부문의 농촌 본보기는 초기 국영(혹은 도영)농장, 국영기업소 형태의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

156/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63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 4~19.

157/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p. 225.

에 국가의 집중 투자와 본보기 조성사업의 결과로 형성된 곳들이었다. 그러나 국가 투자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도 산하 부문별 본보기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경쟁운동만 요란하게 진행되었다. 본보기 사업이 소형화, 시범화, 상징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으로 보편화, 대중화, 지속화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부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타 본보기들이다. 북한은 1980년 ‘간석지 개간 및 새땅찾기’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간석지 개간 및 다락밭, 부침땅, 새땅찾기를 중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이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촌 본보기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1989년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25주년을 맞아 농업이 발전한 만큼 ‘농촌의 중앙 난방화와 가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더 큰 목표를 제시하였다.^{158/} 그리고 김일성 정권의 마지막 농촌 본보기는 전국농업대회(1994.2.25.)에서 밝힌 협동적 소유 단위를 전인민적 소유 단위인 국영농장으로 전환할 데 대한 방침에 따른 본보기였다.^{159/} 마침내 1994년 12월 19일 만경대구역 내 협동농장들과 국가기업소는 전인민적 소유의 국영농장으로 전환하여 만경대구역 국영농장이 되었다.^{160/}

김일성 정권에서 형성된 농촌 본보기는 북한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변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선정할 때부터 정책적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였으며, 농촌정책의 정당성과 농촌정책을 펼치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농촌 본보기

158/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9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0), p. 121

159/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95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p. 16.

160/ 김두환, “만경대협동농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17526>> (검색일: 2023.6.5.).

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농촌 본보기들이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으며 그 성과를 전국에서 따라 배우도록 구체적 사업지침으로 만들어 전달하였다.

또한 김일성 정권 시기 농촌 본보기는 주체농법의 구현과 ‘식량증산, 다수확’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단위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와 같은 별방지대에 위치한 협동농장들이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어 본보기로서의 상징성은 극대화 하였지만, 이의 본보기가 전국에 파급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표 V-2>에서 보듯 1980년 이전까지는 농촌 본보기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새로운 농촌 본보기가 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농촌 본보기의 증감 추이는 농업정책의 확산, 파급효과와 관련성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많은 농촌 본보기가 창조되고 형성발전 할수록 농업생산은 성과를 나타내 보이며, 농촌 본보기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표 V-2 김일성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전개과정

해당년도	선정 계기	선정 대상	선정 의미
1960년 2월	농업협동화 이후 농업지도체계 수립	청산리협동농장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1962년 8월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농촌경리 발전	창성군, 삭주군 지방산업공장	지방공업 지방경제발전
1964년 2월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집약적 영농방법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해당 방침을 모범적으로 실현한 단위들

해당년도	선정 계기	선정 대상	선정 의미
1970년 2월	전국지방산업일군 대회	지방공업 발전 과수업/축산업/ 가금업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원료원천기지 단위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간석지개간 및 새땅찾기	다락밭/ 산간지대 간석지	관련 지역에 신규 협동농장 조성
1987년 2월	사회주의농촌테제 25돌	지방의 여러 도시와 농촌마을 살림집건설	사회주의문화 농촌건설 사리카트 벽돌집 건설
1994년 2월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만경대국영농장 숙천군농업연합 기업소	농업협동조합의 소유제 전환

출처: 저자 작성

나. 청산리 본보기의 재생산 메커니즘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협동농장은 북한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협동경리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가급 본보기이다. 따라서 청산리 본보기의 형성과정과 유지 작동의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일은 북한의 농촌 본보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방법이 된다.

아래 〈그림 V-1〉 원편의 동그라미는 청산리협동농장의 위치이다.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에 위치하며 평양역에서부터 직선거리 21km 떨어진 200~300가구의 자그마한 협동농장이다. 오른편의 사진은 2019년 청산리협동농장의 위성사진이다. 평양-남포 청년영웅도로 옆에 위치하며 혁명사적지 조성과 포전 사이 현지 지도비가 청산리협동농장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V-1 청산리 본보기의 위치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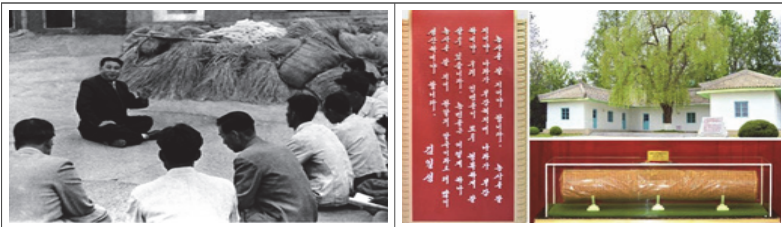


출처: (좌) 구글어스(촬영: 2019.11.9.), (우) 구글어스(촬영: 2023.4.16.).

북한은 1962년 이후 청산리협동농장을 국가급 본보기 모델로 격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사를 부여하고 북한 사회주의의 지배이념이 투영된 본보기 공간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즉, 청산리 모델은 1962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다듬고 보강하며 국가 지배이데올로기의 상징체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 일차적 서사는 <그림 V-2>로 대표되는 김일성이라는 상징 인물에게 부여하는 영웅 서사이다. 당시 김일성의 현지지도로부터 시작한 청산리 본보기는 김일성이란 인물의 인간적 소탈함과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타산하고 계획하는 리더십의 발현, 물질적 조건이 월등하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작은 협동조합을 나라에서 제일가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켜낸 감동과 흙모의 수령 추앙의 영웅 서사로 만들어냈다.

그림 V-2 청산리 본보기의 상징인 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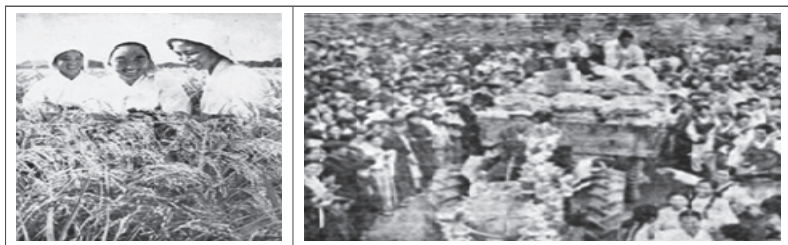


출처: (좌)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서울: 웅진닷컴, 2004), p. 164. (우) 『로동신문/뉴스1』, 2020.5.10.

당시 청산리 농장을 방문한 김일성은 탈곡장 마당에 명석을 펴고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였다고 한다.^{161/} 그리고 현재 청산리협동농장 사적관에는 사진과 같이 당시의 명석이 전시되어 있다. ‘명석’이 곧 청산리협동농장을 상징하며, ‘명석’은 청산리 모델이 전달하고자 하는 수령의 인간됨, 위대성, 충실성의 대표 서사인 셈이다.

그러나 농촌 본보기는 위의 서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수령의 혁명적 영도의 우월성은 생산실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한다. 그런데 때마침 현지도도 이후 1960년 청산리협동농장에는 대풍이 들었고, 청산리 농민들은 집마다 평균 알곡 3.2톤, 현금 436원을 분배받았다.^{162/} 북한은 “온 나라가 중농 수준으로 되었다.”라고 환호했다.^{163/} 〈그림 V-3〉에서 보듯 (좌)는 청산리의 풍년을 알리는 것이고, (우)는 청산리협동농장의 최대령 조합원 부녀가 100여 가마니를 결산 분배받고 환호하는 사진이다.

그림 V-3 청산리 본보기의 성과와 결산분배



출처: (좌) “청산리에 풍년이 들었다,” 『로동신문』, 1960.9.15. (우) 『로동신문』, 1960.11.21.

이때부터 청산리협동농장은 대풍의 농장이 되어야만 했고, 대풍을 가져오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161/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서울: 웅진닷컴, 2004), p. 164.

162/ “자랑찬 총화, 청산농업협동조합에서,” 『로동신문』, 1960.11.21.

163/ “이 땅에 나래치는 청산리정신,” 『로동신문』, 1960.11.19.

북한이탈주민 사례4는 청산리협동농장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군대에 화선입당 후 3대혁명소조로 파견을 나가 청산리협동농장에서 사상교양원으로 활동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는 청산리협동조합이 북한 농사의 시작이자 기준이 되었다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구술했다.

연구자: 청산리가 좀 농업이 잘 되는 협동농장인가요?

구술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농업이 잘 된다, 이런 것들 다 보면 남포시나 황해도 보면 다 곡창지대예요. 남포시는 좀 곡창지대는 아닌데 황해도 쪽에 평안도 증산 쪽에 다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청산리는 조그마한 농장이예요. 크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농업이 백프로가 아니에요. 축산도 있고 뽕도 키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과수도 있고 다양한 말이죠. 근데 현지지도 하면서 제일 가까운 데를 택한 거죠.

연구자: 그러면 현지지도하고 나서는 청산리가 좀 농사수확물이 많아졌나요?

구술자: 당연하죠. 왜냐면 그때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면서 청산리에서 생산량이 나와야지만 다른 협동농장들이나 다른 지역 군 도시의 협동농장들의 본보기에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나와야 된다고 했죠. (중략) 해마다 저희가 있을 때도 청산리에 첫 뭉치를 심은 것도 청산리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본보기를 내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황해도가 더 따뜻하거든요. 황해도 무슨 농장에서 신천 농장에서 모내기를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 청산리에서 벌써 모를 심었다 시작됐다 모내기를 하면서 이제 노동신문에 짝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탁 나오면 아 이제부터 모내기 시작이로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보름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먼저 시작하는 걸로. 날씨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열흘이든 어쨌든 하루든 먼저 이렇게 본보기로. (북한이탈주민 사례4)

또 1971년 김정일 위원장은 청산리협동농장을 농촌기계화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북한이탈주민 사례4에 의하면, 농촌기계화의 본보기라는 이유로 언제나 청산리협동농장은 트랙터를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으며, 매해 농사를 시작하는 알림을 하며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리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의 구도조차 정해져 있다고 했다.

구술자: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를 때는 노동신문이나 촬영하고 TV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계화된 그걸 보여주지만 기계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하려던 열흘이든 먼저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끝마쳤다 보도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끝냈다는 것까지. 6월 중순까지 청산리 모내기를 100% 마쳤다면 또 보도가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또 맞추려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제 받아가지고 학교든 기업소든 들어와서 찍 해주고 그다음에 또 찍 빠지지. (북한이탈주민 사례4)

그림 V-4 청산리 본보기의 이미지 연출



출처: “영광의 땅에서 올해의 첫 모내기 시작,” 『로동신문/뉴스1』, 2022.5.11.

이렇게 전형이 된 청산리 본보기는 전국 농장원들의 견학 장소이자 일반대중의 혁명 순례지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지배담론과 가치체계를 보급·확산하는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북한이탈주민 사례4는 3대혁명소조원으로 청산리협동농장에 파견을 나가 3년 동안 작업반별로 교양사업을 조직하는 사상교육사업을 담당했다.

구술자: 당연하죠. 견학 왔어요. 이제 전화로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
예요. 어디 학교에서 며칠에 견학 온다 하고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수첩에 일정을 적어놓고 그때 되면 저도 어디 못 가요. 못 가고서 지키고 있다가 강사가 있어요. 전적지 강사가 거기 항상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비서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오면 이제 강사가 나가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해주고. 그때는 이제 작업반에 작업반장들한테 오늘 일반 갈 거야 일반도 이거 하는데 잘해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쪽에 가고. 또 어떤 데는 야 농산반 가서 뽕밭에 가서 누에 키우는 거 다 보여주고 할 거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다 스케줄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 또 가고. 다 체계적이예요. (북한이탈주민 사례4)

청산리 본보기가 보여주는 본보기의 재생산 메커니즘은 ①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창조 신화와 함께 ②(국가 혹은 대중)영웅의 감동적 서사, ③국가 투자와 집단 노력의 충분한 결과와 보상, 그리고 ④본보기 지정 이후 사상정치 학습으로 활용 등이 순환되며 본보기를 지속 확산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청산리 본보기를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조건은 대중의 공감과 설득을 유도해 내기 위한 필수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우월하고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본보기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누가 보아도

힘든 조건에서 탁월한 수령의 지도와 강인한 혁명정신을 소유한 인민대중의 자발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본보기만이 국가 모델로서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청산리 본보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제임스 스콧이 말한 소형화, 시범화, 상징화의 요건을 모두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시 인근의(거리/시간) 적당한 규모(규모)의 포전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크고, 불필요한 낭비와 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가까운 거리가 갖는 효과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불안 변인이 최소화하고 내부의 성과확산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산리 본보기는 농가 200~300가구의 적은 규모이나 인구수에 비해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 시험포전으로 매우 적당한 규모이다. 평양에서 불과 1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 농업정책의 실험과 검증이 가능한 협동적 소유의 농장이며, 인근의 천리마구역, 대안구역의 대공장이 분포하고 있어 도로, 전기, 용수 등의 기초 인프라 시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노동력과 농기계 지원만으로도 농업생산 증대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농촌 본보기로서의 생명력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명석’과 같은 상징요건을 갖추고, 전국에서 답사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를 전담하여 해설 선전 및 조직 교양을 책임지는 3대혁명소조원을 안정적으로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정치사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안배하고 있다. 청산리 본보기에 관한 긍정적 감화 교양과 사회주의 농촌의 전형성에 관한 학습효과는 오늘날까지 청산리 본보기가 유지되고 지속되는 결과를 파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갖춰진 청산리 본보기의

농장원들은 스스로 그들의 삶에 대해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사는 것과 같은 은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3. 김정일 정권의 식량난과 대흥단(군)

가. 경제난과 농촌 본보기

김정일 정권의 집권 시기는 짧았고 1990년대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었다. 김일성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체농법은 비옥도가 떨어지는 농지와 공급되지 않은 비료, 멈춰서버린 농기계와 물 부족, 전력부족, 땀감부족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 간고분투, 사회주의강행군 정신을 강조하여 실용적으로 당장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증산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사농사혁명방침 등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부터 대대적인 토지정리사업과 물길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풀 먹는 짐승을 기를 데 대한 축산기지 건설, 닭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164/} 이 중 김정일 정권은 감자는 밭곡식의 왕이라고 하면서 감자를 제3의 주식으로 부각시켜 부족한 식량의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전 시기와는 차별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가 등장하게 된다.

첫 번째 농촌 본보기는 양강도 대흥단군이다. 양강도 대흥단군은 1군 9개 노동자구로 편제된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종합농장이다.^{165/}

164/ 김영훈, “김정일 정부의 농업정책,” 『북한경제리뷰』, 제10권 10호 (2008), p. 22.

165/ 북한에서 1개의 군이 모두 기업소 체계로 편제된 곳은 양강도 대흥단군이고 인근 백암군이 1읍 14개 노동자구 4리로 편제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국영종합농장이다.^{166/}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10월 1일 현지지도에서 감자 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고 대흥단군을 종합적 기계화가 완전히 실현된 본보기 농장으로 형성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167/} 당시 김정일 정권의 감자농사혁명은 감자 농사로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고 감자를 주식으로 하여 쌀 중심의 식생활을 바꾸려 했던 식량정책인 동시에 농업정책의 변화를 의미했다.^{168/}

대흥단군 본보기는 매우 특수한 위치의, 특수한 조건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로 조성된 농촌 본보기이다. 한 개 군을 본보기 단위로 지정하여 감자농사 일체의 과정 뿐 아니라 농사 이후 저장 및 보관, 유통, 식품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기술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감자 생산의 증대를 위해 해외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기술 교류도 적극 시도하였다.^{169/} 대흥단군 본보기는 이전 김일성 정권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적 현대화와 해외 기술교류까지 도입하는 등 감자는 식량대체 식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었다. 이의 본보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166/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지난날 버림받아오던 북부 고지대를 개발하여 살기 조은 고장으로 전변시킬 것을 구상하여왔습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넓은 북부 고지대를 개발하고 큰 규모의 국영농목장들을 창설하고 개발시키면 그 고장 인민들은 우리 인민 정권의 혜택으로 더 잘살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북부 고산지대 개발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1952.9.2.),”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97~202.

167/ 김정일, “감자 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1998.10.1),”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34.

168/ 변선희, “북한 대흥단군의 감자농업연구,” 인제대학교 통일학석사학위논문, 2019, p. 31.

169/ 감자 생산량은 1995년 44만 톤에서 2005년 2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김영훈, “김정일 정부의 농업정책,” p. 24.

김정일 정권은 또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부터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작업분조의 규모를 축소하여(5~10명) 생산과 분배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생산계획의 할당 목표를 낮추어 분조가 추가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과 생산분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 분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하여 가격, 임금, 환율을 조정하였고, 쌀의 국정 구매가격을 농민시장에 근접한 가격으로 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농업개혁 정책이 반영된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두 번째 농촌 본보기는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 협동농장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본보기가 내세워졌다. 범안리 본보기는 당시 전력생산이 부족하여 중소형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방침이 전달된 상태에서^{170/} 주변 저녁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온수로 양어장을 지은 농장이다. 협동농장 자체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물고기를 공급함으로써 농장의 식생활을 향상한 사례로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171/}

170/ 북한은 1995년 12월 ‘전력법’을 채택, 2001년에 최종적으로 수정·보충하였다. 동 법령의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6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며 중소형 발전소의 전 군중적 건설원칙을 명문화한다. 예년지난이 극심해지자 1998년에만 약 5천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가 전국 각지에서 건설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00년도까지 이어졌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북한의 「중소형발전소법 제정 배경과 전망」”, 2016.11.21.,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244> (검색일: 2023.6.5.).

171/ 김정일은 2001년 7월11일 범안리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고,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했다.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2002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2), p. 55.

세 번째 농촌 본보기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리 협동농장이다. 미곡리 본보기 역시 김일성 시기부터 황해북도를 대표하는 다수화 농장이었다. 2008년 군인건설자에 의해 새롭게 현대화를 마친 미곡리 협동농장은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일터를 꾸린 농장’으로 주목 받았다. “잘 꾸려진 선전실, 합숙의 침실, 식당, 부식물창고, 취사장 등을 갖추고 산기슭에 늘어선 아담한 문화주택과 트랙토르 줄대열..” 등을 “한 폭의 그림처럼 사회주의선경”의 농장이라고 칭송했다.^{172/}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주의 선경(仙境)이라는 용어는 미곡리 본보기 때부터 등장한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농촌 본보기는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이다. 이곳은 척박한 기후조건과 냉해가 심각하여 알곡소출이 매우 적은 농장이었다. 동봉리 본보기는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농산물 생산을 증대한 곳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잦은 현지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모뜨는 기계를 창안 제작하고 사회주의 농촌 기계화의 진지를 구축했으며,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여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는 등 동해지구의 본보기 농장으로 만들어내었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 시기 속에서 간고분투하였지만, 새로운 농촌 본보기를 창조해 내고 이를 확대해 가진 못했다. 대신 본보기 단위를 기존 생산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대시켰고, 살림집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까지 포함한 농촌 본보기 조성을 시도하였다. 농촌 본보기가 사회주의 선경의 모습을 갖춘 이상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알곡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배작물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감자 등의 부식물을 주곡식으로 삼는 방법까지 새로운 제안을 농촌 본보기에 담았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172/ 김정일, “미곡협동농장은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p. 33~41.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개혁에 준하는 생산-분배의 분권화, 쌀 및 농산물 가격 인하, 수매가격 현실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본보기는 형성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일 정권이 농업개혁에 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 시기 개혁 본보기 모델을 창조해 내고 이를 파급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표 V-3 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전개과정

해당년도	선정계기	선정대상	선정의미
1998.10.01	정책전환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양강도 대흥단군	공산주의 본보기농장
2001.07.11	현지지도 범안발전소, 범안양어장, 범안협동농장 문화주택	서흥군 범안협동농장	사회주의 선경
2008.12.12	현지지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의 선봉역할 수행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전국 본보기 단위로 사회주의 선경
2011.07.07	현지지도 사회주의 농촌기계화 메탄가스화 실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동해지구 본보기농장

그림 V-5 범안리·미곡리·동봉리 농촌 본보기



출처: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8.6.4.



출처: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09.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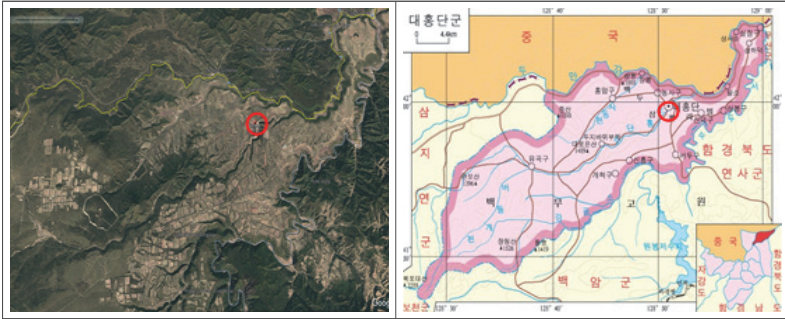


출처: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09.6.9.

나. 대흥단군 본보기의 기술혁신 메커니즘

양강도 대흥단군은 지리적으로 왼편에 삼지연군, 오른편에 무산군을 둔 고원분지의 척박한 군이다. 김일성은 산이 많고 농경지가 제한된 북한 지역에서 서해안 지역에서만 농사를 하여서는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이유로 양강도 대흥단군을 5호 농장으로 창설하였다. 대흥단군 형성의 특별한 배경이야기는 북한 이탈주민 사례3으로부터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림 V-6 대홍단군 본보기의 위치



출처: (좌) 구글어스(촬영: 2020.10.13.), (우) 북한지역정보넷, “양강도 대홍단군,” <<http://www.cybernk.net/search/SearchDetail.aspx?litSelfType=1&litword=%ec%96%91%ea%b0%95%eb%8f%84+%eb%8c%80%ed%99%8d%eb%8b%a8%ea%b5%b0&ID=SYSTEM>> (검색일: 2023.9.5.).

북한이탈주민 사례3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고아 출신으로 1954년 대홍단 5호 농장을 만들 때 제대군인으로 무리배치 받아 정착한 1세대 대의 가구원이라고 소개했다. 말하자면 대홍단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사례3은 대홍단군이 이전에 무산군이었으며 재북 당시 이곳이 “김정일의 생모하고 김일성이 같이 무산지구 전투에 승리할 때 있었던 곳, 여기 두 사람의 혁명 역사가 깃들었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한 것”이라고 교양 받았다고 한다. 또한 대홍단군이 모래땅인데다가 대륙풍 바람이 불어와 감자 종자가 바람에 날리워 감자 농사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 김일성이 1968년 이후 방풍림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내려 “이 종파분자들은 대홍단군을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방풍림을 조성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라며, 종파책동을 반대하고 하나의 본보기 군으로 만든 김일성의 영도 업적이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탄생부터 특별한 대홍단군은 김일성 정권 시기 종파책동을 반대하며 탄생한 본보기 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주의 국영종합농장의 군으로, 우대받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를 받아 왔다

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3에게 대홍단군은 사실 “공산주의 문턱까지 온” 고향으로 기억되고 있었으며,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막힘없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연구자: 자라시면서도 그렇게 먹는 문제로는 그런 고생해보진 않았군요.

구술자: 여기는 밭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각밭이 아니고 밭 한 개가 이십 정보, 삼십 정보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으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일성이 본보기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계로 농사를 지어요. 기계로 농사를 짓고 비행기도 서두 비행장이 있었어요. 대홍단군 서두 비행장에 이제 약 뿌리는 기계가 여름철에 약 뿌릴 때 되면 비행기가 낮게 떠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면서 양쪽에 약 뿌리는 그 날개를 달고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서 농약을 뿌리고 가을에도 감자 가을걷이 할 때는 기계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과 때는 그 서두 비행장에 동태라든가 뭐 냉동 생선이 바다하고 멀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토지라고 하게 되면 대홍단군이 이깎나무가 많은데 그 방풍림이 이깎나무인데 이깎나무 뿌리가 이제 사람들 건강에 안 좋대요. 그 토질병 비슷하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해산물을 해마다 이렇게 비행기로 날라왔던 거죠. 그래서 냉동 해산물을 먹고. 자체로 키운 돼지라든가. 이게 축산이라는 게 한 집에 돼지 다른 데는 옥수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돼지가 별로 없지만 감자는 감자를 갈면 그 감자 까리가 있잖아. 애를 가지고 먹이면서 한 집에 한 마리씩 돼지는 무조건 다 키웠던 거죠. 그래서 고기문제도 해결하고 기름도 이제 그 삼장(노동자구)에서 생산하는 콩을 가지고 기름을 생산해 자급자족은 했던 거죠. 다만 공업품이 부족했을 뿐이지.

연구자: 그럼 공업품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구술자: 공업품은 배급제 때는 평양에서 바로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고 평양 계획경제가 망하게 되면서 감자와 공업품을 맞바꾸는 시기였던 거죠. (북한이탈주민 사례3)

공산주의 문턱이라 했던 대흥단군은 1990년대 경제난을 맞아 감자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감자가 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감자 부족에 더욱 시달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감자농사 혁명을 강조하며 양강도를 ‘감자도’로 지정하고, ‘대흥단기풍’, ‘대흥단일본새’라는 사상혁명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전 시기와 달리 과학기술적 접근을 제일 먼저 시도했으며, 과학기술에 의한 감자농법 연구를 토대로 하여 증산을 도모하였다. 증산을 위해 제대군인 1,200명을 배치하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100마력의 트랙토르를 지원하여 대규모 감자농사를 실속있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173/}

북한이 감자 농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옥수수 소출이 파생하는 문제 때문이다. 30년 넘게 북한의 발작물로 기능했던 옥수수 단작 체계는 옥수수 소출이 많아 식량 생산에는 보탬이 되지만, 단작 재배를 지속하게 되면 토양이 급속히 산성화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옥수수와 달리 감자는 단위면적당 칼로리 생산량이 높아 식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료와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곡물 수확 이전인 6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하여 춘궁기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높다.^{174/}

대흥단군 본보기는 김정은 정권의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라 전면적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본보기로 창조 형성되었다. 이전 시기와 다른 측면에서 대흥단군 본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3/ “종자가 감자 농사의 성과를 결정한다,” 『로동신문』, 2000.12.10.

174/ 홍민, “북한의 ‘감자농사혁명’의 의미와 감자 주식물 요리,” 『통일뉴스』, 2001.1.16.

첫째, 대흥단군의 본보기 조성은 김정일 정권의 감자농사 방침이었고, 감자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과학기술의 도입이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씨감자 생산체제로 감자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감자연구소는 전통적 생산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으며, 월드비전, 카리타스 등 남한과 국제 민간단체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원종자개량과 조직배양 생산체계 도입, 영농방법의 과학화를 실현하였다.^{175/} 붉은 감자 종자 도입, 무비루스 통알 감자 심기방법 등은 감자농사를 풍년에 이르게 한 동기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감자농사 혁명이 풍년의 결실로 이어지자 김정일 영도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대흥단군 정신’, ‘대흥단군 일본새’ 등의 경제난 시기에 요구되는 정치사상 구호를 배출해 내며 이 성과를 파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대흥단군의 영웅 서사는 무리 배치된 1,200명의 제대군인들이다. 북한의 영화 「북 받은 대지」는 이의 서사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176/} 제대군인과 평양에서 온 처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이들의 이름을 ‘대흥이, 단군이’로 지은 사례도 전국으로 퍼져 대흥단군 본보기의 파급효과를 더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3은 당시를 이렇게 상기했다.

그때 1000명이 들어올 때 평양 처녀들이 김정일이 말씀을 받든
다고 평양 처녀들이 들어왔고 그 평양 처녀들과 제대군인들이 결혼

175/ 김영훈, “김정일 정부의 농업정책,” p. 24.

176/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견된 제대군인 출신의 마을 청년들, 농림대학을 졸업한 감자박사 현심, 감자농사를 돕기 위해 온 평양처녀들로 인해 대흥단은 활기가 넘친다. 대흥단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광풍이 잦아 감자생산에 어려움이 많지만 제대군인과 평양처녀들이 가정을 꾸려 대흥단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들은 고질적인 대흥단 감자농사의 방해꾼인 역병과의 싸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 몇 해가 지난 후 대흥단은 최고의 수확량을 내게 된다. 홍원철·오영립 영화문화, 진종팔 연출, <<조선예술영화> 북 받은 대지에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10, 80분.

해서 낳은 아이가 김정일이 보고 이름 지어달라 했는데 “남자면 뭐 대흥이, 여자면 흥단이라고 지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흥이 흥단이가 나왔던 거죠. 제대군인들 결혼시킨다고 살림집도 싹 다 지워주고.. (북한이탈주민 사례3)

셋째, 대흥단군 본보기는 본보기의 파급 확산 방식도 조금 달랐다. 대흥단군은 이미 공산주의 문턱에 다다를 만큼 군 단위 마을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가호호의 살림집과 주변 시설들이 잘 가꾸어진 곳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사례3에 의하면 각 집마다 축구장 만한 크기의 대규모 감자저장고가 있었으며, 모든 것을 평양시 기준으로 공급받아왔다고 전했다. 즉, 대흥단군 본보기는 그 파급 대상이 ‘감자’였고, ‘대흥단군 정신’이었다. 이에 감자생산 및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각종 영상물이 제작되어 매체를 타고 대중선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 대흥단군 본보기는 감자생산에 그치지 않고 감자가공음식을 개발하여 각종 요리 및 음식문화선전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넓혔다.

그림 V-7 대흥단군 본보기의 감자음식 품평회



출처: 전종팔 연출, “(조선예술영화) 북 받은 대지에서,” 『조선의 오늘』, 2022.10.15. <<https://dprktoday.com/videos/4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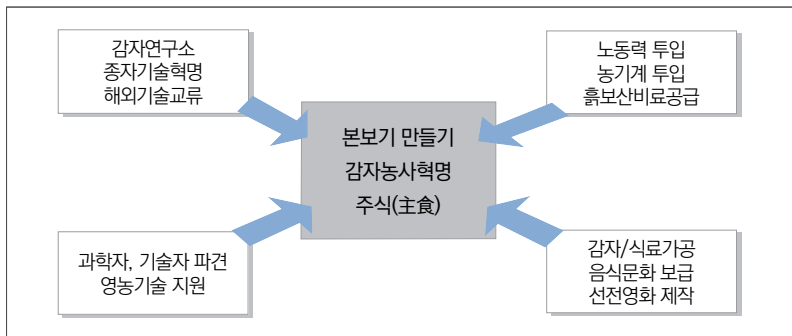
그림 V-8 전국의 감자요리 경연대회



출처: “제9차 광명성절요리기술경연,”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2.15.

대흥단군 본보기는 경제난 시기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77/} 2013년에는 가구당 약 8개월분에 해당하는 560kg을 분배했으며, 2015년에도 1998년 이래 감자생산 최고치라는 대풍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178/} 이처럼 대흥단군은 현재까지 본보기로서의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V-9 대흥단군 본보기의 기술혁신 메커니즘



출처: 저자 작성.

177/ 대한민국 통일부, “대흥이와 흥단이는 누구일까?(feat. 북한의 감자이야기),” 통일부 블로그(2020. 4. 27.)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932359745>> (검색일: 2023. 6. 9.).

178/ “감자농사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 『조선의 오늘』, 2015.12.26.

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김일성 정권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적고 전국적 견지에서 농촌 본보기가 형성 파급되지 못했다. 농촌 본보기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정책을 관철 침투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소형화, 시범화, 상징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를 보였다.

김정일 정권은 사회주의 선경의 개념을 제시하며 농촌마을 단위의 본보기 조성을 시도했다. 이전 시기에는 종자심기방법, 비료주기방법, 논물대기방법, 농기계 설치 및 활용방법, 간작방법 등 협동농장별 증산을 한 이유를 찾아 이를 본보기 삼았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마을단위 본보기를 강조하였으며, 이 변화는 김정일 정권의 자력갱생 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체의 생산 및 생활단위를 하나의 본보기로 형성하여 자립생존 및 자력갱생 하도록 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농업발전 문제를 과학기술 도입과 기술 교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대홍단군 본보기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홍단군 본보기의 성공은 노동력과 농기계가 아니라 과학기술적 접근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북한이 저발전 농업 상태를 탈피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며,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을 해석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변화이다.

4. 김정은 정권의 농촌 진흥과 삼지연(시)

가. 농촌경리의 공고화

(1) 수해복구건설

북한의 농업정책은 일관되게 집약화된 농촌경리를 통해 다수확 알곡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농촌 본보기로 선정된 몇몇 농촌마을들이 마을꾸미기를 전개했지만, 이는 부차적인 사업에 그쳤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생활 환경은 오랫동안 낙후하고 낡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북한 당국이 농촌생활환경 문제를 정책적 의제로 삼은 계기는 2020년 7~9월에 닥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복구하면서이다. 당시 북한은 태풍 8호(바비)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 등의 농경지 및 살림집 1만 6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연이어 태풍 9호(마이삭)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해안가지대 살림집도 붕괴되었으며, 검덕지구 일대가 침수되는 등의 약 2천 여 세대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179/} 급기야 김정은은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으며, 황해남북도 일대의 농경지 침수를 복구하기 위해 전당, 전군의 복구건설을 촉구하였다.^{180/}

복구건설의 본보기 사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181/}와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182/}에서 진행되었다. 은파군 대청리는 1동 1세대 양식으로 총 800세대를 지어 ‘농촌마을 문화주택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금천군 강북리는 600세대 살림집과 리(리)소재지가 한 폭의 예술작품과 같다고 하여 ‘아름다운 선경마을’의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금천군 강북리는 “아담한 소층 살림집들과 단층 살림집들, 금세라도 농장원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들려올것만 같은 멋쟁이문화회

179/ “수해피해 복구건설의 주요동향,” 『북한사회Brief』, 9호 (2020),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http://www.nkstudy.com/bbs/board.php?bo_table=brief&wr_id=18&page=3> (검색일: 2023.8.30.).

18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0.9.6.

18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0.9.12.

18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20.9.15.

관, 도시부럽지 않게 손색없이 꾸려진 학교와 유치원”을 가진 도시부럽지 않은 농촌마을의 본보기가 되었다.^{183/}

그림 V-10 은파군(상), 금천군(하) 수해복구 전후



출처: (상단 좌)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20.8.7. (상단 우) 『로동신문/뉴스1』, 2020.10.17.
(하단 좌) 『금수강산』, 9월호, 2021. (하단-우) 『로동신문/뉴스1』, 2020.9.15.

김정은은 농촌살림집 복구과정에서 ‘농촌마을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농촌살림집들의 일률적 설계와 단조로운 건설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살림집은 농촌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예술적 조화,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다.^{184/} 이것은 농촌마을 건설을 단순한 복구건설이 아니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183/ “금천군 강북리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을 더듬으며,” 『로동신문』, 2020.9.30.

184/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10.2.

성'을 실증하기 위한 정치적 사업으로 간주하고,^{185/}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안으로 격상시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구건설을 계기로 농촌의 생활환경문제를 포함한 농촌경제 전반에 대해 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직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진지한 연구와 대책이 절박하다”라고 하면서, 복구건설 와중에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였다.^{186/} 그리고 마침내 제8차 당대회(2021.1.5.~1.12.)와 당 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12.31.)를 통해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10개년 계획과 농촌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방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187/}

(2) 문화농촌 건설방침 소환

역사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는 세 번 정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1959년) 개최 이후이다. 김일성은 이 대회에서 농업협동화 완성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협동경리를 공고화 시키기 위해 농촌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킬 것을 제기하였다.^{188/} 당시 ‘새 형의 문화농촌건설’은 오늘날 김

185/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복구에 총력을 집중하자,” 『로동신문』, 2020.8.16.

18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9.15.

187/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알곡생산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 잠업생산 목표를 밝히시었다. 보고는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도문,” 『조선중앙통신』, 2022.1.1.

18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4), 사회주의 문화 농촌의 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pp. 1~19.

정은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농촌건설의 기본원칙 요구를 고스란히 제공하고 있다.^{189/}

두 번째 시기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64년)가 발표된 후이다. 북한은 농업생산이 장성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농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 실행방안으로 도시의 노동자와 같이 농민들에게도 ‘국가 부담’으로 농촌주택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190/} 테제 발표 이후 내각 설계총국에서는 새로운 농촌문화주택 표준설계안(1동 2세대)을 발표하고^{191/} 농촌마을계획지구 계획과 주택단지 배치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설을 진행하였다.^{192/} 수해복구 이전 은파군과 금천군의 농촌살림집이 이때의 형성안에 기초한 농촌살림집이다.

세 번째 시기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25돐(1987)’을 계기로 도시와 농촌마을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한 때이다. 당시 북한은 ‘씨리카트(실리케이트)’^{193/}라는 벽돌을 생산하면서 ‘씨리카트살림집’ 건설을 전

189/ ①생산을 중심에 놓고 살림집 지구의 계획적 배치, ②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방향에서 건설을 진행, ③도, 시, 군의 책임 아래 진행, ④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대의 협동조합부터 건설을 진행 ⑤도로 주변 및 철도 연선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집중적으로 건설, ⑥제일 중요한 것은 ‘총계획도 작성’, ⑦년차별 건설 전망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⑧ ‘지방의 자재 원천으로’ 건설을 진행, ⑨건재 생산의 기본적 대책과 공업화를 우선적으로 진행. 리종팔 외, 『농업협동조합의 정치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169~179.

190/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42.

191/ 건축창작실, “새로운 농촌문화주택 표준설계안,” 『건축과 건설』, 제6호 (1966), p. 20.

192/ “농촌마을계획에서 묶음식주택배치방법,” 『건축과 건설』, 제5호 (1967), pp. 22~23.

193/ 씨리카트 벽돌은 모래와 석회를 주원료로 하고 알루미늄 분말 등 발포제를 첨가해 만든 벽돌로 가볍고 단열성과 내화성이 우수한 건축자재이다. “씨리카트,”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focus_name_top=query&query=%EC%94%A8%EB%A6%AC%EC%B9%B4%ED%8A%B8> (검색일: 2023.11.29.). 북한은 1986년부터 대규모 씨리카트벽돌공장을 건립하여 건설자재로 사용해 왔다.

국적으로 추동하였다.^{194/} 씨리카트 농촌살림집은 3칸짜리 살림방과 부엌, 전실, 목욕탕, 위생실, 쌀창고 등을 배치하여 1964년보다 진일보한 농촌살림집을 등장시켰다.^{195/}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지금 네 번째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지연시 본보기가 대표적이며, 삼지연시를 따라 전국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농촌마을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면시켜야 한다’는 총적 목표까지 김일성 정권과 동일하다. 국가 부담으로 농촌살림집을 제공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축 설계와 농촌마을 배치 계획안도 유사하다. 김정일 정권이 농촌살림집의 내부 구성을 현대화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한 것과 같이 김정은 정권도 새 형의 농촌살림집은 선편리, 선미학적이며, 비반복적인 건축예술로 다채롭게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증산 문제는 농업발전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 역시 집권 후 식량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장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 농업개혁조치가 큰 관심을 이끌었고, 세포등판축산기지조성 및 과수, 시설농업, 특용작물, 산림복원 등 복합영농을 실시하고 식량생산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농장책임관리제 본보기, 포전담당제 본보기는 창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대 정권의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정치경제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 본보기를 채택하고 있다.

194/ 함흥시 동흥산구역, 청진시 고층살림집, 남청진 다층주택, 안주, 순천, 개천, 덕천 등의 탄광소재지, 남의주 현대적 살림집 등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195/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성구역, 순안구역과 주변의 5천 세대, 강원도 김화, 평강, 철원, 안변, 룡정, 법동군의 1천여세대, 평안남도 평원군, 평안북도 삭주군, 개성시 주변, 성봉군종합농장, 금야군 비단협동농장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88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187.

본보기 정책만 놓고 보면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농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농업의 국가투자 증대와 농촌마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본질적 속성은 ‘집약적 농업생산’에 있으며, 농촌 진흥을 통한 농민 노동력의 계급적 고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급속한 발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공고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의 우월성 과시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삼지연시 본보기를 따라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농촌살림집이 건설되고 있다. 이미 많은 농장마을들이 살림집을 완공하고 ‘새집들이’를 진행하였으며, 입사증을 손에 든 주민들은 한결같이 ‘고마운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은덕’에 충성의 다짐을 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들이 입사증을 받고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구슬 땀’으로 알곡생산을 증대하고 풍년 풍작을 가져올 것을 다짐하는 이 광경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해석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196/}

(3) 과학농사와 지방공업발전 제시

김정은 정권이 알곡 위주의 집약적 농업생산 방식을 고수한다면 집약적 농법의 한계점인 종자, 비료, 농약에 의존하고 농업노동력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김일성 정권은 농촌경리의 다각화를 중요 농업정책으로 채택하였었다. 그러나 농촌경리의 다각화는 기술혁명이 수반되어 원료기지들의 생산이 발전하고, 지방공업이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갖춰졌을 때 육류, 채소, 과일 등 각종 식료품 생산으로 이어져서 집약적

196/ 박희진, “농촌살림집 건설 현장에 부는 ‘과거의 바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News letter 16호, 2023.7.), <http://nkstudy.com/bbs/board.php?bo_table=newsletter&wr_id=29> (검색일: 2023.9.5.).

농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집약적 농법은 농촌정리의 다각화를 요청하게 되고, 농촌정리의 다각화는 다시 기술혁명이 뒷받침될 때 그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순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업발전전략도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수행하였던 발전전략과 같은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농촌정리의 다각화는 김정일 정권이 알곡 생산을 보조해 줄 감자농사혁명을 제기하였듯이, 김정은 정권은 밀 재배농사를 제시하였다.^{197/} 북한 밀농사의 주요 산지는 황해남도이며, 2023년 현재 황해남도는 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밀 가공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국 200여 개 시, 군 양정사업소에서 밀 가공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 중이며,^{198/} 시, 군 양정사업소의 개건현대화도 추진 중이다. 올해 생산면적 확대와 가공능력 확장이 얼마나 성과를 나타내 보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밀농사 부문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촌 본보기는 창조될 것이다.

또 과거 김일성 정권의 기술혁명은 김정은 정권에 와서 과학농사 제일주의, 과학농사로 전환하여 사용되고 있다.^{199/} 축산, 과수, 채소 부문에서 과학농사 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발전을 추동하고 있으며 ‘과학축산’, ‘과수업의 과학화’, ‘지능형온실’ 등 각 부문별 과학농사 본보기는 계속 창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원료 원천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공장의 개건 현대화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97/ 세계농업발전 추세에 따른 변화로도 해석하고, 북한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응한 식량정책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는 식량생산에서 소비까지 곡물 구조가 다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한, “옥수수 대신 빵,” 『한국농정신문』, 2023.5.1.

198/ 해주밀가공공장(2023.3.9.), 남포밀가공공장(2023.8.17.)이 완공되어 조업 중이며, 원산밀가공공장, 함흥밀가공공장, 송림밀가루공장의 개건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각지에서 밀가공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3.7.25.

199/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사적사변들을 아로새긴 위대한 승리의 해 2022, 주체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로동신문』, 2022.12.7.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은 사회주의 농촌정리를 공고화하고 이를 통해 식량생산을 높이며, 과학농사와 지방공업 등을 발전시켜 도시 부럽지 않은 사회주의 문화농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눈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지연시는 이를 망라한 이상향의 본보기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별 농촌살림집 본보기, 다수확 본보기, 축산·남새·과일 부문의 과학농사 본보기, 지방공업 본보기 등 김정은식 본보기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삼지연시 본보기와 농촌진흥 메커니즘

(1) 삼지연시 본보기의 탄생과 지향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자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제시된 삼지연시 본보기는 혁명성지의 건설사업과 산간지대 군 단위 읍 지구 건설사업, 그리고 주변 농촌마을 건설사업을 모두 포함한 국가급 본보기 창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지연시 건설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200/} 1단계 공사는 김정은 집권 2년 만인 2013년 말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되었다. 주로 삼지연문화회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배개봉 국수집, 백두산지구 체육촌 등 체육, 문화, 교육, 식당 등을 포함하는 기존 편의시설들이 개건 현대화되었다. 이들 시설은 혁명 성지인 백두산 숙영답사활동과 관련한 시설들이었다.

2단계 공사는 2017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진행되었다. 삼지연군의 중심인 읍 지구를 집중적으로 재건설하였다. ‘도시와 같이, 도시 부럽지 않은’ 특색 건설을 중심에 두었고, 이목구비가 또렷

^{200/} 삼지연시 3단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은 총 1만 1,360건의 형성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드러나는 구획별 배치와 건물의 높낮이, 외벽돌의 채색까지 계획된 건설이었다. 중심지역에 호텔과 병원이 지어지고 살림집 지구에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형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사실상 삼지연군 건설의 핵심 공사였다. 삼지연군을 지구 공사가 끝난 후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히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북한은 2019년 12월 삼지연군을 시(市)로 승격하였다.^{201/}

3단계 공사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3단계 공사는 삼지연시 외곽의 산골짜기나 외딴 농촌마을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농촌마을별 특색에 맞게 재배작물과 가공공장을 함께 배치하여 새로운 농촌 진흥의 모델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삼지연시는 혁명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삼지연시 본보기는 이전 정권의 농촌 본보기들과 달리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김정은 정권의 상징모델이다. 가장 먼저 삼지연시 본보기는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영도 업적과 정치적 치적 쌓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다. 1단계 개건현대화 작업을 완료한 이후 2단계의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삼지연군은 ‘적대세력들과 제재의 봉쇄 책동’ 속에서 자력갱생의 힘과 승리를 강조하는 모델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다.^{202/} 김정은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그해 첫 경제현장시찰로 삼지연시를 방문하여 미국 제재를 비판하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했다”며 이렇 때일수록 자력갱생으로 나아갈

201/ “조선에서 량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하기로 결정,” 『조선중앙통신』, 2019. 12. 11.; “조선에서 량강도 삼지연시의 거리이름을 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20. 1. 4.

202/ “제재를 박차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조선신보』, 2019. 12. 17.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3/} 삼지연시 본보기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에 맞선 북한 통치자의 자력갱생 노선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실증한 본보기이며, 향후 북한 삼지연 본보기를 건설해 낸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기고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한 본보기인 것이다.

삼지연시 본보기는 또 2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당의 지방건설정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지방이 변혁하는 시대의 새로운 시발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북한은 삼지연시 본보기를 통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과 이의 달성을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2021.3)를 조직하고, 「시, 군 발전법」(2021.9)을 제정하였으며, 삼지연시 건설의 경험을 토대로 도, 시, 군 강화노선과 도, 시, 군들의 건설사업을 추동하기 시작하였다.

삼지연시는 평양시 도시건설 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도시와 지역 건설의 목적을 전후 1950~1960년대 건설된 도시들의 ‘낡은 때’를 벗기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도시로 재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도시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의 기술적 현대화를 실현하며, 도시 건축물의 외형이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을 갖춘 현대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204/} 이에 각 도시와 농촌에서 ‘본보기 단위’를 선정하고, 본보기를 따라 전국적 건설사업을 진행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삼지연시는 도시건설총계획을 수립할 때 산간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였으며, 산간지대의 특성을 살린 도시문화시설을 도시건설에 나타나도록 계획하고 배치하였다.

203/ “김정은 동지께서 2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 있는 들끓는 삼지연군 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9.10.16.

204/ 박희진, “김정은 시대 10대 도시의 개발과 격차(Gap),” 『통일인문학』 제86집 (2021), p. 217.

삼지연시 본보기가 지방건설의 표준이 되는 까닭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V-11>에 보이는 완성된 형태의 삼지연시 도시건설총계획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을 보면, 도시 중심부의 [1]은 백두산종합박물관이다. 이 도시의 상징체이다. 그리고 [2]와 [3]을 연결하는 횡축은 해산-삼지연의 기차가 다니는 북부중심도로이다. 또 [1]과 [5]의 종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핵심중앙도로로 구획되어 있다.

그림 V-11 삼지연시 본보기의 도시건설총계획



출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0.16.

[1]을 중심으로 도시의 동서남북은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구획한 것이 삼지연시 건설의 첫 번째 특징이다. 김정은 정권의 도시건설은 도시를 구획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획별 배치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각 구획마다 단층에서 초고층까지 높고 낮은 건축물들을 다채롭게 비반복적으로 건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의 구획과 맞은 편 [2]의 구획 건물들은 모두 다른 층수로 설계되었고, [2]의 삼지연호텔은 계단식으로 건설되어 어느 층에서

나 도시와 산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의 살림집 계획은 도시 안의 상업시설들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건축물의 형성도, 색깔도 다르게 초록색으로 표현하였다. 삼지연 시내 건물과 주택은 분홍색 지붕에 베이지색 벽의 아파트이며, 민트색을 띠는 삼각지붕에 하얀색 벽은 빌라형태의 살림집으로 구성되어 도시 전체가 유럽식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두 번째 도시건설의 특징은 [4]와 같이 강·하천 주변에 녹지대를 설정하여 수림화·원림화·유원지화를 하는 것이다. [4]와 같이 공원 녹지를 조성한 후에는 강을 따라 산책길을 조성하여 공원과 산책여가시설을 마련하였으며, [5]의 정자(누각)와 같은 민속풍의 장식을 통해 여가문화시설에 흥취를 돋구는 민속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기능을 풍성히 하는 시인민병원, 시문화회관 등의 시설물들을 배치 건설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지방건설의 세 번째 특징은 ‘특색있는 건설’이다. 건축물의 배치와 구성에서 지역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을 지대별로 산간지대, 별방지대, 해안지대별로 구분하여 그 특색을 건축물에 반영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삼지연시는 산간지대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산을 이용’한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즉, 백두산과 체육시설 및 동계스포츠 관광으로 특성화한 사례이다. 백두산 답사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 숙영소, 백두산체육촌, 실내경기장 등도 도시 한켠에 갖추어져 있고, 국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키장과 국제경기가 가능한 다기능속도빙상경기장,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 등이 건설되었다. 산을 끼고 문화 행사를 즐기는 산간문화도시답게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관광·스포츠·축제로 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지방건설의 네 번째 특징은 ‘도시야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미 평양시 야경이 화려해졌고, 삼

자연시와 거의 동시에 완공된 평안남도 양덕온천관광지구도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고 있다. 삼자연시 역시 스키장의 스키슬로프로부터 도심을 가로지르는 [1]과 [5]의 중앙도로, 각 구획별 고층 건물에 은은한 조도의 조명불을 장식하여 발전하는 도시문명의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였다.^{205/}

현재 북한의 군 단위 지방건설은 읍 지구부터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군의 읍지구가 ‘도시와 같은 도시 부럽지 않은’ 형태로 변모하여야 읍 지구를 통한 산하 리 단위 협동농장들이 ‘도시와 같은 도시 부럽지 않은’ 물질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읍 지구 건설의 수준과 방향은 삼자연시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자연시의 읍 지구에 해당했던 2단계 건설정형이 지방건설의 본보기가 되는 셈이다.

(2) 농촌진흥의 표준, 중흥마을과 포태동

삼자연시 3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등장한 본보기는 농촌진흥의 표준이며, 농촌마을의 본보기인 중흥농장과 포태동 마을이다. 삼자연시 중흥농장은 제일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농장으로, 이미 2018년 김정은이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로 꾸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곳이다. 당시 김정은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제시 20돐’을 맞아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 량강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염원을 꼭 풀어드리자’며 삼자연군 안의 농장들을 종합적 기계화된 농장으로 전변시키자고 했었다.^{206/} 특히 삼자연군 중흥리에 소재지 마을을 잘 꾸려 군 안의 농장들을 현대문명

205/ 조선화보편집위원회, 『(화보집)산간문화도시 삼자연』 (평양: 외국문출판사, 2020), pp. 30~32.

20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자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로동신문』, 2018.7.10.

이 응축된 ‘리상군, 리상농장’으로 꾸릴 것을 제시하였다. 이때만 해도 삼지연군은 북부고산지대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표준단위로 제시된 농촌 본보기 중 하나였다. 20년 전 농촌 본보기는 새 시대의 기준이 될 수 없기에 새로운 농촌 본보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1999년 대홍단군 본보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북부지대 감자농사 혁명의 본보기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삼지연시 2단계 건설 이후 감자가루 생산공장의 건설과 감자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부식물 생산을 고민하면서 이의 원재료가 될 감자농사의 기술혁신이 요청되었다. 이에 중흥농장을 본보기 단위로 내세우면서 중흥농장에 국가과학원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파견하였으며, 감자 종자개량에 힘을 기울였다. 기존의 물이 많고 전분가루는 적으며, 수분함량이 높아 무게로 인해 저장과 운반에 많은 품을 들인 감자를 개량하여 수분은 적고 감자가루 생산량은 높은 작은 알의 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감자증산문제를 해결한 것이다.^{207/} 자기 지방의 특색에 맞게 감자농사를 지어 ‘삼지연식 농법’을 창조한 중흥농장은 소재지 마을답게 문화회관과 살림집 현대화를 진행하여 감자농사로 문명화를 이룬 농촌진흥의 표준단위가 되었다.^{208/}

삼지연시 포태동 역시 1999년 대홍단군과 함께 감자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지정되었던 국영농장이자 이전 시기에는 포태노동자구였다. ‘포수가 태를 묻은 곳’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산간 오지마을이며, 제대군인들이 이주하여 감자농사를 지었던 곳이었다. 삼지연시 3단계 건설을 진행하며 이곳에 삼지연 감자가루생산공장이 개

207/ “(소개편집물)감자풍작의 비결 - 삼지연군 중흥농장.” 『조선의 오늘』, 2019.10.17.

208/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천지개벽,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삼지연시를 찾아서,” 『조선신보』, 2022.12.18.

건 현대화를 이루어 재가동되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전력공급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주변의 살림집들에도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전기로 밥을 해 먹는 문명발전을 이룬 마을이 되었다.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삼지연시 특집물을 보면, 포태동 주민 한영설씨가 출연하여 “새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전기로 밥하게 됐지, 전기로 집을 덮이게 됐지, 앉아서 부엌에 나가면 다 깔아서 반들반들한 집에서” 살게 되어 좋다는 말을 한다.^{209/}

이 밖에도 포태동은 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산업지역에는 중릉농장, 보서농장 등 여섯 개의 농장과 농기계 작업소,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돼지목장 등이 있으며, 주거지역에는 문화시설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 진료소 등 교양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오지마을이 개변을 이룬 김정은 정권 시기 새로운 농촌진흥의 표준 된 마을로 한껏 주목받고 있다.

그림 V-12 농촌진흥의 표준, 중흥마을 본보기



출처: 『로동신문/뉴스1』, 2022.8.7.

^{209/} 김필국 CP, “삼지연은 농촌 표준 ‘전기로 밥한다,’” 〈통일전망대〉, MBC, 2022.1.22.

그림 V-13 농촌진흥의 표준, 포태마을 본보기



출처: 『노동신문/뉴스1』, 2021.12.3.

(3) 과학기술과 농촌진흥의 메커니즘

김정은 정권의 과학농사는 북한 최초로 진행된 전국농업부문분조 장대회(2014.2.6.)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이 농사를 과학화하자는 언급은 과학농사제일주의 담론을 형성하였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다수확을 달성하고, 남새(채소), 과일, 축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농업근로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공으로 준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농업과학연구부문의 강화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도 강조되었다.^{210/}

이어 김정은은 2018년 12월 농업연구원 창립 70돐을 맞아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 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본 열쇠가 있다”고 하면서 과학농사의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들을 창조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일 것을 강조하였다.^{211/}

210/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7.1.1.

211/ “과학농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위대한 령도,” 『조선중앙통신』, 2020.2.6.

“과학농사는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수확을 하자면 반드시 과학농사를 해야 한다. 농업 근로자들이 선진농업과 학기술로 무장해야 하며,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계획화, 정상화할 뿐 아니라 경험 발표회 같은 것을 자주 진행하여야 한다. 분조나 작업반, 농장이 하늘의 변덕을 이겨낼 수 없다.”^{212/}

그리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과학농사는 남새온실농장에서 집중적으로 전형 단위, 본보기 단위들을 창조하고 있다. 북한의 온실농장은 2014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리모델링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로 제시된 바 있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농촌을 형상한 대형전경화 같다’는 칭송을 받으며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만한 농장도시’로 내세워졌다.^{213/} 이때만 해도 과학농사보다 농촌마을의 현대화에 더 관심을 보였던 농촌 본보기 사례였다.

이후 김정은은 제3차 중북정상회담(2018.6.19.-20.)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농업과학원에서 중국의 과학농사방법과 지능형온실 운영에 관한 정책 시찰을 진행하였다.^{214/} 과학농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인 북한은 제8차 당대회^{215/}와 당 8기 제4차 전원회

212/ “과학농사증시기풍 확립돼야,” 『로동신문』, 2023.3.23.

213/ “北김정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찾아.. ‘농촌문화건설 본보기,’” 『통일뉴스』, 2015.6.30.

214/ 2018년 6월 20일 김정은이 참관한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은 도시의 건물 및 시설들에서 화초와 채소를 재배하고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연구 보급하는 시범기지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정은은 현대농업기술종합전시센터, 앞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열매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도시농업연구센터, 주민지구농업응용전시센터 등을 돌아보고 농업과 학기술연구사업에 대해 들었다. “북한, 대형 지능형온실 건설 준비중,” 『NK경제』, 2019.6.2.

215/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1.1.9.

의를 통해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과학농사방침을 확정하고, 2025년 당 창건 80주년까지 모든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현대화, 첨단연구 기지화 하는 단계적 과업을 통해 과학농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한다고 계획하고 있다.^{216/}

2019년 12월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건설된 중평남새온실농장은 중국의 ‘지능형 온실(스마트팜)’과 유사한 북한 최초의 대규모 ‘남새온실(비닐하우스)’이다. 약 200정보의 부지의 320여 동의 온실과 양묘장, 590여 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비행군관학교 실습비행장을 밀어내고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남새온실농장으로 전변하였으며, ‘건축의 실용화, 조형예술화’가 실현되고 모든 공정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들로 장비’된 본보기 단위이다. 특히 김정은은 이곳을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 농촌마을은 중평남새온실 농장마을 수준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217/}

그러나 중평남새온실농장은 과학기술적 운영과 경영관리 부문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수경재배 및 온실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북한 농민들이 현대화된 재배 기술 장치들을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파견과 기술교육이 부족했다. 수경재배, 궁룽식^{218/} 온실재배 등 다양한 채소 재배 기술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해 작황에 실패를 많이 겪기도 했다.

216/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2.1.1.

217/ “새로운 전형, 본보기를 창조해야 한다시며,” 『로동신문』, 2022.5.6.

218/ 궁룽이란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을 뜻하며, 궁룽식은 원통형, 교차형, 부채형 등 아치 모양의 건축양식을 뜻하는 건축용어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A%B6%81%EB%A5%AD>> (검색일: 2023년 11월 29일)

국가는 본보기 남새온실농장의 성과를 위해 과학기술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연관 부문의 과학자들을 파견해야 했고, 조절과 관리 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영양공급액 등의 영농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했다. 청진농업대학에서 파견 나온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강습을 진행했지만, 컴퓨터 이론교육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현장 실습(직관)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한 해 동안 대규모 온실을 건설해 놓고도 남새생산 및 공급능력은 증가하지 못했으며, 남새온실농장의 과학기술적 경영능력이 현저히 부진하여 건설의 효과가 떨어지는 모순을 파생했다.^{219/}

중평남새온실농장의 사례는 과학기술적 남새생산방법을 습득하고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온실농장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인 수경재배에 대한 기술적 지도가 요구되었다. 수경재배는 비토지 생산방법으로 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다 보니 그만큼 효율성도 높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재배시설을 갖추고, 자동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기술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농장원들의 높은 과학기술적 수준이 요구되었다.

2022년 함경남도 연포남새온실농장이 새로운 본보기로 창조되었다. 이 역시 동부전선의 공군기지를 대규모 온실농장으로 전면시킨 것으로 280정보의 부지에 850여 동의 수경과 토양온실, 1000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을 건설하였다.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은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2배 이상 커졌으며 대규모 생산기지이자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교육농장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남새 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자동화 등 발전된 기술과 설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219/ “(동영상)중평땅의 남새바다,” 『조선의 오늘』, 2021.12.1.

것으로 알려져 있다.^{220/} 김정은도 연포남새온실농장을 ‘보배농장, 애국농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새 생산의 집약화, 공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룬전기재(차량)들과 각종 설비들을 적극 지원하며 본보기 농장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221/}

연포남새온실농장은 중평남새온실농장이 겪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준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포남새온실농장을 관리운영하는 지능형통합생산체계는 ‘10여 종의 수천 대에 달하는 설봉계열의 공업용전자제품과 흰구름 계열의 공업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용되었으며’, ‘강력한 보안기능을 갖춘 첨단수준의 성능 높은 분산형 조종체계 미래102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850동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22/}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온실농장인 강동온실농장이 2023년 2월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부지면적 약 280정보이며 이 역시 강동 비행장과 공군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백 동의 온실을 건설할 예정이다. 착공식에서 강동온실농장은 연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 수준이 더 높은,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농장도시’를 건설하자고 하였다. 강동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미 이곳에 대규모 축산기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강동군 축산기지 공사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300여 동의

220/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여 이를 기준,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 당 중앙의 구상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조선중앙통신』, 2022.2.24.

2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련포온실농장운영에 필요한 룬전기재들과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3.13.

222/ “북한 련포온실농장에 대규모 지능형통합생산시스템 구축 중,” 『NK경제』, 2023.6.18.

살림집과 생산건물, 염소우리, 건초 창고, 풀절임 저장고를 배치해 놓고 있다.^{223/} 강동군이 축산기지와 남새온실을 갖춘 또 하나의 김정은식 대규모 농촌 본보기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정은 정권의 과학농사가 축산, 남새, 과수 부문에서 대규모 본보기 단위를 형성하고, 본보기 단위에서만도 많은 생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순환메커니즘은 이를 가공하여 제품으로 생산해 내는 가공공장의 건설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북한이 지방경제발전을 추구한다고 할 때 지방경제는 주로 지방의 원료원천과 지방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의미한다.^{224/} 지방경제에는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수산업, 지방적인 건설과 상업 등이 속한다. 이때 지방경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문은 지방공업과 농촌경리이다. 지방공업은 ①중소규모의 공장, ②지방원료의 이용, ③인민소비품에 대한 지방 수요 충족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방직공업, 제지공업, 건재공업 등을 포함한다.^{225/} 결국 북한의 도, 시, 군 강화노선과 과학농사를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 정책은 도, 시, 군 농촌경리와 지방공업의 부활로 모아진다.

김정은 정권이 2022년도에 지방공업 본보기로 선정한 강원도 김화군은 1962년 창성군 본보기 이후 처음이다. 강원도 김화군 김화읍 지구 일대는 앞선 은파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와 같이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은파군 대청리, 금천군 강북리가 복구건설 후 새로운 농촌 본보기로 제시되었듯 김화군 김화읍 지구도 천 세대 살림집을 40여일 만에 새로 지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촌 본보기 대열에 들어섰다. 여기에 더하여 강원도 산간 오지마을인 김화군 지역을 현

223/ “강동군 종합축산기지 1단계공사 결속, 2단계공사 본격적으로 추진,” 『로동신문』, 2022.9.8.

22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39.

225/ 엄주복, “지방공업의 특성과 건설원칙,” 『경제연구』, 4호 (1987), pp. 27~28.

지 지도하던 김정은은 지방공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본보기 창조를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밥 짓는 속도’보다 빠르게 건설되는 살림집의 건설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각 시, 도, 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공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방건설부문에서 건재공업을 발전시켜 건설장비, 기공구 개발생산을 자체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김화군이 현대화된 살림집 지구로 전변된 만큼 군내 살림살이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산업 공장들을 단계적으로 개건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26/} 이듬해 내각 총리 산하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준비위가 조직되고,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종이공장, 옷공장 등이 건설 추진되었다.

김화군 본보기는 생활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적 토대도 빈약한 산골 오지를 대상으로 하여 본보기 모델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창성군 사례와 유사하다. 또한 지방공업공장의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자체의 힘만으로 국산화, 현대화 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지방공업공장들을 ‘번듯하게’ 건설함으로써 지방문명을 선도해나가는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27/}

현재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장의 현대화 사례는 전국에 전파되고 있다. 북한 내각은 각 부문의 능력이 있는 간부들로 중앙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의 지방공업 공장들의 개건 현대화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전개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각 도, 시, 군들의 실무 간부들은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 대한 참관 및 강습을 조직 진행하였으며, 해당지역 간부들이 김화군의 우수한 경험과 기술들

22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0.10.2.

227/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실체-개건현대화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2.6.23.

을 따라 배우도록 하였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 각 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기술과제서, 공정 및 설비설계를 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228/}

그림 V-14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본보기



출처: (상) 『로동신문/뉴스1』, 2022.10.2, (하) 『로동신문/뉴스1』, 2022.6.23.

다. 농촌 본보기의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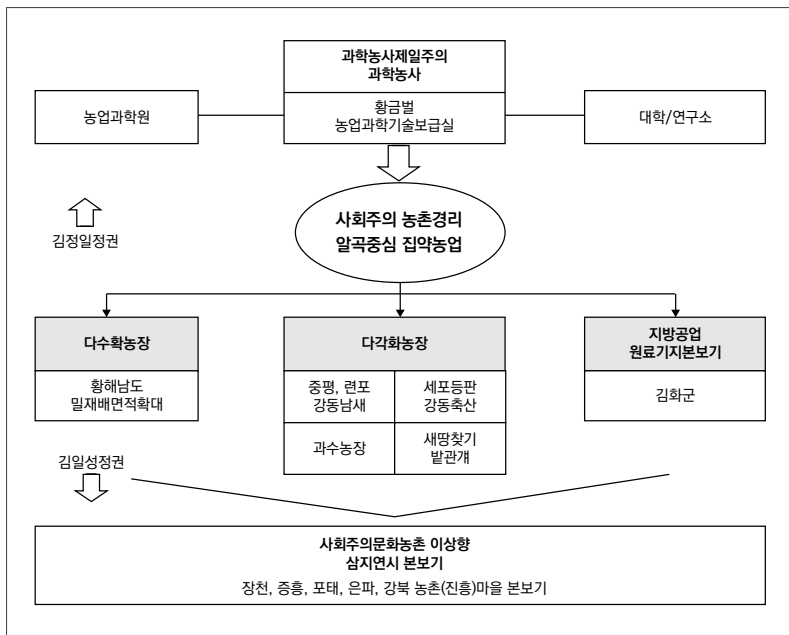
(1) 본보기 형성원리 분석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정책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본보기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일한 농업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

^{228/} “지방공업현대화를 위한 작전과 지휘 심화,” 『조선중앙통신』, 2022.10.7.

때문이다. 북한은 정권별로 동일한 맥락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관철 방식으로 농촌 본보기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본보기를 따라배우고 본보기 경험을 공유 전파하며, 본보기 정신을 전 사회에 파급하는 방식도 동일했다. 다만 해당 정권별로 농업정책의 지속과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이유로 정권별 본보기 선정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다. 이를 망라하여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과 농촌 본보기 정책의 진행 원리를 그림으로 구현하면 <그림 V-15>와 같다. 가운데 원에 해당하는 북한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핵심 목표는 알곡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이다. 주체농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약적 농법을 집대성한 테제이며,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그림 V-15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과 본보기 형성단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V-15〉의 가운데 부문은 주체농법이 시행되는 북한 사회주의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본보기가 창조 형성되고, 파급 전파되었으며, 생생 소멸을 거쳐 온 영역이다. 먼저 북한 농촌 본보기의 전형은 다수확 농장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시기 가장 많은 다수확 농장 본보기를 창조해 내었으며, 다수확 농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농업발전이 이뤄지는 증거로 작동했다. 김정일 정권에서도 김일성 정권의 다수확 농장 본보기는 명맥과 영예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새로운 다수확 농장의 본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권들이 구축해 놓은 다수확 농장에 여전히 기대어 있다. 김정은 정권이 다수확 농장 본보기를 많이 창조하면 할수록 농업부문에서는 긍정적 사인이 될 것이다. 2023년 현재 북한은 황해남도를 중심으로 다수확 농장들의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밀재배농사의 성과를 추동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229/}

반면 김정은 정권은 다각화 농장 본보기 영역에서 이전 정권이 보여주었던 소형화, 시범화, 상징화의 방식을 탈피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본보기 단위들은 대규모 축산기지, 북한 최대의 온실농장 등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중심 거점을 형성하여 주변 인근에 생산기지, 원료기지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다수확을 도모하는 실용적 방식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아직 과수농장, 수산사업소, 간석지, 밭관개 본보기 등 더

^{229/}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1〉의 개발로 밀, 보리 재배에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 보도는 함경남도 금야군 솔밭농장 제4작업반, 금야군 긴재농장,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평안남도 북창군농업경영위원회 직속작업반에서 밀의 다수확생산이 이뤄졌다고 함.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로동신문』, 2023.7.19.

많은 부문에서 기술혁신의 본보기는 등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과학 기술혁신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또한 지방공업 본보기를 김화군에 조성하였다. 김 일성 정권은 창성군 모델을 수립하였고, 창성군을 집중적으로 개발 하여 지방공업의 영원한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도 아 마 김화군 모델을 적극 발전시켜 전국적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 다. 이미 각 지방에서는 김화군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류 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화군의 발전은 더욱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북한 사회주의 농업발전전략은 정권별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 본보기 역시 동일한 맥락 아래 선정 대상만이 달라질 뿐 본질적 속성은 같다. 반면 김정은 정권이 이전 선대 정권의 본보 기 유형,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다시 〈그림 V-15〉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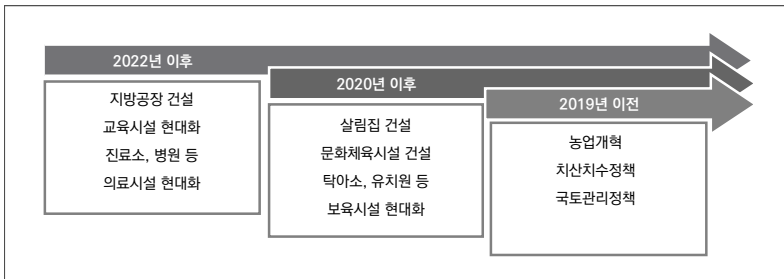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고도 발전을 위해 과학농사를 강조해 왔다. 〈그림 V-15〉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이다. 김정은 정권은 바로 앞 김정일 정권의 과학중시노선을 계승하 고, 과학자, 기술자를 우대하였으며, 북한 과학원 현대화를 주도하였 다. 또 김정일 정권이 추진했던 대흥단군의 씨감자 종자농법의 기술 혁신 사례와 대동강과수농장의 대형화·기술화·현대화의 방식을 쫓 아 과학기술적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를 추진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 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식 상층부에서 이뤄지는 과학기술적 현대화 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2019년 이후 대북경제제재와 코로나 위기, 자연재해 피해 등을 겪으며 지식 상층부의 과학농사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합을 해야 했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인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림 V-15〉의 아래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김정은 정권은 1960년대 김일성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정책을 도입하고,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 아래 농촌생활환경 개선 문제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삼지연시가 대표적 본보기이며 상징의 총체이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정책이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 나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깊은 방점을 찍고 있다.^{230/} 당분간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선경, 사회주의 문화농촌,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표준 등의 이름으로 이 영역에서 다수의 본보기를 창조해 낼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아 김정은 정권은 선대정권의 농업정책을 망라하는 새로운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그림 V-15〉의 위-중앙-아래를 오가는 방대한 건설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로 시작하여 궁극적 이상향인 삼지연시와 같은 수준의 농촌마을을 외형적 결과로 산출해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V-16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 변화



출처: 저자 작성.

^{230/}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조선중앙통신』, 2022.2.24.

〈그림 V-16〉에서 보듯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이 산출해 내야 하는 농촌마을은 마을 그 자체의 건축물의 종합이 아니라, 농촌마을이 자립번영·발전할 수 있는 내적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과연 그러한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농촌 본보기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 본보기 효과와 한계

북한은 본보기를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에서 부단히 창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새로운 본보기 창조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보기를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면서 본보기 파급을 전 부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농업 분야에 새로운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농업부문에 관심을 높이고 국가투자와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 농업정책 관철이라는 사명을 띠고 창조되고 형성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농촌 본보기는 곧 국가 농업정책의 정당성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기술, 노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농촌 본보기가 일회성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시설물의 개보수를 진행한다. 실제 최근 북한의 농업부문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231/}

본보기 농장의 농민 입장에서조차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본보기 농장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장이 본보기로 지정되는 것이 매우 큰 영광일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

^{231/} 2023년 농촌발전 부문 재정투자는 14.7%(전년대비) 증액하였다. 김일한, “식량증산 위한 농업인프라 개선 성과,” 『한국농정신문』, 2023.7.2.

문에 생활면에서 모든 것이 우월하다. 대부분은 본보기 농장이 되길 희망한다. 북한이탈주민 사례4의 의견도 그러했다.

연구자: 그러면 거기 농장원들은 그런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구술자: 당연하죠. 엄청 있죠. 청산리에서 살았다는 그 하나 자부심 어디 나가요 군대 나가요 야 너 청산리에서 태어났어? 좋은데 태어났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야 너 시골에 태어났어? 아유 촌놈 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데 청산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말 못 하죠.

연구자: 그냥 신분은 농장원인데도요?

구술자: 그렇죠. 같은 농장원인데 급이 틀리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산리 있을 때도 어릴 때 우리 한국에 보니까 하얀 벽들 있잖아. 그걸로 2층짜리 집 다 지어지고 이렇게 길 옆으로 차 타고 쪽 가면. (북한이탈주민 사례4)

북한이탈주민 사례3 역시도 대흥단군 본보기 생활을 설명할 때도 같은 논리였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고, 그 어느 농장보다도 조건이 좋았다고 했다. 특히 김정은의 현지지도 단위가 되면 우선적 관리와 투자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보기 단위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모범과 본보기가 창조된다는 것은 부정적 신호가 되기도 한다. 사회학자 뵈르헤 바켄(Borge Bakken)은 중국 사회주의를 모범적인 사회(Exemplary Society)로 묘사하고, 모범이 넘치는 사회는 만들어진 유토피아에 불과함을 지적한 바 있다.^{232/} 몇몇 본보기의 허상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며

^{232/} Borge Bakken, *The Exemplary Society—Human Improvement, Social Control, and The Dangers of Modernity in China*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50~82.

유토피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손쉽게 성과를 거두려 하는 관료들로 인해 그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생산토대가 좋은 농장이나 다수확가능성이 있는 포전에만 힘을 집중하는 것은 전국적인 농업생산량을 늘이는데서 장애가 된다. 일부 농업지도일군들은 다수확단위대렬을 늘린다고 하면서 정보당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는 농장들의 농사에만 몰두하고 영농물자보장도 몇 개의 농장들에만 집중해주는 식으로 농사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두개 농장, 작업반들에서 다수확을 냈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전반적 알곡생산량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233/}

위의 보도는 북한 스스로 비판하는 농촌 본보기 사업의 폐해이다. 국가의 적극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따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의 지원 없이 농장원들 스스로 만드는 자발적 농촌 본보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일성 정권은 농촌 본보기 단위가 작고 농촌 본보기 사업내용 역시 매우 소소하였다. 소소한 변화로 영농에 성과를 나타내기만 한다면 모범칭호를 붙이고, 본을 세웠다. 쉽게 따라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것으로 창조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편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따라 하기 어려운 국가급 규모와 과학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본보기들이다. 농장들에서는 영농물자(종자, 비료, 용수, 농기계) 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두 개의 농장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장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는 관료들로 하여금 요령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도록 만든다. 즉, 생산 토대가 좋아 약간의 지원만으로도 성과가 많이 나는 농장,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금원천이 있는 모범

^{233/} “극복해야 할 농사지도에서의 편파성,” 『로동신문』, 2023.4.21.

농장들을 대상으로 실적을 쌓고, 성과를 부풀리는 편향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농촌살림집 건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삼지연시를 이상향으로 삼지연시와 같은 수준에서 농촌마을을 전변시키자고 한다. 그러나 그 요구 수준을 높고 현실은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방대한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이 내민 구호가 자재절약형, 노동력절약형 공법을 도입하여 자재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 시공의 속도와 질을 높이자는 방법이다.^{234/}

그림 V-17 자재와 노동력 절약형 방식상학



출처: “농촌살림집 내외부공사를 위한 보여주기 사업 진행,” 『로동신문/뉴스1』, 2022.10.5.

〈그림 V-17〉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에서 시행한 ‘보여주기 사업’은 주택 울타리와 현관 앞 난간, 지붕의 형체와 건설에서 나타난 자재절약형, 노동력절약형 건설 공법이다. 자재와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도입된 얇디 얇은 벽체와 난간, 테라스, 지붕 등은 이후에도 농촌살림집 곳곳에 적용되어 절약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234/} “농촌살림집 내외부공사를 위한 보여주기사업 진행,” 『조선의 오늘』, 2022.10.5.

이와 같은 절약형 공법으로 건설된 농촌살림집 내외부의 건설 모습은 과연 삼지연시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살림집의 질과 내구성에서 격차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 본보기는 파급되면 될수록 부실화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농촌 본보기의 외적 형식만 따라 배울 뿐 새로운 본보기로 창조되진 못한다는 점이다.^{235/}

정책 차원에서 농촌 본보기가 지속가능한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북한 지도자의 언술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농촌 본보기는 ‘모범농장, 본보기 농장’이라는 권력형 농장이 되었다. 국가의 도움 아래 다수화를 유지하고, 다수화를 유지한 대가로 해당 부문 관료들을 그들의 정치생명을 유지해 나갔으며, 관료들의 본보기 농장 중심, 편애 현상은 농업 전반의 상황을 은폐시키고 불균형 발전을 야기하였다. 본보기 농장의 생명력이라곤 이데올로기적 상징성만 부각될 뿐 실질 생산을 추동하는 파급효과를 지니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본보기를 계속 창조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이와 같은 침체와 답습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또한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형성부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존성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길들여진 농촌 본보기는 새로운 시도와 전변을 도모할 수 없다. 지도자의 언술에 간혀, 지도자의 방침에 간혀, 현지지도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를 극대화할 뿐 자립형 본보기로 전변될 수 없다. 청산리협동농장이 북한의 주체농

^{235/} 개천군 보부리 농촌문화주택 건설은 양강도 삼지연시의 건설 설계를 손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비판받았다. 기와생산에서 세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 비에 젖어 허물어진 사례도 비판을 받았다. 또 건설지휘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농촌살림집 건설은 지연하고 있는 관료주의 형식성도 비판을 받았다. “맹목적이고 게을러....北, 농촌 건설 미진한 평안남도 질책,” 『Daily NK』, 2022.9.28.

업을 증명하는 거대한 사상학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농촌 본보기는 역사 교과서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은 선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고스란히 계승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 농업의 총적 발전방향은 변함없다는 것이 본보기 정책을 통해 다시 입증되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의 본보기 정책은 선대 정권의 본보기 정책을 망라하여 위로는 김정일 정권이 지향했던 과학기술적 혁신을 강조하고, 아래로는 김일성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 방침을 반영하여 전체 발전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과학농사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하여 농촌 본보기의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변화를 보였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 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예산투자, 군인 건설자 및 청년돌격대의 노동력 동원, 지방별 건설자재, 설계시공, 마감재 생산 등 농촌 건설 총동원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본보기가 앞서 끌고 있는 내용과 형식에는 가닿고 있지 못하며, 관료들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건설에의 부실시공과 형식성 강조 등이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농업발전전략은 식량생산의 증대, 농업생산성의 제고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 본보기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다수확 농장 단위들의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새 농촌살림집의 입사증을 받은 농민들이 쌀로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사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줄지도 의문이다.

VI. 결론

정은미(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1. 요약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과 같은 해 12월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은 김정은 정권의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완전히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은 김일성 시대에 창안된 주체농법을 계승, 심화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선대와 분담한다.

김일성처럼 김정은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자족을 성공한 지도자라는 신화의 서사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농업정책들의 본류는 언제나 김일성 시대의 것들과 연결된다. 2014년에 김정은 정권의 농업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2014년은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 5대 요소’(농업발전 5대 요소: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

도의 강화)의 발표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인 2019년에 발표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적 결정이라고 자평하는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역시 구조적으로 1964년 농촌테제과 대동소이하다. 최근 2년 동안 양적으로 눈에 띄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도 1964년 농촌테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중에서 선대와 차별되는 것은 주식작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밀·보리 재배면적으로 확대하는 알곡생산정책의 전환이다.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옥수수만큼 밀, 보리는 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다수확 알곡작물로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옥수수에 비해 비료의 소요량이 적어 비료 생산역량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지구 온난화의 진행으로 북한 전역에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넷째,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농업 및 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은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첫째는 핵무력 고도화라는 국방 정책의 실행에 따른 대외적 압박과 제재에 맞서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권의 안정과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성공의 서사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수령의 신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김일성은 주체농법의 핵심 작물인 옥수수 증산을 통해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신화를 창조해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제3의 주식으로 감자 혁명을 시도했으나 식량 자체 해결에 실패하였다. 김정은은 옥수수 대신에 밀, 보리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식량 자급자족의 성공적 서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선대 정권과 차별화를 보였다. 첫 번째 차별화 지점은 집권 초기에 개별농장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를 과감하게 실시한 것이다. 이 조치는 농장과 농장원의 자발성에 기반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농업 증산을 꾀하고자 접근방식이었다. 하지만 2021년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농장 운영과 농업지도 방식은 중앙 정부의 관여와 수직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기존의 개혁 조치들은 무력화되었다.

두 번째 차별화 지점은 농업 관련 법제화이다.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허풍방지법」, 「농촌발전법」 등이 새로 입법되고, 「농장법」과 「농업법」 등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당론으로 채택된 결정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속히 입법화함으로써 법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하면서도 정상국가의 보편적 통치 행위의 형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보기 사업은 당과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 관철·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 활용하는 통치 방법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다수확 생산실적을 거둔 협동농장이 대표적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면,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사회주의강행군 정신에 따라 자립적 생산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과학기술적 개건현대화와 특색 있는 농촌공간의 조성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농촌 본보기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새로운 농촌 본보기가 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농촌 본보기의 증감 추이는 농업정책의 확산, 파급효과와 관련성이 있다.

농촌 본보기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협동농장은 북한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협동경리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가급 본보기이다. 김정일 정권은 감자를 제3의 주식으로 부각시켜 부족한 식량의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따라서 농촌 본보기로 양강도 대흥단군이 떠올랐다. 김정일 정권에서 농촌 본보기는 양적으로 많지 않은 대신에 본보기 단위를 기존 생산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대시켰고, 살림집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까지 포함한 농촌 본보기 조성을 시도하였다. 미곡협동농장을 통해 사회주의 선정의 개념을 제시하며 농촌마을 단위의 본보기 조성을 시도했다. 김정일 정권의 마을단위 본보기는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삼지연시 본보기와 유사하다.

또한 농촌마을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라는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김일성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부담으로 농촌살림집을 제공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축 설계와 농촌마을 배치 계획안도 유사하다. 김정일 정권이 농촌살림집의 내부 구성을 현대화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한 것과 같이 김정은 정권도 새 형의 농촌살림집은 선편리, 선미학적이며, 비반복적인 건축예술로 다채롭게 건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선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계승, 변용하고 있듯이, 농촌 본보기 정책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본보기를 참고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지향했던 과학기술적 혁신을 강조하고, 김일성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 방침을 반영하여 전체 발전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과학농사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하여 농촌 본보기의 대형과, 거점화,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새로운 본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농업부문에 관심을 높이고 국가투자과 영농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 농업정책 관철이라는 사명을 띠고 창조되고 형성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농촌 본보기는 곧 국가 농업정책의 정당성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기술, 노동력을 제공한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발전전략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자립형 본보기로는 전변될 수 없다.

농업생산계획 달성의 압박에 시달리는 간부들이 다수확단위에 역량을 집중하는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농촌지도의 편파성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실태는 농촌 본보기 사업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 국가의 적극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따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김일성 시대의 소규모 본보기와 달리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급 대규모이고 막대한 재원과 인력,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본보기들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올해 이례적으로 농사 작황이 좋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9월에 개최된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236/} 지난해에 비해 밀, 보리농사가 잘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와 비료 수입 등 외생적 요인들이 지난해보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의 농업 성과가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23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3.9.28.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재해방지 사업에 소홀히 하여 농사에 피해를 가중시킨 국가기관의 간부들에서 나타나는 “무질서, 무책임성, 무관심성을 비롯한 폐단들이 고질적으로 내재하고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신랄하게 비판한 대목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북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237/} 결국에는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서 채신의 추동력을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적어도 5개년계획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38/}

2023년 경제분야 12개의 중점 목표 중 첫 번째 순위에 알곡생산이 결정되고, 북한 당국 스스로 말한 것처럼 농촌에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노동력 지원만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밥 먹는” 모든 인민대중의 책임에 돌려졌다.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이후 농사와 농촌 건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노동력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대중운동과 애국운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자원 동원으로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식량을 도시가 징발해가는 내핍의 순환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과 부유하고 발전한 농촌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정책적 함의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농업발전전략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237/} 위의 기사.

^{238/} 위의 기사.

세계의 농업이 공정하고(equitable), 포용적이며(inclusiv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방법을 추구하는 있는 보편적 방향성과 일치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농촌개발보고서 2021」은 오늘날의 식량 시스템이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영양가 있고 저렴한 식단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239/} 따라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의 식량 시스템을 혁신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 혁신은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240/} 하지만 북한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세계의 농업발전 추세를 따라가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선언하고 식량의 ‘안보화’의 길을 가고 있다.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세계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핵무력 강화노선을 더 선명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왔다. 2023년 9월에 개최된 러북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 식량 무상지원을 제안했지만 올해 농사 작황이 괜찮다며 거절했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가 밝힌 바 있다.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 원조 방식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로 읽힌다.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대북지원단체의 대표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패러다임이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며^{241/},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의 본격적

239/ IFAD, *Rural Development Report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rural prosperity* (Rome: IFAD, 2021.), p. 24.

240/ 위의 책, p. 20.

241/ “인도적 대북지원 패러다임 종언... 지속가능 개발협력 추진해야.” 『연합뉴스』, 2023.9.20.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072100504>> (검색일: 2023.10.4.).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남북협력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NGO들로 구성된 유엔 인도 주의 국가팀(HCT)이 발표한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원제: *2020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242/} 식량 및 농업에 대한 대응 전략 목표는 북한의 식량생산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 관행을 활용하여 주식 및 기타 식품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영농물자와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충격에 취약한 지역사회, 농민, 협동농장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의 국제기구들의 향후 대응 전략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그린데탕트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비핵화 진행 단계에 맞춰 추진될 보건의료, 식수와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사업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역시 국제기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선대상과 일치한다는 점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들과 공조하여 어젠다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2021년 6월 유엔에 제출한 VNR에서 농업부문에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우선 계획은 5개년 계획 동안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선 계획은 농업 과학기술 발전이다. 식량자급자족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자생산, 과학농사, 저수확 농지의 수확물 증산, 간석지 및 새 땅 면적 증대, 농업 관개 및 기계화 촉진, 지방경제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로 단

^{242/} Humanitarian Country Team,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OCHA (April 2020).

위당 수확량 증대 및 작물재배 면적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종자 가공 및 품질관리의 산업화, 밀과 보리 등 앞그루 작물 품종 개량, 채소 종류의 다각화, 유기농업의 장려, 채소생산의 산업화 및 고급 재배기술 도입,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미있는 것은 VNR에서 밝힌 농업부문의 계획들이 현재 2021년 12월 말 농촌혁명강령을 채택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과제들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지향하고 있는 농업발전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의 실천 의제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의한 성과를 인정하고,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VNR에서 북한 당국은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NGO와 협력하여 수확 후 손실률 감소, 품종 개선, 영양 개선, 취로사업^{243/} 등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5~2020년 동안 매년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프라 개선과 산림복구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남북협력 논의가 활발했던 사업은 스마트팜 건설, 우량종자 확보, 영농자재(비료, 비닐, 농약 등), 농기계 지원 등이다. 최근 북한이 중평남새온실농장, 연포남새온실농장, 강동온실농장 건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채소 생산의 산업화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개발협력 의제로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43/} 취로사업(food for asset): 현금, 바우처, 식량을 제공해서 식량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장기적인 식량안보 및 회복탄력성을 개선하는 WFP의 주력 사업을 의미

인프라 건설 재원 부족으로 농업부문의 효율적 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농촌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과학농사를 주창하며 일부 본보기 단위에 ICT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농촌 인프라 개발 및 농업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재원 및 기술 부족으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개발 협력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또는 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초 국제 NGO와 유엔기구에 북한 당국은 밀, 보리에 관한 자료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요청과 쌀 수확량 높이는 방법, 빠르게 자라는 종자, 간척지 농업 등에 대한 지식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244/}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보면, 북한이 정책 성과로 선전하는 바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농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농업기술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지식공유사업과 같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 민생개선 측면에서 농업협력 시범사업을 제안할 때 농업생산성 측면에서 농업기술 관련 지식공유사업과 인식제고사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때 기후의존적인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북한과 신뢰를 쌓아온 유엔기구나 국제NGO들과 처음에는 지식공유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분야별 개발협력사업으로 공조의 범위와 아이টে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44/} 최현아, “북한 민생개선을 위한 농업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과 실천 방안,” 통일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발표자료(2023.9.1.).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_____.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올바른 비료사용법』. 전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2022.
-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현대사』. 서울: 웅
진닷컴, 2004.
- 이영훈·최은주·최장호·김두환·김일한.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 제임스 스콧 지음.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서울: 아카넷, 2004.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통일연구원 편.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Bakken, Borge. *The Exemplary Society-Human Improvement, Social
Control, and The Dangers of Modernity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s: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Russian Village After Collectiv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 논문

- 김영훈. “김정일 정부의 농업정책.” 『북한경제리뷰』. 제10권 10호, 2008.
- 김진항. “전략과 정책의 관계.” 『국방과 기술』. 제5권 231호, 1998.
- 박성열·정원희·한지만.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31집 1호, 2022.
- 박희진. “김정은 시대 10대 도시의 개발과 격차(Gap).” 『통일인문학』. 제86집, 2021.
- 변선희. “북한 대흥단군의 감자농업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송현진. “김정은 시대 ‘새 시대 농촌강령’의 등장 배경 및 내용.” 『통일과 평화』, 제14집 2호, 2022.
- 오삼연·박소영. “북한 삼지연시 건설의 특징과 의미.” 『통일인문학』. 제92집, 2022.
- 임수호.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슈브리프』. 제434호, 2023.
- _____.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이슈브리프』. 제382호, 2022.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최대식. “삼지연군 건설사업 리뷰.” 『북한토지주택리뷰』. 제3집 1호, 2019.

3. 북한 자료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김일성저작집 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
으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27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김정일 선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리종팔 외. 『농업협동조합의 정치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박승갑. 『협동농장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실현방도』. 평
양: 농업출판사, 2016.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예술』. 서울: 지평, 198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협동
화 운동의 승리: 개인농 경리로부터 협동 경리로 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8.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 협동
화 운동의 승리(4). 사회주의 문화 농촌의 건설』.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59.
-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년감(1957년판)』. 평양: 조선중앙
통신사. 1957.
- _____. 『조선중앙년감(1958년판)』. 평양: 조선중앙
통신사, 1958.
- _____. 『조선중앙년감(1963년판)』. 평양: 조선중앙
통신사, 1963.
- _____.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평양: 조선중앙
통신사, 1971.
- _____. 『조선중앙년감(1988년판)』. 평양: 조선중앙
통신사, 1988.

- _____. 『조선중앙년감(199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0.
- _____. 『조선중앙년감(1995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 _____. 『조선중앙년감(2002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2.
- 조선화보편집위원회. 『(화보집)산간문화도시 삼지연』. 평양: 외국문출판사, 2020.

엄주복. “지방공업의 특성과 건설원칙.” 『경제연구』. 제4호, 1987.

- 『건축과 건설』.
- 『근로자』.
- 『로동신문』.
- 『우리민족끼리』.
- 『조선신보』.
- 『조선의 오늘』.
- 『조선중앙통신』.

홍원철·오영림 영화문학, 전종팔 연출. <(조선예술영화) 북 받은 대지에서>.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10.

4. 기타 자료

- 『뉴스1』.
- 『데일리NK』.
-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
- 『통일뉴스』.

『한국농정신문』.

『NK경제』.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www.nkstudy.com>.

법무부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nktech.net>>.

북한지역정보넷 <www.cybernk.net>.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통일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unikorea>>.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FAO <www.fao.org>.

NASA Global Climate Change <<https://climate.nasa.gov>>.

United Nations DPR Korea <<https://dprkorea.un.org>>.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23.4.5.; 2023.4.7.,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23.4.12.; 2023.5.19.; 2023.5.31.,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희진. “농촌살림집 건설 현장에 부는 ‘과거의 바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News letter 16호, 2023.7.).

서정배. “과거 북한 식량지원 및 농업협력 사업 경험의 교훈과 새로운 모색.”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3.10.24.).

최현아. “북한 민생개선을 위한 농업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과 실천 방안.” (통일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발표자료, 2023.9.1.).

황진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02, 2022.1.1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IFAD, *Rural Development Report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rural prosperity*, Rome: IFAD, 2021.

Humanitarian Country Team,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OCHA, April 2020.

김필국 CP, 〈통일전망대〉, MBC, 2000.11.4.~방영 중.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 · 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 · 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 ·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 · 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익식조사 2021: 통일 ·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 · 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재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 · 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 · 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 · 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 · 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 · 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 · 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 · 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익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익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 · 러 · 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 · 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 · 옹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